

NORTH KOREA STRATEG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인 쇄 2014년 1월
발 행 2014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754-3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vii
I. 서론	1
II. 선행연구 분석: 가설에 대한 인식유형별	7
1. 미국주도 군사전문가들의 견해	9
2. 국내 학자들의 견해	15
III. 시기별 특성과 양상	37
1.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39
2.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2012년 9월~2013년 1월	44
3. 3차 북핵실험 국면: 2013년 1~2월	55
4. 긴장고도화 국면: 2013년 3월	62
5. 긴장조절 국면: 2013년 4~5월	70
6. 긴장완화 국면: 2013년 6~9월	79
7.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2013년 9~12월	88
IV. 평가와 전망	99
1. 대내 측면	102
2. 대외 측면	116
3. 대남 측면	122
4. 남북관계 측면	132
V.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137
참고문헌	145
부록	14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5

표 목차

Table

〈표 Ⅱ-1〉	김정은 정권 초기 핵심요직 교체현황: 2012년~2013년 6월	· 23
〈표 Ⅲ-1〉	미사일 발사 국면 북한의 주요 조치	45
〈표 Ⅲ-2〉	미사일 발사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46
〈표 Ⅲ-3〉	미사일 발사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49
〈표 Ⅲ-4〉	3차 핵실험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55
〈표 Ⅲ-5〉	3차 핵실험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60
〈표 Ⅲ-6〉	긴장고도화 국면 북한의 주요 조치	63
〈표 Ⅲ-7〉	긴장고도화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64
〈표 Ⅲ-8〉	긴장고도화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68
〈표 Ⅲ-9〉	긴장조절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71
〈표 Ⅲ-10〉	긴장조절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76
〈표 Ⅲ-11〉	긴장완화 국면 북한의 주요 조치	79
〈표 Ⅲ-12〉	긴장완화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80
〈표 Ⅲ-13〉	긴장완화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87
〈표 Ⅲ-14〉	정책조율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89
〈표 Ⅳ-1〉	김정은 정권 2년간 주요 엘리트 변동	104
〈표 Ⅳ-2〉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북한의 군사 전략문화: 메시지와 등장횟수	118

그림 목차 Figure

〈그림 II-1〉 북한의 군사지도 및 지휘체계	19
---------------------------------	----

부록 목차 Table

〈표 1〉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북한당국 행태: 2012년 9월~2013년 1월	151
〈표 2〉 3차 북핵실험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1~2월	163
〈표 3〉 긴장고도화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3월	168
〈표 4〉 긴장조절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4~5월	173
〈표 5〉 긴장완화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6~9월	180
〈표 6〉 정책조율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9~12월	189

요약



2010년 김정은의 후계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 벌어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집권 후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북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이 김정일 시대와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발의 강도가 아주 높아졌고 강온양면 정책전환의 주기가 짧아진 것에 비해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졌다. 이는 북한의 내부 정치변동과 함께 정책결정구조와 대남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연관되어 있다.

누가 또는 어떤 파벌이 독재자 김정은을 움직이고 있는지? 향후 어떤 행보를 둘 것인지? 등 정책결정 시스템 진단과 예측의 어려움이 증대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대북정책까지 그 평가와 대안마련의 복잡성이 증대하였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의 세분화된 평가와 함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시기는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이며 핵심분석 시기와 범주는 2012년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으로부터 촉발되어 2013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의도’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을 세운다.

- 가설 1. 핵국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신흥 핵보유 국가의 전형적 행태’이다.(핵 요인)
- 가설 2. 3대 세습의 수령독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이다.(정권공고화 요인)
- 가설 3. 관료 조직적 특성으로 북한 내 정치파벌들의 권력·이권·영

향력 갈등에서 발생한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관료조직 요인)

가설 4. 경험이 미숙하나 욕구가 강하여 빠른 권력행사를 원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통치자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 행동’이다.(독재자 요인)

가설 5. ‘대외 정책환경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한국·미국에 대한 협상주도권 확보, 남북관계 변화, 중국 견인 및 대북지원 강화 유도 등이다. (대외관계 요인)

각 가설은 독립적이거나 자기 완결적으로 구성되진 못한다. 서로 긴밀히 연계되고 중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 요인분석과 억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학술·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 다섯 가지 가설에 기초해 각각의 배경과 논리를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한다.

II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가설을 기준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와 함께 본 연구과정에서 ‘2013년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의 성격과 의도’에 대해 자문을 구한 북한 정치군사 전문가 7인의 견해를 인식유형별로 분석한다. 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복합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논지들을 다섯 가지 가설을 판단 기준으로 유형화한다.

분석결과, 해외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가설 1, 2, 4, 5에 해당하는 핵, 정권공고화, 독재자, 대외관계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 학자 중 가설 3.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견해를 제시한 연구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핵무기와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미국 학자들에 비해, 북한문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이고 해외에

비해 세부적이고 시계열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가설 1~5 모두에 풍부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전개된 정치군사적 도발-완화의 시기별 특성과 양상을 북한당국의 공식행보·도발 행위자 분석·대북 소식통들의 실태정보에 기초하여, 시기별 특성과 양상을 북한의 대내 정치·군사·경제·사회적 측면과 대외·대남 측면 모두에서 살펴본다.

연구결과,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에 가장 큰 특성은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 강화를 가시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 정권 집권 2년차인 2013년,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수위가 높아지고 강은 양면전술의 정책변화 주기가 더 빨라졌으며, 정치군사적 긴장조절을 어렵게 하는 불안정성이 커진 특징을 보인다.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강화와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국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및 내부 실태와 연동하여,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주요 국면을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으로 2012년 9월~2013년 1월, 3차 북핵실험 국면으로 2013년 1~2월, 긴장고도화 국면으로 2013년 3월, 긴장조절 국면으로 2013년 4~5월, 긴장완화 국면으로 2013년 6~9월,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국면으로 2013년 9월 말~12월까지로 구분하여 그 특성과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앞선 분석에 기초하여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다룬다. 연구결과,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은 북한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며, 가설 2·가설 4·가설 3 등 대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대내 집

권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대외적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가설 1과 가설 5 등 대외요인이 작동했다고 평가한다.

북한체제 내부 측면에서 평가와 전망은 김정은 정권 공고화, 정책요동 속 당-군-내각 충성경쟁, 측근세력 구축, 권력구조 조정과정에서 생존과 이권을 둘러싼 기관본위주의 및 파벌 간 대립, 군사 및 경제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대외 측면에서는 핵국가 인정, 3대 세습 체제 건재 과시, 대미와 대중 협상력 및 견인력 강화, 대북 투자 및 지원 유도를 키워드로 한다. 대남 및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에게 이로운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함께, 특히 군사기술적 부문과 남한의 대북 관여도 및 영향력을 중시한다.

V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대응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환경, 미국의 산적한 국내문제 등에 기초할 때, 북한 내 쿠데타나 시민혁명 또는 역내 전쟁도발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오바마 2기 임기가 끝나는 향후 3년간 미국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나 문제해결 노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 정부의 2014~17년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로서 통일과 북한문제 해결의 중요성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중견국가로서의 힘은 물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서해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적대와 맞대응의 군사력 배치로 한반도에 군사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의도에 따른 새로운 도발 가능성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이 현재화되기 쉬운 한반도 긴장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평화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최소 향후 3~4년간 실행해야 할 균형·진화·통합을 키워드로 한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결합한 중범위 수준의 정책 및 미시적 액션플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북한의 내부정세 변동 및 이와 연관된 대남 신호를 주목해야만 한다. 2013년 12월 말 북한의 대남비방 행보에는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애와 의도가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제의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불안정한 북한권력 변동에 파장을 줄 수 있다면, 향후 북한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남한이 대북 영향력을 확장하여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고 대남 정책결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14년도에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부응하고, 한발 더 나아가 공세적인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 대북정책, 정치군사적 도발, 정책결정, 복잡성

I. 서론



2000년을 전후로 서해 북방한계선(the 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 서북 5개 도서인 서부해역에서 발생한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특히 김정은 후계시절인 2010년 발발한 천안함 폭침(2010.3.26)과 연평도 포격(2010.11.23) 두 사건은 ‘적대와 즉각 대응’의 원리가 21세기 남북에 정착하는 군사적 긴장구조를 만들어냈다.

남북이 서북도서에 핵심 무기를 집결시키며 대결태세를 갖추고, 미중이 2010년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군사훈련을 두고 긴장을 조성시킨 후, 한반도는 서해를 중심으로 무력 갈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곳, 언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되었다.¹

또한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을 기점으로, 2013년 상반기 전개된 북한의 긴장고도화와 21세기 미-중 양강 구도 형성 과정에서 동북아 영역 분쟁을 둘러싼 중-일, 한-일, 한-중 갈등은 한반도 대내외의 정치군사적 긴장구조의 현재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남북관계는 상반기 북한의 대남 강경위협과 중반기의 유화국면, 하반기의 다시 강경국면 등으로 경색과 완화의 반복이었다. 북한은 2013년 신년사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를 의식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월 이후 3차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 및 비핵화선언 무효화, 남북 연락통로 폐쇄, 무력시위 등 대남 도발과 위협을 전 방위적으로 수행하였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최고 존엄’ 모독 등을 문제 삼아 최고사령부

¹ 김중대,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서울: 메디치, 2013), p. 7.

대변인 성명(3.5), 조평통 대변인 성명(3.8) 등을 통해 연일 대남 위협을 하였고, 유일한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전면 철수’와 공단가동 중단(4.9) 및 잠정 폐쇄(5.3)를 결정하였다. 그러다 5월 말 최룡해의 방중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 포괄적 남북 당국자회담 제의(6.6),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7월 초), 이산가족 상봉 합의(8.23) 등 대남 유화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남한 입장에 반발하여,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9.21)하였다. 이후 12월 현재까지 남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선전 및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더불어 NLL과 휴전선의 대남 무력증강, 전쟁위협, 사이버 공격, 탈북자 재입북 유도 등 대남 긴장조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한 본 연구는 한반도 대내외 정세국면에서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김정은 정권을 주목한다. 연구 시기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관통하는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이며, 핵심분석 시기와 범주는 2012년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으로부터 촉발되어 2013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을 세운다.

가설 1. 핵국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신형 핵보유 국가의 전형적 행태’이다.(핵 요인)

가설 2. 3대 세습의 수령독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

의 권력 공고화'이다.(정권공고화 요인)

가설 3. 관료 조직적 특성으로 북한 내 정치파벌들의 권력·이권·영향력 갈등에서 발생한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관료조직 요인)

가설 4. 경험이 미숙하나 욕구가 강하여 빠른 권력행사를 원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통치자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 행동'이다.(독재자 요인)

가설 5. '대외 정책환경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한국·미국에 대한 협상주도권 확보, 남북관계 변화, 중국의 대북지원 강화 유도 등이다.(대외관계 요인)

각 가설은 독립적이거나 자기 완결적으로 구성되진 못한다. 전쟁요인의 복잡성 및 상호작용과 유사하게 각각의 가설 또는 요인들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고 중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 요인 분석과 억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가설의 특성과 주요인을 분류해 내는 것은 학술적 측면뿐 아니라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이 정책 현실적 중요성에 따라 II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가설을 기준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와 본 연구과정에서 '2013년 북한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성격과 의도'에 대해 자문을 구한 몇몇 북한전문가들의²⁾ 견해를 인식유형별로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천안함·연평도

2. 자문받은 북한 정치군사 전문가 7인의 코드와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다. 자문자A: 북한군사전문가, 자문자B: 북한군사전문가, 자문자C: 북한정치전문가, 자문자D: 북한정치전문가, 자문자E: 외무성출신 고위직 탈북민, 자문자F: 지역 당간부 출신 탈북민, 자문자G: 동북아정치전문가.

사건 후 전개된 정치군사적 도발-완화의 시기별 특성과 양상을 북한 당국의 주요 조치·행위, 주요 권력행위자들의 행태, 북한실태 관련 소식통 전언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앞선 분석에 기초하여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다룬다. 크게 대내·대외·대남·남북 관계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대응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가설에 대한 인식유형별



1. 미국주도 군사전문가들의 견해

가. 가설 1, 2 논지: 핵, 정권공고화 요인

먼저 가설 1은 핵국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신흥 핵보유 국가의 전형적 전후 행태’라는 견해이다. 대표적으로 로웰 슈와르츠(Lowell H. Schwartz)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³ 역사적으로 북한과 같은 새로운 핵국가(nuclear states)는 대개 그들의 권력 한도(the limits of their power)를 입증하고, 다른 국제 행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한다. 유사사례는 파키스탄의 경우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도발 상황과 역사적 연구에 기초할 때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핵국가는 새로운 무기능력을 갖춘 만큼 도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행위자들의 반응실험에 따르면 제한적인 공격행동을 보인 사례가 몇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신흥 핵국가의 도발에 대한 반응은 대외적 외교영역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군사적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핵사용이 촉발되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그들의 무력 시도들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최근 행보는 거의 예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슈는 일단 긴장고조가 시작하면, 외부에서 새로운 핵권력을 다룰 때 통제하기가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시설과 정책 선택 관련 실질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군사력 사용과 위기상승 위험을 언제나 피할 순 없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며, 정책적 선택은 상대측 통치자들

³-Lowell H. Schwartz, “Thinking Through Options on North Korea, Christian Science Monitor,” <www.rand.org> May 3, 2013.

(the adversary leaders)의 시각과 의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가설 2, 3대 세습의 수령독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를 의도한 도발이라는 논지이다. 켄 가우스(Ken E. Gause)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미 해군연구소 소속인 그는 최근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에 대해 해외에선 가장 천착한 두 편의 연구보고서를 선보였다.⁴ 김정일 말기부터 한반도 해양위기 고조를 주목한 그는, 긴장조성을 주도하는 북한의 정책결정 이면에 있는 계산법 규명을 시도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래 북한의 긴장조성은 첫째, 자위력 발전, 둘째, 협상 주도권 확보, 셋째, 정권 내부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고 평가한다. 김정은 세습권력이 들어서서는 지도자로서 그의 지위를 견고화하기 위한 것과 외부세계에 김정은 정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도발의 의도와 목적은 대내외 측면 모두에서 김정은이 그의 정책결정 권한을 확장하고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특히 2013년 3~4월 북한의 도발 요인은 정권 내부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북중관계 긴장, 중국 견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힘의 과시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 하에서 도발 계산은 북미관계 재구성이란 궁극적 목적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

4-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CNA <www.cna.org>, July 2013;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CNA Occasional Paper, September 2013).

5-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pp. 1~8.

고 있다며, 핵인정과 경제제재 문제를 둘 다 해결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⁶

북한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에는 일정한 계산법이 있음을 주목한 그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와의 공통점과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김정일 시대 도발의 세 가지 유형은 국가 프로그램의 실험, 비폭력적 과시, 폭력적 공격이며, 각각은 북한 정권이 이루고자하는 일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2009년 경 NLL을 둘러싼 평양의 레토릭과 위협들은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로 부터 남한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정치적 흥정과 긴밀히 연계된 것이다. 한편 2010년 이후 평양의 계산은 3대 세습의 김정은 정권을 세울 필요에 따른 역동성 때문에 변화되었다. 그 결과 폭력적 도발과 그 수위의 극적 증폭이 초래되었다는 해석이다.⁷

그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공개 도발과 비공개 도발의 의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인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으로 북한은 공개와 비공개 도발 둘 다를 수행하였는데, 각 의도(motivations)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명백하게 드러난 공개 도발(overt provocations)의 동기/의도는 새로운 방위시스템 실험으로부터 신흥 지도자 주위에 지지자 구축 등 다양한데, 이 경우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밀적인 비공개 도발(covert provocations)은 대개 전적으로 리더십 역학(leadership dynamics)과 같은 내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에 정당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해당 정권은 도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그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⁶ *Ibid.*, p. 28.

⁷ *Ibid.*, p. 2.

는 것이다.⁸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를 3단계 과정으로 인식하는 그는 권력 공고화 단계와 향후 전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진단 및 예측한다.⁹ 첫째 국면은 2010년 9월 이후 후계자 시절로 세습에 잠재적 반대세력에 맞선 훈련기이다. 둘째 국면은 2013년 초 시작된 권력기반 구축기이다. 김정은 자신의 독립적인 충성세력을 구축하는 시기이다. 후견시스템은 선군과 강성대국의 정책기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국면에서 김정은은 정책결정자로서 그의 독립성을 크게 드러낼 것이다. 그 대표적 양상이 섭정 또는 자문 구조(regent/advisory structure)의 변화이다.

셋째 국면은 김정은이 수령으로써 그의 지위를 완전히 수행하는 시기로 2015년 경 시작될 것이다. 자기주도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정책 형성과 실행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그의 대리통치자 대부분을 주변화할 것이다. 그것은 국면 2에서 드러난 반대(세력)를 격렬하게 자극할 수 있다.

나. 가설 4, 5 논지: 독재자, 대외관계 요인

다음으로 경험과 능력이 미숙함에도 빠른 권력행사를 원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통치자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 행동’이란 가설 4와 연계된 견해이다. 대표적으로 앤드류 스코벨(Andrew

⁸- *Ibid.*, p. 3.

⁹ 보고서에서 그는 현재 김정은이 최종 정책결정자 및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아직 완전히 공고화하지 못했기에, 수령(Supreme Leader)으로서 그의 지위 정통성 및 세습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한편 그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권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장시킬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며, 그것은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관계망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최소 1~2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pp. 1~2.

Scobell)과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¹⁰이다. 먼저 베넷은 평양의 핵과 도발의 목표는 자신들이 강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은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즉, 강함이 아닌 약함의 증거로 약하기 때문에 강함을 과시한다는 논지이다.¹¹

스코벨은 2013년 북한의 긴장고조에 대해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성을 중시한다. 그의 인식과 분석, 그리고 주목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¹² 김정은 정권 도발행위의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젊고 경험이 부족하며 자질과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수령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그 목적은 자신의 측근을 권력 전면에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노회한 민간 및 군부 지도층에게 자신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인식이다.

그의 논지 중 첫째, 북한 정권의 국가안보 쉼법이 워싱턴 및 서울의 계산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둘째, 미국의 합리성에 기반한 ‘거울 영상(mirror image rationality)’ 개념을 재고찰할 것에 대한 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은 만일 다른 국가가 자신과 동일하게 합리주의적 대응법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¹⁰ 베넷은 실패국가로서 북한을 전제한 후 체제 붕괴와 그에 따른 정치군사적 위기 및 인도주의적 재앙을 주목하며 그에 대비한 한미의 준비를 제시한 보고서 발간으로 2013년 하반기 한국에서 유명해진 군사전문가이다.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The RAND Corporation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www.rand.org> 2013. 미국 국무성 펀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사전문 연구소 RAND의 선임연구원인 그는 미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에반 메데이로스과 절친으로 미 국무성의 대북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적 비영리 재단 the 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이 보고서는 2008년 김정일 외병 3개월 후 미국 국방부 연구용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2011년도 김정일 사망 후 탄력을 받아 진행되어, 2013년이 용역보고서 발간시기이기에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 군사조직의 인식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¹¹ Bruce W. Bennett,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 Sign of Weakness, Not Strength," <www.rand.org> February 15, 2013.

¹² Andrew Scobell, "A Delicate Deterrence Dance with North Korea, U.S. News & World Report," <www.rand.org> April 11, 2013.

그 국가를 비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리는 습관이 있다며, 그것은 필요 없는 저항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사한 도발 패턴의 수사와 행동을 한 후, 자제하다가 마침내 외부세계와의 대화에 나섰다며, 미국식 합리주의와는 다른 그들의 논리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시위와 한국에 대한 동맹 확증이 그리 쉽지 않다며, 특히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될 때, 기본적으로 억제 임무/정책은 1958년 냉전 절정기에 알버트 홀스테터(Albert Wohlstetter)의 이론으로 억제를 묘사하기 위해 최초로 쓰여진 ‘테리의 예민한 균형(delicate balance of terror)’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학자 중 가설 3.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견해를 제시한 연구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설 5. ‘대외 정책환경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논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미행정부의 대북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알렉산더 만소로브(Alexandre Mansourov)의 견해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남한 요인을 중시한 그는, 2013년 북한의 도발은 정책결정자들의 대북지원 유도와 남북관계 변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의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¹³ 북한의 대남전략에 1차 요인은 국가전략적이고 경제적인 고려이고 그 다음이 군사안보적 요인이다. 김정은의 계획은 북한의 핵보유와 함께 국가경제 근대화 및 인민생활수준 향상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돌파하고 해외 투자 및 기술을 유인해야만 한다. 평양은 세계 경제에서 서울의 주도적 역할을

¹³-Alexandre Mansourov, “North Korea: Enduring Short-Term Pain for Long-Term Gain,” <<http://38north.org>> July 12, 2013.

활용하길 원한다.

2013년 긴장 최고조 후 개성공단 협상에서 보여 지듯 북한의 남북 관계 전환의 목적은, 첫째, 남한과 그 동맹국이 초래하는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고, 둘째, 남한의 경제·금융 자원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며, 셋째, 김정은이 통일에 대해 진실로 고민하는 지도자임을 증명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군사 동맹의 약화와 함께, 남한을 유인하여 중국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줄이려는 것 등이 평양의 의도라는 주장이다.

2. 국내 학자들의 견해

핵무기와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미국학자들에 비해, 북한 문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이고 해외에 비해 세부적이고 시계열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관련 국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인식유형별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가설 1~5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복합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전문가 견해들을 다섯 가지 가설을 판단 기준으로 유형화한다. 더불어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북한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 조성’의 성격과 의도 등에 대한, 북한 정치군사 전문가 7인의 자문결과도 주요 논지에 따라 가설 유형별로 살펴본다.

가. 가설 1. 신흥 핵보유 국가의 전형적 전후 행태

대표적으로 박형중에 따르면, 2012년 말~2013년 초 북한의 도발이 과거보다 강력하게 진행된 가장 큰 이유를, 핵무기 보유 국가가 초기 주변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강도 높은 분쟁을 야기했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과감한 도발을 해도 상대국이 핵무기 활용 위협 때문에 보복 대응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흥 핵보유 국가는 긴장도 높은 도발을 통해 대외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상대를 위압하여 이후 협상에 주도권을 갖은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¹⁴

이와 연계되어 북한군사 전문가인 자문자A는, 핵보유 수준과 대남 도발 수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시했다. 3차 핵실험 후 북한군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대남도발 위협이 전개되었다. 그 위협은 김정일 생존 시기의 대남 도발 책동과 비교해 수위와 규모뿐만 아니라 배경과 내용면에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규모면에서 기존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함정 기동·미사일 시험발사 등 단편적으로 행해진 위협이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으로 확대되고, 전 포병전력을 동원한 화력시범 및 상륙전 훈련, 공개하지 않던 신무기의 공개, 특수부대의 훈련 공개 등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대남 군사 도발을 핵보유 전후 정권의 행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핵심 배경을 2009년 5월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경험이라고 평가한다. 자문자A는 북한군이 6·25전쟁 이래 한국 함정과 영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¹⁴ 박형중, “북한 정권의 긴장고조 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12, 2013.4.11).

있었던 배경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대응보복 공격이 지역적으로 뿐 아니라 대응 수단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확신한 도발이었다. 둘째, 이 경우 핵보유 상태의 북한군은 비핵보유의 한국군에 대해 과거와 달리 공격적이고 자신감있는 재래식 군사도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다. 셋째, 이러한 배경 하에서 3차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자행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경험처럼, 핵보유로 대남 군사우위를 차지했다는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의 발로로 해석 가능하다.

이 논지는 북한의 대남 도발 행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핵의 열쇠를 가진 권력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다.

나. 가설 2.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

2013년 북한의 긴장조성을 김정은 정권의 특성이기 보다는 김정일 집권시기에도 보여진 그다지 새롭지 않은 북한 정권의 권력 공고화 패턴이라고 파악한 대표적 학자는 이호령이다. 그녀는 2013년 2~3월 북한의 행태를 보면 수사적으로는 공세적 도발태세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 내용으로 보면 1994, 2006, 2009년 상황에서도 보였던 방어태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¹⁵

특히 2013년 초 상황은 2009년 북한 행태와 매우 유사한데, 김정은 후계구축 시기로 2010년 9월 김정은이 공식 국가통수권의 후계로 확정되기까지 내부의 호전성을 최대한 상승하고자 했던 시점의 행위와

¹⁵ 이호령, “북한 도발 위협 가능성 평가와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국방연구원 2013).

비슷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 위기국면을 최대한 권력 안정화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핵실험 이후 대외 제재에 대한 방어태세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대남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¹⁶

한편 군사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가설 2로 분류할 수 있는 정성장과 김동엽의 인식이다. 먼저 정성장에 따르면, 최룡해로 대표되는 인민군 총정치국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후계 수령이 군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2009년~2012년 초까지 총정치국의 제1부국장 김정각과 조직부국장 김원홍이 김정은의 군엘리트 장악을 지원했고, 2012년 4월 이후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를 활용하며 총정치국장으로서 김정은의 군장악을 지원했다. 김정은은 체제에서 총정치국이 군대를 사상조직적으로 통제하며, 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켓 사령부로 공군사령부를 항공·반항공군사령부로 개편하며 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¹⁷

이 논리에 기초할 때, 김정은을 벗어난 군부의 독립적 도발행위는 불가능하기에, 군사적 도발은 김정은 정권 공고화의 일환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제기된다. 북한 군사지도와 지휘체계는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수령의 군대라는 체제 특성에 기인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최근 김정은의 군부인사에 대한 잦은 변동도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하는 총정치국, 정규 군사력을 책임지는 총참모부, 군 경제를 책임지는 인민무력부라는 북한체제와 군 제도의 특성에 맞게, 김정은이 군을 통제하기 용이한 인사들로 배치한 실용적인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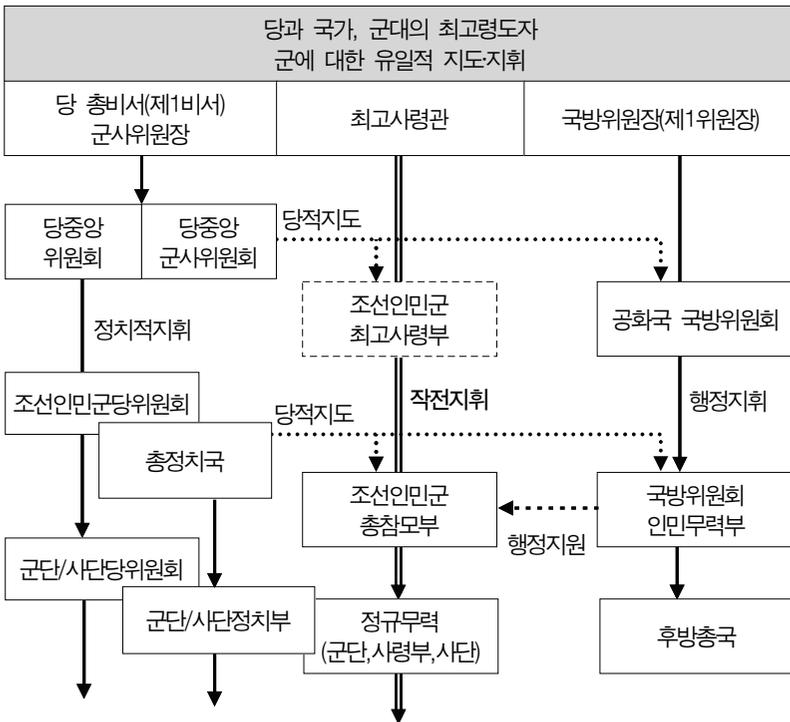
16. 위의 글.

17.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2013), pp. 47~48.

라는 주장이다.¹⁸

이 인식에 기초하여 국방위원회를 가장 상위기구로 상정한 국방부의 북한 군사지휘기구도¹⁹를 비판하며, 재구성한 수령의 군사지도 및 지휘체계는 아래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북한의 군사지도 및 지휘체계



출처: 김동엽,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18. 김동엽,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19.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p. 25.

한편 자문자A는 가설 2 논거에 기초해 가설 4를 연계시키며, 2013년 북한의 대남도발을 ‘김정은의 지도자위치 확립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김정일의 경우,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후 약 1년이 지난 1993년 초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경우, 북한군 모든 무력은 최고사령관 명령지휘체계로 전환되고 집단적으로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김정은의 경우, 김정일의 조기사망에 따라 권력승계가 미완되어 군내 지지세력을 구축해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육해공 3군 합동군사훈련 및 대담한 군사도발 이면에는 군내 김정은 명령지휘체계 확립 의도가 있었다. 이 맥락에서 2013년 대남도발 위협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빚어진 김정은의 군부 내 리더십 구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한다.

2013년 3월 30일 최고사령부 지휘부에서 ‘전략타격 계획서 승인’ 등의 과장된 모습과 실탄사격 훈련 시 참석, 그리고 신무기 공개 등이 김정은의 명령지휘체계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은이 하루빨리 김정일을 대체하고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에 따라 감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지는 리더십 완성도와 대남도발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김정은의 권력이 확립되면 될수록 대남도발 위협이 약화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도 있다.

자문자B는 북한 정권이 김정일 시대에 비대하게 커진 군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향상시키면서, 군부를 장악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대남 긴장조성이 이루어졌다고 진단한다. 주요 근거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연지대 및 군부대 방문을 통한 훈련 지도로 최고지도자 위

상정립이다. 김정은은 권력세습 이후 처음으로 2012년 키 리졸브 기간(3.3) 판문각을 방문해 ‘최대의 격동 상태 유지’를 지시하였다. 그 후 고위인사 및 학생들의 판문각 방문이 활발해졌다. 현영철 총참모장도 2013년 키 리졸브 기간인 3월 8일 판문각을 방문하였다. 2013년에도 김정은은 키 리졸브 기간(3.7)에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주도 인물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동행해 서해 최전방인 장재도와 무도를 2012년에 이어 재차 시찰했다. 그리고 3월 11일 백령도와 불과 11km 떨어져 있는 월내도를 방문하였다.

이 행보는 대내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용기와 자신감, 병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선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군사적 경험이 미비한 김정은은 잦은 군부대 방문과 포사격 지도 등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자신감, 대외적으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2월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는 부대방문을 통한 훈련지도가 두드러졌다. 2월 21일 제526대 연합부대 관하 구분대 공격전술연습 지도, 2월 22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630대 연합부대 비행훈련 지도, 2월 25일 포병화력타격 훈련지도, 3월 12일 월내도 방어대 및 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 구분대 실탄사격 훈련지도, 3월 14일 531군부대 포병들의 실타격 훈련지도, 3월 20일 무인타격기·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지도 등 연합훈련과 포사격 훈련에 지도력을 보였다.

둘째, 잦은 성명발표 및 지침하달, ‘최고 존엄’의 강조이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이 된 후 전연지대를 방문하면서 군에게 “적들이 신성한 우리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

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
 으로 이행” 할 것을 명령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외
 무성 성명·조평통 성명 등을 발표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왔다.

조평통 성명을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무효화와 외무성 성명을 통한
 유엔제재 결의 전면배격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2013년 1월 27일 새벽에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
 회를 진행하며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데 이어, 3월 5일에
 는 최고사령부의 조선정전협정 완전백지화 성명을 통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며…우리 전군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
 입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전군에 하달한 작전계획의 명령하달
 이란, 북한 영토와 영해가 공격당할 경우에 반격을 가하라는 명령이다.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3월 21일에 한미연합훈련은 위협한 핵전쟁소
 동으로 핵으로 위협한다면 그보다 더 강한 핵공격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고, 3월 26일에는 “우리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할 것”이라는 제목의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로켓트 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
 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명발표들과 더불어 또 다른 특징은 ‘최고준엄’의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모든 이슈들을 최고준엄 모
 독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한반도 위기고조, 개성공단 중단, 그리고 이산
 가족 상봉 연기의 일방적 통보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있다. 한편 성명
 발표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지침하달은 전투태세를 격상시키는 듯
 해 보이지만, 발표된 성명의 내용을 보면 과거 내용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군 경험부재 인사 발탁과 잦은 보직 해임 및 강등이다. 북한 군부 주요 인사들의 임명, 제적, 강등조치와 복귀 등도 김정은 정권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이다.

〈표 II-1〉 김정은 정권 초기 핵심요직 교체현황: 2012년~2013년 6월

구분	범위	전체인원	교체인원	교체비율(%)
당	제1비서	1	1	100(신설)
	정치국(후보위원 이상)	35	17	48.6
	중앙군사위원회(위원 이상)	20	5	25
	비서	9	2	22.2
	전문부서장	14	5	35.7
	도당책임비서	12	2	16.6
	소계	91	32	35.2
정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부위원장 이상)	3	0	0
	최고인민회의(전문위원장 이상)	5	1	20
	내각(장관급 이상)	53	23	43.4
	국가체육지도위원장	1	1	100(신설)
	도 인민위원장	12	4	33.3
	소계	74	29	39.2
군	최고사령관	1	1	100
	국방위원회(위원 이상)	12	6	50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부책임자 이상)	13	9	69.2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제1부부장 이상)	4	2	50
	소계	30	18	60
총계		195	79	40.5

2012년 2월 15일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 경력이 없는 박도춘(당 군수담당비서)을 대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군수공업책임 제2경제위원장)을 상장으로 보임하는가 하면, 군 경력이 없는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2012.4)하면서 군부의 이권사업과 외화벌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표 II-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 약 1년 반 동안 당·정·군 주요 보직의 인물변화는 평균 40%가 넘으며, 군 인사변동은 60%를 넘어 섰다. 당·정·군 인사변동 중에서도 군부인사 변동이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

한편 2012년 7월에는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하고,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시키며, 김영철 총정찰국장도 2월 별 넷으로 승진했으나 두 계급 강등되어 별 둘이 되었다가 다시 복권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을 맡은 지 여섯 달밖에 안된 김정각이 해임되고 2012년 12월에 김격식으로 바뀐 뒤 얼마 안 있어 2013년 5월 장정남으로 바뀐 점 등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인사권을 통해 주요 군부인사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열사릉 건립·재건·방문 등을 통한 충성심 고조이다. 2013년 7월 27일 전승절 전까지 열사릉 수리보수와 재건을 독려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 추석(9.19)을 맞아 평양을 비롯한 각지의 열사릉과 열사묘에 각 계층의 참배소식을 전하고, 김정은도 추석을 맞아 평양에 있는 열사릉과 열사묘에 화환을 보낸 것을 홍보했다. 다섯째, ‘선군’과 ‘총대’ 강조로 선군정치를 이어갔다. 조선중앙TV에서 ‘선군’과 ‘총대’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방영이 2011년 120개에서 2012년에는 168개로, 노동신문에서 ‘선군’과 ‘총대’를 언급한 기사수가 2011년 4,200개에서 2012년에는 4,604개로 증가하였다.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김정일 정권 말기 군부의 최고 파워엘리트 3인인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숙청되거나 좌천되었다. 그리고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이들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총정치국장에게도 내각총리처럼 ‘현지료해’를 시작하게 함으로써 최룡해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이는 김정일이 최룡해를 과거 조명록 전 총정치국장처럼 활용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3년 5월 최룡해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그가 김정일의 최측근이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핵심인물임을 알린 것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 보직 인물들 상당수가 총정치국 출신임을 감안해 볼 때 김정은 정권 하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인민무력부장으로 승진했던 김정각은 총정치국 제1부국장직을 수행했었고, 현 철해 총정치국 부국장은 2012년 4월 인민무력부 제1부국장 겸 후방총국장으로 승진해서 이동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군부 엘리트를 장악하는데, 총정치국을 통해 군대를 조직 사상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2013년 북한의 대남도발 의도를 김정은의 정치군사적 리더십 강화와 체제결속으로 인식하는 자문자C의 견해이다. 그는 2013년 북한의 긴장조성 배경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군사적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외요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대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십 과시 및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권력엘리트와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2012년 공식적 권력승계 직후 사실상의 취임사와 같은 연설(4.15)에서

평화와 경제보다 자주와 존엄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이후, 자주권의 상징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에 강력히 맞서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면서 권력승계와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단호하고 압축적이며 핵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재편·강화함으로써 재래식 전력면에서 한미연합전력 또는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는 것이다. 이는 3차 핵실험 성과를²⁰ 기초로 한 핵무력 전력화와 핵무기 중심의 군사력 재편, 핵무력 강화를 위한 수직적 핵확산노력 지속(핵물질 증강, ICBM 개발 등), ‘비교우위론’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핵무기는 전략적 억제 성격이 강한 반면,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실제 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재래식 전력 강화 노력의 둔화나 약화, 이에 대한 투자의 축소를 의미할지는 의문이다.²¹

한편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조급함과 미숙함, 내부 정책조율 메커니즘의 불안정,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분파들 간의 갈등과 함께 국수주의적 보수파들의 지배적 위치고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발적 정책전환이나 자기 과시적 연출 등에서 확인되며, 보다 근본적으로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이 상이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세

20. 국제사회도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21. 이와 관련하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와 군사적 긴장 관계 하에 있던 파키스탄의 경우 1998년 인도의 핵실험에 맞서 핵실험을 단행하여 핵보유를 과시하였으나 2011년 기준 불변가격과 환율(constant 2011 prices and exchange rates)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국방비나, 국내 통화인 루피(rupee)화 기준 국방비 규모는 1999년 이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보면 1998년 핵실험 직후인 1999년에 전년대비 1.0%나 떨어지지만 이미 199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핵무기 보유에 따른 국방비 절감효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milexdata.sipri.org/files/?file= SIPRI+milex+ data+1988-2012+ v2.xlsx](http://milexdata.sipri.org/files/?file=SIPRI+milex+data+1988-2012+v2.xlsx)>.

력/집단의 상충하는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

이해가 상충하는 세력들의 정책 목표 및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조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정책시스템 중간과정에서 정책 변화가 돌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 가설 3.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

대표적으로 이기동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에 당과 군의 이해가 상충하는 기제가 많은데, 2013년 상반기 북한의 도발은 대내외적 이권 및 권력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군부의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정책행태”라는 것이다. 더불어 군사도발의 주된 원인은 군부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최룡해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정은의 정책조정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인식한다.²³

이와 연결된 인식으로 김종대는 서해가 상시적 전쟁발발 위험구역이 된 주요인으로 군대의 조직행태적 특성, 특히 서해에서 북한군의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특성을 지적한다. 조직행태적 관점에서 볼 때, 해상에서 적대국 군대와 군대가 마주하면 조직 속성 때문에 파괴적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이거나 군대조직의 습속이 되어 자율신경계처럼 반응하는 행태라는 인식이다.²⁴

이는 정책결정이론 중 관료조직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특히 위기시기 관료조직은 공공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 보다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조직 규범·절차에 맞는 선택을 함으로 결국 비

22. 장용석,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6자회담: 대내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2013년 11월호 (2013).

23. 이기동,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2013), p. 8; p. 12.

24. 김종대,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p. 7; p. 12.

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힌 자문자 D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정책조정 능력부족이 강경일변도적 긴장조성 조치를 유발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우, 유관부처에서 올라오는 각종 제의서들의 장점을 종합하여 현실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은 유관부처의 제의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제약 속에서 주로 군부의 강경한 제의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김정은 정권 출범과 더불어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급부상하고 그의 새로운 권력기반이 군부라는 점에서 최룡해의 역할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순수 당료출신인 최룡해가 군의 2인자격인 총정치국장에 임명되면서 그가 군부 내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신속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군 정체성을 과시하고 군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제약에 봉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인 최룡해가 군내에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의도와 김정은의 선택적 정책결정이 상호작용하여 2013년 전대미문의 대남 긴장조성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⁵

한편 자문자A는 2013년 3월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군부의 독립

25. 그 외 논거로, 셋째,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국면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볼모로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최룡해 특사의 방중(5.22~24)을 계기로 유화국면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북한이 정책 선택의 양가성을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모든 정책 선택에는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과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개혁개방정책은 경제발전이라는 이익과 동시에 체제이완이라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북한은 김정일 정권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익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는 가설 5와 연관된 논거이다.

성 확립과정의 결과'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 북한군의 위협 또한 군부의 독립성/자율성 확대과정의 결과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다. 즉, 1990년대 중반 대남도발 위협, 미사일 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북한 군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했다면, 2013년 3월 긴장고조 역시 군부의 독립성 확립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정책결정 시스템에서 당과 군의 결정영역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제 하에서만 군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남도발 위협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은 군의 독립성 또는 권력 영향력이 당의 그것에 비해 약화될 때, 군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활용하는 카드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내 당의 결정 권한이 커지고 군의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최고존엄을 무시한 발언을 했다거나 전작권 전환 연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 군부는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남 긴장조성 또는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가설 4.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 행동

대표적으로 고재홍에 따르면,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긴장고조 조치는 김정은 주도 군엘리트 구성이 완성된 후 시작되었다. 이들은 김정일 시대 군엘리트와 비교하면 실력이 부족한 2류 인사들로, 김정일 정권에선 결코 군 주요인사가 될 수 없었던 인물들이라는 평가이다.²⁶ 도발의 의도는 김정은 자신의 위

상 제고로, “현실 판단의 오류와 정치적 퇴로가 없는 무모한 작금의 북한 대남위협 행태는 김정일과 비교해 김정은의 개인적 성격과 능력 미달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²⁷

정성장이나 김동엽과 달리 고재홍은 김정은 정권의 군 지도체계와 방식이 김정은 주도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매 현안에 대한 당·정·군 세력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군 주도세력으로서의 부상을 꾀하는 신진 군부·군에 대한 당적통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동당·김정일을 대체하여 절대권력자가 되고픈 김정은 등 3자 간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인식한다.²⁸

특히 2012~3년 보여준 김정은의 군지도 양상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에 의존, 군 인사에서 서열·계급 무시, 잦은 인사교체 등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김정은의 과시적이고 돌출적인 통치 양태를 지적한다. 김정은 정권의 군부는 해외경험이 약한 국내파와 전쟁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충성을 중시하기에 김정은 존엄모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²⁹

이 견해에 기초할 때, 김정은의 군부측근은 경험이 미천한 것에 비해 김정은에게 충성하려는 행태를 크게 보이고 국내 권력투쟁에 집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특성이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행동과

26. 북한군 중 군기가 센 부대는 백령도 앞 평양을 방어하는 서남지역 부대와 원산·함흥지역 부대이며, 전방 중 5군단이 지형적으로 보급 및 사기가 약하고, 후방군 중 가장 군기나 긴장도가 약한 곳은 평북 염주지역 8군단 및 북중 국경경비부대 등이라고 한다.

27. 고재홍, “김정은체제 하 북한군부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5.31)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nk&boardId=3155693dc3a605a4fb9343b1&pkey=2>.

28. 고재홍, “김정은 정권의 軍 지도방식의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10.31)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nk&boardId=b2196b49919cc4d8da7be7f6&pkey=2>.

29. 위의 글.

맞물려 북한 군대의 불만과 군사정책 결정의 불안정성이 증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된 견해로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민들의 진단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문자E는 2013년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을 ‘미숙한 김정은의 과시욕’으로 해석한다.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국제사회에 김정은 체제가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약자의 허세’라고 평가한다. 김정은의 미천한 경륜과 자질, 출신과 정통성의 한계 등으로 후계자 내정 직후부터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폄훼와 조롱, 과소평가에 직면하였다. 이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강행, 대남 군사도발과 협박 등으로 외부세계에 김정은 정권을 ‘우습게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둘째, 대미 강경대응으로 미국의 태도변화 등 굴복 유도, 김정은의 치적 확보와 위상제고 등 정치적 효과 및 경제적 실익 등 일석이조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종화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대미 핵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라는 국내외의 여론압박에 직면하게 하여, 대북 핵협상과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타산한 것이다.

셋째, 김정은 세습체제에 대한 군부와 권력층,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지도자상 과시를 통해 이들의 충성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김정일의 급사로 어린 나이에 권좌에 오른 김정은에 대한 권력층과 주민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장래에 대한 우려와 불신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미·대남 강경대응 이후 이와 같은 우려와 불신이 상당부분 희석된 것으로 평가한다.

넷째, 그러나 김정은 지도자상 확립차원에서 수행된 북한의 강경일변도 대외전략은, 그 효력이 급격히 퇴색하여 날이 갈수록 부작용이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격화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2중 3중의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였고, 경제와 주민생활의 조속한 개선으로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을 이루려던 북한의 전략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2013년 하반기부터 최룡해 방중, 6자회담 복귀의사 표명, 남북당국자 대화제기 등 훼손된 대외·대남관계 복원을 시도했으나,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투적 협상전략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결국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 변화 모색, 장성택 숙청 등 정책 및 권력 갈등, 체제불안정 등이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당간부 출신 최근 탈북민인 자문자F 또한 2013년 대남 도발을 김정은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돌출행위로 평가한다.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격적 리더십 취약이다. 수령체제 특성으로 명분있는 정치 제도적 지위는 가졌으나, 어리고 일천한 경륜에 따른 자신감 부족 등이 돌출적 행동을 초래했다. 둘째, 높고 비대한 기득권과 일반 주민에게 미숙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시적 행동이다. 셋째, 김정일이 물려준 핵무력을 기반으로 핵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담력과 기질을 과시한 것이다.

넷째, 단기 속성으로 성과를 보이려 하는 김정은의 조급증이다. 다섯째, 자신의 취향과 욕구에 따라 기분에 치우친 김정은의 충동적 행태이다. 여섯째, 방침·지시 번복과 현실인식 부재에서 기인한 허황된 발상의 결과이다. 일곱째, 미천한 경험과 경륜으로 인해 ‘간부들이 자

신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돌출적이고 과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여덟째, '우리(북한)가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한다고 하는 등 자기중심적인 정세관에 따라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아홉째, 이러한 김정은의 행태는 인성 형성기 북한에서 정규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조기유학과 장기 해외체류 생활을 통해 북한 정책 결정과 남북한 관계 조절의 능력을 키우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열 번째, 통치 2년차인 2013년에 김정은의 역량부족이 가시화되어 대내외 정책의 혼선과 과열이 발생하고, 핵심 권력층의 경쟁·갈등의 긴장도가 높아졌다. 더욱이 장성택의 조기 숙청은 정치정국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지도자 개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이나 도발 행위를 진단하는 것으로, 군부파시즘이나 개인독재 정권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접근법이다.

마. 가설 5. 대외 정책환경 변화 유도: 협상주도권 확보, 남북관계 변화, 지원강화 유도 등

권양주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협상주도권을 확보하여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이를 기점으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 의도에 따라 대남 선강후온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김정은 정권이 2013년 상반기 모든 강경수단을 다 동원해 전쟁직전의 긴장을 조성한 것은, 주변 상대국들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요구를 들어주는 대북화해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도한 것이라는 인식이다.³⁰

30. 권양주, "북한의 회담전략과 의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국방연구원, 2013).

이는 김정은 단독결정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북한에서 작동함을 암시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합리적 구조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며, 이 경우 대북정세 예측력은 이전보다 높아지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본다.³¹

한편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춘 김연철은 북한의 불규칙한 대남정책 결정요인 중 대내 관료정치 변수를 주목한다. 군부-대남부서-경제부처 간 부처별로 전문적 정책판단과 관계없이 충성경쟁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목한 것이다. 대외정책과 대남정책 간 관계에선 대미정책 → 북중관계 → 남북관계가 중요하며, 대남정책의 경우 남북관계의 영향력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북일관계와 남북관계 악화로 남방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이 정세변화로 북한이 몇 년 동안 북방정책을 추진한 결과, 북중관계가 가장 중요한 외교가 되었다고 평가한다.³²

가설 5와 관련해 자문자G는 김정은 정권의 긴장조성은 동북아 입지 강화와 군사강국 마무리, 그리고 경제강국 출발을 위해서라고 인식한다. 주요 논지를 살펴보면 먼저, 김정은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대량살상무기 시험에 매달린 것은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기에 ‘군사강국’의 꿈을 달성하고자 했으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늦춰진 데 따른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김정일이 생존 시 로켓의 궤도 진입성공과 3차 핵실험을 완료하여 이른바 ‘군사강국’을 건설한 뒤, 군사력을 토대로 김정은에게 권력을 양도하고자 했으나 불발되면서 긴장이 조성된 것으로 본다.

31. 위의 글.

32. 김연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경협정책: 구조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2010), pp. 37~39.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권력승계를 마친 뒤 김정은 시대에는 인민생활 향상을 꾀하려 했으나,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군사강국 과제를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도발이³³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담론구조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김정은 체제는 선대에 만들어진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의 토대 위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강국'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하고 일정한 핵무기 능력을 갖춘 이상, 대미·대남 협상에 따라 핵무력 강화조치를 단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실상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란 논리로 귀결된다.³⁴

그의 견해에서 주목할 점은 동북아 지역 세력구조 요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모험주의 행동 때문에 동북아에 5:1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가장 우려하기에,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라도 역내 세력균형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동북아 구조는 냉전시대와 같은 3:3구도이다.

한편 2013년 초~4월 말까지 북한에게 불리한 5:1구도가 형성됐으

33. 미국의 확장억제력 시위에 대해 핵전쟁 불사 표명 등 강력한 맞대응과 핵무기 능력 외에도 사용의지가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보유 핵무기의 억제력을 과시하고자하는 시도 등을 논거로 든다.

34. 그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중 경제건설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NPT 밖에 있지만 유엔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한편, 인민생활 향상을 표방하며 내자동원(內資動員) 극대화 외자유치를 통해 기존 4개 특구 외 14개 개발구를 발표하면서 경제강국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 자산 중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30억 달러 전후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주목한다. 또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조치 및 개발구 사업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별한 대내외 위협이 제기되지 않는 한 2014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미·중 갈등과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리의 입장차이로 3:3구도 형성 조짐이 보인다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의미하는 5:1구도가 형성되면 대남·대미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3:3구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북한이 기대하는 외자유치가 대북제재로 부진해져 개발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자해 공갈성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남한 정부가 5·24 조치 지속적으로 남북경협 부진, 금강산관광 미재개 등 소극적 태도를 지속할 경우, 북한은 남측 인력의 입출경 제한이나 대남 군사도발 등으로 대남압박을 가해 남북관계를 파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또한 북한이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실리를 위해 6자회담 목표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의 포기임을 재확인하고, 회담기간 중 추가핵실험과 미사일발사의 유예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이 6자회담 기간 중 유엔 및 개별국들의 대북제재 유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노골적인 핵무력 시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미사일 지휘통제시스템 운용테스트, 우라늄농축, 그리고 경수로건설을 지속할 것이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내세워 우주발사체 추진 등 장기 국가프로젝트는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한다.

Ⅲ. 시기별 특성과 양상



1.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1970년대 이래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과 긴장 완화라는 강은 양면책은 전통적인 대남 전술이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와 함께 그 특성 및 양상이 변화를 보였다. 남한의 이명박정부 집권과 금강산관광 시 남한 민간인 저격사건,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맞물려, 5·24 조치 등 대북정책을 적대시 정책이라며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정치군사적 긴장을 높이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도발의 강도가 높아졌고, 강은 정책전환 주기가 아주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북한은 2011년 들어서도 정치군사적 도발위협과 대화촉구를 제기하는 등 강은 교차전술을 사용하였다. 2011년 1월 신년공동사설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등으로 남북대화 제안 →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공개서한 통해 남북 간 긴장국면 완화위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 → 2월 예비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기존 강경 입장을 반복하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 3월 23일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날리기에 ‘조준 격파사격’을 하겠다며 위협하였다.

6월 들어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을 공개하면서 남한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8~9월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UFG연습 중단, 통일부장관 해임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한국군의 해상활동과 대북전단 살포 풍선날리기에 대해 전쟁 행위라 비난하며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였다. 이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 남한 정부의 조문 제한을 근거로 북한 전역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며 대남 비방을 하였다.³⁵

35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국방부, 2012), pp. 22~23.

2012년에는 1월에만도 400여 회 대남 비방을 하였고 3월에는 한국 군부대의 대적관(對敵觀) 구호와 한미합동훈련을 비난하였다. 4월에는 총선과 연계하여 한국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등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하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후 4월 18일 최고사령부 명의로, 한국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서울시내 정부기관 및 언론사 등을 공격하겠다고 위협수위를 높였다. 그리고 4월 23일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와 6월 4일 총참모부 공개 통첩장을 통해 대남 군사 위협을 가하는 등, 수사적이고 담론적인 행태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였다.³⁶

서해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에 가장 큰 특성은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가시화한 것이다. 주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사망이후 2·29 합의로 북미 대화의 끈을 이어가던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강행으로 2·29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성공 및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중화를 선언했다.

둘째, 2013년 3월에는 불능화된 5MW 원자로 재가동을 통해 플루토늄 양 증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한반도 위기를 높이었다. 즉, 핵능력의 소형화, 다중화, 대량화 추구로 핵위협 현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체제유지의 최소비용이자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률’과 ‘우주개발법’ 의안을 논의하고 채택하였다. 자위적 핵보유국 법안은 핵능력과 사용·관리 전반에 대

36 위의 책, p. 23.

한 내용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항으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주개발법에서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우주개발권리를 행사해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향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지속될 것임을 추론하게 하였다.

넷째, 2012년 4월 태양절과 국가창건일인 9·9절, 그리고 2013년 7월 전승절에서 보여준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통해, 견인포·방사포·장갑차 등 각종 무기와 함께 그동안 시험 발사를 해왔던 무인타격기 등 300여종의 군사장비를 공개했다. 그리고 KN-08 추정 미사일과 핵배낭을 등장시킴으로써 군사력을 과시했다. 또한 꾸준한 단거리 미사일 성능개발과 대구경 방사포 개발을 통해 남한 군력의 취약성을 노리는 전력을 증대하고 있다.³⁷

다섯째, 사이버테러 위협 및 GPS 교란 등 비(非)물리적 공격 증대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23일 전례 없는 도발을 예고했다.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 방법으로...도발근원들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라는 북한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이다. ‘도발수단’과 ‘짧은 시간’을 강조한 점에서 알 수 있

37. 북한 군사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스킨나 단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대외적으로 시위성을 가지는 효과와 더불어 성량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13년 5월 18~20일 3일 연속 진행된 KN-02 개량형(160~180km) 혹은 대구경 방사포로 간주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주목해야 할 점은 성량개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밝힌다. 현재 배치된 북한 방사포는 107, 122, 240mm로 이중 240mm가 사거리가 가장 긴 67km인데, 이번 시험 발사한 300mm 방사포 경우는 150km이상으로 향후 실전 배치될 경우, 기존 장사정포의 위협 사거리가 경기북부에서 경기남부까지 확장되는 것이며 북한 공격에 대한 수도권의 취약성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듯이 사이버테러와 GPS 교란 등을 증대시키고 있다.³⁸

사이버 위협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정도가 고도화될수록 피해규모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은 정보화 수준이 높은 한국사회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버 무기를 대량살상무기 못지않은 전략무기로 육성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사건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은하3-2호기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87호(1.23) 및 2094호(3.8)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에 대응하여,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1.23)한 후, 3차 핵실험을 단행(2.12)하였다.

이어 북한 조평통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성명(3.8) 및 외무성의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주장(3.9)이 있었다. 그리고 한-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서 B-52전략폭격기와 B-2스텔스전투기 투입에 반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한반도에 (B-52 전략폭격기가) 다시 출격한

38. 군사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2009년 7월 7일 북한은 세계 61개국 435대의 서버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단행하여 청와대와 국회, 미국 백악관 등의 웹사이트를 다운시켰다. 2011년에도 해외 70개국 746대 서버를 이용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사, 금융기관 등 국내 주요 웹사이트 40여 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2013년 3월 20일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도 사이버 공격을 통해 신한은행,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금융권 전산망을 동시에 마비시켰다. 이후 3월 26일에는 전국 32개 지자체 및 YTN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증대추세에 있다. 이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사이버 전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오고, 2010년에는 정찰총국 예하 사이버 부대인 121소를 121국(사이버전지도국)으로 승격시키고 소속병력도 기존 5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증대시키면서, 이들의 능력을 증대시켜 온 결과라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 받을 만큼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실시할 것”(3.19)이라고 하였고, 북한 최고 사령부 대변인은 키 리졸브 훈련 착수에 대해 ‘미국의 핵위협에 상응한 군사행동’임을 강조(3.21)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 명의로, ‘임의의 시각 미 본토 등 타격을 위한 사격 대기’ 지시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4.30)하였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속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함으로 집권 2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윤곽을 드러내었다. 김정은 주재의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3.31)하였고, 김정은 참석 하 12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 지위공고 법’ 등을 채택(4.1)하였다. 이어 4월 30일 독수리연습이 끝난 후, 중국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파견해 북·중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6자회담 복귀의사 표명(5.22~24) 및 김계관 제1부상의 방중으로 북·중 전략대화를 실시(6.18~22)하였다.

이를 전후해 일본측 이이지마 내각참여의 방북허용(5.14~17)에 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제의(6.6), 대미 고위급대화 제의(6.16) 등 일련의 평화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북한은 B-52전략폭격기 출격 등을 명분으로 킹 미국인권특사의 방북을 불허(8.31)하였고,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이틀 앞두고 전격적 행사거부를 남측에 통보(9.21)하였다.

전체적으로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 정권 집권 2년차인 2013년,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수위가 높아지고 강은 양면전술의 정책변화 주기가 더 빨라졌으며, 정치군사적 긴장조절을 어렵게 하는 불안정성이 커진 특징을 보인다.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강화와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 국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및

내부 실태와 연동하여,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주요 국면을 시기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범주화해 보면, 첫째,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으로 2012년 9월~2013년 1월이다. 둘째, 3차 북핵실험 국면으로 2013년 1~2월이다. 셋째, 긴장고도화 국면으로 2013년 3월이다. 넷째, 긴장조절 국면으로 2013년 4~5월이다. 다섯째, 긴장완화 국면으로 2013년 6~9월이다. 여섯째,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국면으로 2013년 9월 말~12월까지이다. 다음에서는 각 국면별 특성과 양상을 살펴본다.

2.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2012년 9월~2013년 1월

이 시기는 2012년 9월 22일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서해에서의 어로작업 갈등시 남측의 경고사격을 거론하며 강력한 타격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시작되어, 2013년 1월 23일 북한 외무성 명의로 미사일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강경대응을 선언한 시기까지이다.(부록 <표 1>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북한 당국 행태: 2012년 9월~2013년 1월 참조)

2012년 10월 9일 북한이 국방위 대변인 성명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비난하며 일본·괌·미국 본토 또한 명중타격권에 있다고 위협하였고,³⁹ 12월 12일 광명성 3호 발사이후 북한이 자신의 과학기술능력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대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북한의 주요 조치와 현지도 등 김정은의 주요 행보를 보면 <표 III-1> 및 <표 III-2>와 같다.

39.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9일.

〈표 Ⅲ-1〉 미사일 발사 국면 북한의 주요 조치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2.1	대내	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자체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를 운반로켓트 ‘은하-3호’로 평북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2.10~22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발사계획을 공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일
2012. 12.9. ~13	대내	-	‘광명성-3호 2호기’와 관련하여 발사시기 연장, 발사, 위성 궤도 진입, 김정은 발사 참관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9~13일
2013. 1.9	대외	-	북한과 중국 정부가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를 1.9일 평양에서 진행하고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서명에 조인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9일
2013. 1.23	대외	외무성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3일

이 시기 북한의 정책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휴전선 근무 병사들의 연이은 남한 귀순 이후 ‘배신자 색출’ 구호와 함께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군 정보기관인 보위사령부가 북중연선 담당 국경경비대를 대상으로 집중 검열을 하였다.⁴⁰ 또한 중국에 출장차 나온 북한 인사들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사람들을 통해 김정은 제1비서가 탈북자 포용정책을 펼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렸다.⁴¹

40. 김광진, “보위사령부가 보위부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데일리NK』, 2012년 11월 6일.

41. 김준호, “북 인사들 “김정은은 탈북자 포용할 것” 흘러.”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11월 6일.

〈표 Ⅲ-2〉 미사일 발사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1.29 ~30	대외	당	中 공산당대표단(단장: 리젠귀 당 정치국 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北 노동당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김정은을 접견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9~ 30일
2012. 12.9. 13	대내	-	'광명성-3호 2호기'와 관련하여 발사시기 연장, 발사, 위성 궤도 진입, 김정은 발사 참관 등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9~ 13일
2012. 12.24	대내	김정은	12월 24일 0시에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1돌을 맞이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4일
2012. 12.30	대내	-	김정은 최고사령관 1돌 계기 중앙보고대회를 개최	『로동신문』, 2012년 12월 30일

한편 우선 민생을 챙기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군량미 확보를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⁴²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즉시 단속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했다. 11월 하순 평양에서 전국 단위 검찰, 보안 부분 관련 대회를 열고 불순분자 색출 강화지침을 내렸다. 11월 23일 한국의 파출소장 모임에 해당하는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했고, 26일에는 전국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지역에서는 연말 '방법 실적경쟁'을 대대적으로 벌였다.⁴³

42. 김준호, "북, 내년도 군량미 사정 심각할 듯,"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12월 20일.

43.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법적 갈밭을 예리하게 세워 적대분자들을 모조리 숙청할 데 대한 김정은 원수님의 방침을 철저히 관찰한다"고 결의했다. 최송민, "악질 '오빠' 시가 떨고 있다...법관 살해 빈발," 『데일리NK』, 2012년 12월 21일.

이어 김정일 사망 1주년인 12월 17일 대규모 추모행사를 준비하면서,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따라 11월부터 일반 주민들의 사사(私事·친인척 방문) 중국 방문을 금지시켰고,⁴⁴ 중국 각지에 출장 중인 북한관료들에게 12월 15일까지 전원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⁴⁵ 중국 내 유학생들에게도 금주(禁酒)를 지시하는 등 생활통제를 강화했다.⁴⁶ 북중무역을 사실상 중단시켰으며,⁴⁷ 무역관리들을 일시적으로 귀국시키고 세관까지 일시 중단시켰다.⁴⁸

12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말썽 피우지 말고 조직생활에 충실하라’는 포치(지시)가 있었고,⁴⁹ 12월 10~18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선포하며 술, 유희 등 오락을 모두 금지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북한당국은 ‘전민의 눈물과 추모 열기로 김정일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선전구호를 제시하고 주민들의 추모사업을 적극 독려했다.⁵⁰ 더불어 주민들의 외부 라디오방송 수신을 막기 위한 방해전파를 대폭 강화했다.⁵¹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일환인 금수산태양궁전 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마련을 위해 주민뿐 아니라 군인들에게까지 충성자금 헌납 운동을 벌였다.⁵² 또한 김정일이 보위기관의 충성심 고취를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이 그려진 배지를 제작해 국가보위부 고위간부들에게 우선 배포했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 쌍상(雙像)

44. 이상용, “北, 김정일 추모행사 앞두고 中방문 금지령,” 『데일리NK』, 2012년 11월 27일.

45. 김준호, “북, 김정일 사망 1주년 대규모 행사 준비,”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11월 26일.

46. 이상용, “北, 유학생에 애도기간 금주·외출금지 지시,” 『데일리NK』, 2012년 12월 16일.

47. 이상용, “애도기간 국영상점 물건 넘치는데 시장 썰렁,” 『데일리NK』, 2012년 12월 7일.

48. 이상용, “평양 시장에 美 달러화 유통량 크게 늘었다,” 『데일리NK』, 2013년 1월 4일.

49. 강미진, “北, 미사일 발사로 ‘애도 분위기’ 고조시킬 듯,” 『데일리NK』, 2012년 12월 3일.

50. 김광진, “김정일 애도기간 7-18일 지정…유희·술 금지,” 『데일리NK』, 2012년 12월 7일.

51. 김준호, “북, 외부 라디오 방해전파 대폭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12월 17일.

52. 김광진, “금수산궁전 공원화에 충성자금 헌납 강요,” 『데일리NK』, 2012년 12월 11일.

배지를 착용해왔는데,⁵³ 이 시기부터 보위기관을 중심으로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2일 미사일 발사 후 북한당국은 각 단위에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강연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결의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⁵⁴ 전국적인 축하 행사와 관련 기술진에 대한 영웅칭호 수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공업 분야에서도 기술현대화로 인민소비품을 양산하겠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했다.⁵⁵ 특히 선전매체와 각 사회 단위의 ‘미사일 발사 성공기념 강연회’ 등을 통해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휘해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시켰다는 점을 부각시켰다.⁵⁶

김정일 사망 1주기 애도, 미사일 발사 축하, 김정일의 모친인 김정숙 생일 9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주민들을 연일 동원하면서 24일에 각급 생산기관에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⁵⁷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광명성3호 발사를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다. 북한은 로켓발사 성공을 경제분야 등 전 사회적인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선전하면서 한 달 넘게 축하 방송과 내부 강연 등을 이어갔다.⁵⁸

53. 이상용, “김정은 배지 제작해 보위부 간부에 배포,” 『데일리NK』, 2012년 11월 8일.

54. 김광진, “北 발사 성공에 잔치 분위기…비용은 침묵,” 『데일리NK』, 2012년 12월 13일.

55. 이상용, “北 미사일 성공에 흥분 “뒤편 최고 만들겠다,” 『데일리NK』, 2012년 12월 21일.

56. 이상용, “北, 김정은 발사구령에 버튼 눌러 성공,” 『데일리NK』, 2012년 12월 14일.

57. 강미진, “12월 각종행사에 北주민 강제동원돼 불만 고조,” 『데일리NK』, 2012년 12월 24일.

58. 당시 북한 내부소식통은 “이곳 당 고위간부들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에 대해 ‘격동적인 충격을 준 최대 경사’라는 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군님(김정일) 애도 기간에도 승업한 추모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미사일 축하 열기가 난무했다”고 한다. 최승민, “우주강국 됐는데 왜 밤에 전깃불도 없나?” 『데일리NK』, 2013년 1월 4일.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한 이 시기 특성은 김정일 유훈통치를 넘어서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 구축이 전 방위적으로 본격화된 것이다. 이와 연동되어 북한의 대남 및 대외 도발이 아래 표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표 Ⅲ-3〉 미사일 발사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9.22	대남	인민군 서남전선 사령부 명의 보도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거론하며, 이는 다른 나라 어선들의 어로작업을 빌미로 한 군사적 도발로, 강력한 타격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2일
2012. 9.23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국군의 NLL을 침범한 北 어선에 경고사격 되거 조치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3일
2012. 9.27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7일
2012. 9.28	대외	외무성 대변인	미얀마에 북한과 관계단절 압박과 관련 미국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8일
2012. 9.29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문답	NLL 관련 한국 정부 및 주요 인사 입장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9일
2012. 10.4	대남	6·15선언 실천 남·북· 해외 위원 회 호소문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6·15, 10·4 선언 이행을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4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0.9	대외	국방위 대변인 성명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비난하여 일본, 괌, 미국 본토도 명중타격권에 있다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9일
2012. 10.10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비난하면서 ‘우리도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0일
2012. 10.10	대외	외무성 대변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미국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0일
2012. 10.12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이명박 대통령의 “적의 도발 억제”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2일
2012. 10.18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중복세력실체 표준교안” 배포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8일
2012. 10.19	대남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사령부 공개 통고장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 “조준격파”, “군사적 타격” 등으로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9일
2012. 10.20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시 NLL 고수발언을 비난하며 NLL을 불법 유령선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0일
2012. 10.20	대외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시 NLL 고수발언을 비난하고 NLL을 불법 유령선이라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0일
2012. 10.25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한미일 고위급협약에 대해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책동”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5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0.25	대외	외무성 대변인	美 국무성 대북정책 특별대 표의 대북관련 발언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5일
2012. 10.27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한미의 “북한 도발 대응태 세”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7일
2012. 11.2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남한이 “북풍조작책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일
2012. 11.3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새누리당의 국민대통합을 ‘보수대연합’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3일
2012. 11.8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통 일분야 공약(11.5발표)에 대 해 “전면대결공약, 전쟁공 약”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8일
2012. 11.1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의 “北 대선개입” 발언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16일
2012. 11.17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한국의 연평도 포격 2주년 행사 관련, “연평도 참패를 만회하고 대결의식을 고취 하여 보수정권을 연장하려 는 발악”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17일
2012. 11.22	대남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지도국 대변인 중통문답	한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 중단 촉구’ 관련,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며, 관광재개를 위해서도 대결 광신자들의 재집권을 허용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2일
2012. 11.24	대남	조선중앙 통신 보도	통일부 대변인의 금강산관 광 관련 발표를 비난하고 관 광중단은 이명박정부의 책 임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4일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1.28	대남	로동신문 보도	한국의 '北 대선개입' 지적을 비난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6·15, 10·4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관련 입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	『로동신문』, 2012년 11월 28일
2012. 11.28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 문답	유엔 북한 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사회주의제도를 어찌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정치 모략 선전물'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8일
2012. 12.4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독도 봉우리의 일본식 작명 검토'에 대해 '용납 못할 주권침해행위'라고 일본정부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4일
2012. 12.6	대남	조평통 서거국 보도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반공화국 국제공조를 실현해보려는 흉책'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6일
2012. 12.14	대남	적십자회 중앙위 상보	한국 정부가 '집권기간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파탄시켰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4일
2012. 12.14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박근혜 후보의 최근 동향 및 北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 ('도발에는 제재해야')에 대해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최후발악'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4일
2012. 12.18	대외	-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열린 한-미군 모의훈련에 대해 '미국의 변함없는 북한 적대시 정책과 핵선제 공격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8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2.21	대남	조선신보 기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질의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1일
2012. 12.25	대외	-	美 국가정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5일
2012. 12.27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2012국방백서의 북방한계선 내용 관련 ‘용납 못할 도발, 평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8일
2012. 12.31	대외	-	일본의 이동식 조기경계 레이더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31일
2013. 1.3	대남	조평통 대변인 성명	대통령의 NLL 고수 발언에 대해 ‘반통일 대결세력’으로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3일
2013. 1.3	대외	-	‘일본의 앞날은 과거청산에 달려있다’며 남경대학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3일
2013. 1.5	대남	민화협 대변인	대통령의 NLL 고수 및 주요 인사 발언에 대해 ‘대결정책을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려는 위험한 심보’라고 선동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5일
2013. 1.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외교안보수석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이○○ 패당의 체면을 세우고 새 집권세력에게 몫을 박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6일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14. ~15	대남	로동신문 기사	이명박정부의 국정성과보고서 발간 관련 ‘현실을 가리고 체제통일을 실현하려는 망동’, ‘남북관계를 파국상태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비난	『로동신문』, 2013년 1월 14~15일
2013. 1.14	대남	조선중앙통신 논평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추진 동향 관련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고착시키는 대결악법’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2013. 1.14	대외	외무성 비망록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비망록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2013. 1.17	대외	조선중앙통신 논평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7일

이 시기 대남 긴장조성의 주요 행위자로서 당·군·내각·조평통·김정은의 행보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격적 미사일 발사전후 국면에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조선인민군 등 각종 군기관에서의 발표나 중요 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과 당료를 중심으로 한 당주도 정책결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3차 북핵실험 국면: 2013년 1~2월

이 시기는 2013년 1월 24일 북한 중앙방송을 통한 재입북 탈북자 부부의 남한비방 기자회견으로부터 2월 28일 전국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 개최 시기까지이다.(부록 <표 2> 3차 북핵실험 국면 북한 당국의 행태: 2013년 1~2월 참조)

이 시기 기점이 되는 행위로 2013년 1월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에 이어 25일 조평통 성명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 대해 “남조선 괴뢰패당이 이번 결의 조작놀음에 앞장섰다”며 남북 비핵화 논의 중단,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 등으로 위협하고,⁵⁹ 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로 3차 핵실험 성공을 발표하였다.

<표 Ⅲ-4> 3차 핵실험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26	대내	김정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이후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 협의회’를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6일
2013. 2.3	대내	당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지도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3일
2013. 2.2 1~22	대내	김정은	제323부대를 방문한데 이어, 제526대연합부대 전술연습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1, 22일
2013. 2.2 3~26	대내	김정은	항공 및 반항공군·제630대연합부대·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평양방송』, 2013년 2월 23~ 26일

59.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5일.

이어 『로동신문』 보도(2013.2.14)를 통해 3차 핵실험 제재 동향과 한미군사 훈련 등에 대해 “북을 겨냥한 핵실험 공격 훈련”이라며 핵 실험 보다 더 한 것도 할 것, 강도 높은 2·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를 취할 것 등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김정은의 주요 행보는 위의 표와 같다.

이 시기 북한의 정책 실태와 동향을 주요 특성 중심으로 분류해 보며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대주민 유화정책과 공포정치라는 당근과 채찍 양극단의 대중정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1월 8일 김정은 생일을 맞아 신년사 학습과 함께 7~8일 전국적인 기념강연회와 충성의 선서모임을 진행한⁶⁰ 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 실시를 선전했다. 데일리NK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의하면, 2월 “광명성절(2.16)을 맞아 조만간 대사령(大赦令)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1월 11일 열린 기업소 정치강연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로 죄인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교양이 있었다”고 한다.⁶¹

또한 1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의 방북을 체제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데일리NK의 혜산 소식통에 따르면, “원수님(김정은)의 현명한 영도로 이룩된 우주 정복의 자랑스런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명 인터넷 회장까지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축하 방문했다는 내용의 강연이 기관 기업소 종업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되었다고 한다.⁶² 더불어 양력 설(1월1일)에 이어 음력 설 명절에도 3일간의 휴무를 선전하며, 김정은

60. 김광진, “김정은 생일 기념 강연회·충성선서모임 진행,” 『데일리NK』, 2013년 1월 8일.
 61. 김광진,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특별사면 준비,” 『데일리NK』, 2013년 1월 13일.
 62. 최송민, “北 주민들 ‘구글’ 회장 방북에 ‘구걸 대표단 왔나?’,” 『데일리NK』, 2013년 1월 15일.

의 ‘인민 사랑’을 부각시키고 민심을 다독거렸다.⁶³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관련 공로자 수백 명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평양견학 등 대규모 포상을 실시하는⁶⁴ 한편, 함경북도 회령에서 18명의 마약사범과 생계형 경제범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회령시에서 약 1년 만에 재개된 이번 공개재판에는 주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석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게 하였다.⁶⁵ 김정은 정권의 지지자에게는 포상을 반대자에게는 응징을 내린다는 것을 전 인민에게 내재화시키는 작업이다.

둘째, 정보유출 차단과 대내 군사적 긴장조성을 본격화하였다. 1월 초부터 평양과 중국 단둥을 오가는 국제열차를 주 4회에서 매일 운행으로 증편한 것에 반해, 평양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급행열차는 완행으로 바꾸었으며 그나마 제대로 운행하지 않았다.⁶⁶ 고급정보가 오가는 평양-신의주 정보 검열 및 핵실험 관련 보안유지를 위한 정보차단과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보유출 차단을 강조하는 내용의 주민강연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특히 강연회에서는 한국 언론의 북한 내부 소식과 관련한 기사들을 읽어주며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경고하였다.⁶⁷ 핵실험 보안유지를 위해 날짜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의

63. 김준호, “북, 음력 설 명절에도 3일간 휴무,”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2월 4일.

64. 최송민, “공화국영웅칭호 김정은 ‘선물놀이’로 전락,” 『데일리NK』, 2013년 2월 27일.

65. 김광진, “회령 마약 사기범 18명 공개재판 중형선고,” 『데일리NK』, 2013년 2월 7일.

66. 김준호, “평양~신의주 급행열차 완행으로 강등,”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월 23일.

67. 김광진, “北, 강연회서 南기사 읽어주며 ‘정보유출’ 경고,” 『데일리NK』, 2013년 1월 9일. 외부와의 정보교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극히 제한적이지만 ‘전자우편(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있다. 그러나 이들 특권층들도 보안당국의 철저한 사전검열과 통제 하에 외부와 전자우편을 교환하고 있다. 김준호, “북 보위부, 전자우편 철저히 검열,”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월 8일.

여파로 해산시에 지진피해가 발생했으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한다.⁶⁸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조성이다. 김정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한 후 30일부터 북한 전역에 전투동원 준비태세를 선포하였다.⁶⁹ 그리고 주민 강연회를 통해 ‘남조선의 새 대통령인 박근혜가 북침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 책동을 분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는 등 내부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켰다.⁷⁰ 유동인원과 골목장사(메뚜기장사) 금지라는 주민통제 조치도⁷¹ 동반했고,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공민, 일명 조교(朝僑)들을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은연중에 흘리기도 했다.⁷²

3차 핵실험 후 지역별로 진행된 핵실험 성공 군중대회 이후로 전투동원 준비태세를 해제하면서 교도대·노농적위대 등 예비전력은 전투진지에서 철수해 직장으로 복귀하게 했으나,⁷³ 설 명절과 김정일 생일

68. 김광진, “[핵실험 피해 최소화] 영문 모르고 대피…아파트 균열,” 『데일리NK』, 2013년 2월 14일.

69. 김광진, “北 30일 0시부터 전투동원 준비태세 선포,” 『데일리NK』, 2013년 1월 30일.

70. 김광진, “北, 박 당선인 언급하며 전투대비태세 강조,” 『데일리NK』, 2013년 1월 31일; 김광진, “45세 이하 자원입대 준비…전시군법 적용,” 『데일리NK』, 2013년 2월 5일.

71. 최송민, “北 병사들 美帝 아닌 주민들과 싸우고 있다,” 『데일리NK』, 2013년 2월 5일.

72. 김준호, “북, ‘추가 핵실험설’ 퍼트려,”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2월 15일.

73. 김광진, “北 전투동원준비태세 14일 결의대회 후 해제,” 『데일리NK』, 2013년 2월 18일.

(2.16) 주간을 맞아 완화했던 군사동원 태세를 다시 강화했다.⁷⁴ 완화됐던 북한의 군민(軍民) 전투준비 태세가 재차 급속히 강화됨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가 가시화 되는 국면이 되면 준전시 상태가 선포될 것이라는 말들이 떠돌았다. 북한 내부에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군 대비태세와 주민 및 물자 동원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⁷⁵

핵실험 후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기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한 한편, “쓸데없는 ‘핵놀음’에 우리만 죽어난다”는 식의 반응도 보인다.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각종 경축행사 등에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시장까지 폐쇄하면서 나온 불만이라고도 한다.⁷⁶

이 시기 정책 특징은 ‘인민친화와 공포’라는 대중 통치의 극단적 양상과 함께, 정보유출 차단과 대내 군사적 긴장조성이 본격화된 것이다. 3차 핵실험 국면 북한의 도발은 아래 표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74. 강미진, “北 전투준비 태세 ‘재차’ 강화 움직임 곳곳서 포착,” 『데일리NK』, 2013년 2월 21일.

75. 김광진, “北 전투 태세 강화에 인민군 동상·관절염 속출,” 『데일리NK』, 2013년 2월 26일.

76. 최송민, “北 주민 “쓸데없는 ‘핵놀음’에 우리만 죽어난다,” 『데일리NK』, 2013년 2월 21일.

〈표 Ⅲ-5〉 3차 핵실험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24	대남	중앙방송 기자회견	탈북후 재입북한 김광호 부부와 고경희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남한사회를 ‘불법 무법의 사회’, ‘황금만능의 사회’, ‘악의 세상’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4일
2013. 1.25	대남	조평통 성명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 대해 “남조선괴뢰패당이 이번 결의 조작놀음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며 “남북비핵화 논의 중단,”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 등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5일
2013. 1.26	대남	조선중앙 통신 보도	한국 언론의 김정은 성형수술 의혹에 대해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 모략소동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6일
2013. 1.29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한국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참여 등을 거론하며, ‘동족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9일
2013. 2.2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들의 대북제재 관련 언급에 대해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고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것”고 비난하며 “최후의 판가리대전”, “보복의 불벼락” 등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2.6	대남	민족경제 협력위 대변인 담화	남측 개성공단 반입물자 관 련 조치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며 ‘특혜철회, 군사지역으로 재설정’ 등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6일
2013. 2.9	대남	조국통일 연구원	조국통일연구원 10대 죄행 록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대 북정책을 ‘반통일체제대결’, ‘핵, 미사일 소동’, ‘대화와 교류 말살’ 등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9일
2013. 2.14	대남	로동신문 보도	3차 핵실험 제재 동향과 한 미 군사훈련 등에 대해 “北 을 겨냥한 핵선제공격 훈련” 이라고 비난하며 ‘핵실험보 다 더한 것도 할 것’, ‘강도높 은 2, 3차 대응으로 연속조 치 취할 것’ 등 위협	『로동신문』, 2013년 2월 14일
2013. 2.16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법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 발언과 관련, ‘체제변화설을 늘어 놓았다’고 비난하며, 이명 박정부가 ‘6·15, 10·4 공동 선언과 화해·교류의 싹을 짓 밟아왔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6일
2013. 2.22	대남	조평통 서가국 보도	한국 방송(2.18 모닝뉴스) 의 ‘중국 북핵실험 반대시 위’ 보도 관련 ‘북중 관계를 이간질하는 모략책동’이라 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2일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2.23	대남	관문점대 표부 대표 (박림수) 명의 전화 통지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 연습 강행은 침략전쟁의 도 화선에 불을 다는 짓,’ ‘그 순 간부터의 시간은 운명의 분 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 간이 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3일
2013. 2.26	대남	평양방송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 을 받아야 할 21세기 을사오 적’이라고 하며, 이명박정 부의 주요 인사와 대북정책 을 비난	『평양방송』, 2013년 2월 26일

이 시기 대남 긴장조성의 주요 행위자로서 당·군·내각·조평통·김정은의 행보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북핵실험 전후 국면에서도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조선인민군 등 각종 군기관에서의 발표나 중요 일정이 없었다. 이는 3차 북핵실험이 김정은과 당료를 중심으로 한 당주도 정책결정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긴장고도화 국면: 2013년 3월

주요 기점으로 3월 5일 북한군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대조치를 발표하고, 3월 8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의로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관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하는 등 군사적 긴장고조·전투태세 등 관련 조치와 행동을 전면화하다, 3월 31일 당중앙위 정치국 및 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으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까지이다.(부록 <표 3> 긴장고도화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3월 참조)

이 시기 북한은 기간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 조성을 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 이 시기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 등 군부 현지지도가 이전 국면 보다 증대하였다. 2012년 말 이후 보위기관을 중심으로 했던 군 현지지도 양태가 이때부터 현장 군부대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북한의 주요 조치와 현지지도 등 김정은의 주요 행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6> 긴장고도화 국면 북한의 주요 조치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8	대남	조평통 대변인 성명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2013. 3.27	대남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남북 통신선 단절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통신 연락소 북측 성원들의 활동중지 통보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2013. 3.29	대내	김정은	전략로켓군 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타격계획을 검토·비준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2013. 3.30	대남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북남관계 전시상황 돌입’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표 Ⅲ-7〉 긴장고도화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1	대외	김정은	북·미 농구팀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한데 이어 前 NBA 선수단 일행과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일
2013. 3.8	대내	김정은	서남전선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 방어대 및 무도 방어대를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2013. 3.9	대내	김정은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의 양궁 경기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9일
2013. 3. 12.~ 14	대내	김정은	월내도 방어대 및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한데 이어,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및 포병들의 실탄사격훈련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2~ 14일
2013. 3.20	대내	김정은	‘무인타격기’ 및 ‘지대공미사일’ 훈련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0일.
2013. 3. 24~ 26	대내	김정은	제1973군부대·제1501군부대 시찰, 부문사업 지도 및 제324·287연합부대와 해군 587연합부대의 상륙·반상륙 훈련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4~ 26일
2013. 3.29	대내	김정은	전략로켓군 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타격계획을 검토·비준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2013. 3.31	대내	김정은	당 중앙위 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대내외 군사적 긴장을 고도화한 이 시기 북한의 정책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 인근 군부대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차량이 원산을 향해 기동했으며,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한미 연합훈련 종료시점을 주시하라는 명령도 하달되었다.⁷⁷ 한미합동 연례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에 대응해서 군·관·민을 연계한 전국 규모의 훈련을 잇달아 실시했다.⁷⁸

키 리졸브를 겨냥해 ‘제2의 조선전쟁’까지 논하면서 내부에서도 전시에 준하는 각종 비상조치가 이어졌다.⁷⁹ 대표적으로 11일부터 전 주민 갱도 대피훈련을⁸⁰ 시작하고, 예비전력인 교도대와 노동적위대, 사법기관 등이 공동으로 적아 쌍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모의 파괴 압해책동 분자에⁸¹ 대한 신고와 체포를 위해 일반 주민가옥에 가택수사까지 진행하였다.⁸²

또한 남한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던 일부 지역들에 북한당국이 강력한 방해전파를 발사하면서 남한방송의 시청을 불가능하게 했다.⁸³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당·군 조직을 총동원해 전투태세 준비에 나서면서 내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⁸⁴ 북한군이 지상, 해상, 공중(공군)에서 진행한 이 시기 다양한 훈련은 총참모부 명

77. 목용재, “北 중거리 미사일 韓美훈련 맞춰 원산 이동,” 『데일리NK』, 2013년 3월 4일.

78. 김준호, “북, 군·관·민 연계 전국규모 군사훈련,”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4일.

79. 김광진, “北 전시 분위기…체신소·방송국 갱도 이동,” 『데일리NK』, 2013년 3월 10일.

80. 김준호, “북, 전체주민 갱도 대피훈련 시작,”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12일.

81. 북한당국이 테러분자로 위장해 파견한 요원을 의미한다.

82. 김광진, “北, 파괴분자 색출 명목 가택수사 실시 韓流 단속,” 『데일리NK』, 2013년 3월 17일.

83. 김준호, “북, 남한 TV 전파차단에 전력,”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18일.

84. 최송민, “北 주민, 전시 대비 가전제품 팔고 식량 사들여,” 『데일리NK』, 2013년 3월 11일.

령으로 내려진 ‘전국적인 합동군사훈련’ 일환으로 17일에 1단계 훈련 성과를 총화했다.⁸⁵

한편 군사적 긴장고조와 함께 대주민 회유책도 전개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유도하기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보위부는 가족 및 친인척 상당수가 탈북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재입북하면 처벌하지 않고 평양시 거주권과 집까지 제공할 방침임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회유하였다.⁸⁶

강도 높은 각종 군사훈련과 함께 사회와 주민 동향을 의식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시기 일부 지역에서만 훈련기간 시장이 수일간 폐쇄되는 정도였으며,⁸⁷ 도시를 중심으로 배급을 확대하기 시작했고,⁸⁸ 전역에 ‘전시태세’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평양에서 김정은의 인민생활향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국경공업대회’가 개최되었다.⁸⁹

한편 무리한 군사동원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하였다. 북한이 국가급 군사훈련을 앞두고 동해 군사기지에 탱크 및 포 견인차 등 무기와 병력,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지만 이곳 기계화 부대 군인들의 장비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⁹⁰ 또한 25일 동해 원산 일대

85. 김광진, “총참모부 1단계훈련 17일 총화…민간은 쌍방훈련,” 『데일리NK』, 2013년 3월 15일.

86. 김광진, “北보위부, 탈북자 재입북 유도 강연회 열어,” 『데일리NK』, 2013년 3월 6일.

87. 강미진, “훈련기간 장마당 통제로 北주민 생활고 심화,” 『데일리NK』, 2013년 3월 14일.

88. 강미진, “北 ‘적 쳐들어온다’며 일부 지역 옥수수 배급,” 『데일리NK』, 2013년 3월 15일.

89. 최송민, “경공업대회 ‘김정은, 인민생활향상에 전력’ 강조,” 『데일리NK』, 2013년 3월 15일.

90. 최송민, “강원도 집결 탱크, 장갑차 운전 미숙 사고 속출,” 『데일리NK』, 2013년 3월 13일.

에서 육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전투능력 과시에 나섰다지만 실제 해군 일선기지에서는 함선 노후화로 기동훈련 성과가 저조했다고 한다. 전투동원명령에 따라 동서해에서 함선 기동훈련을 진행해왔는데 출동명령을 받고도 기관고장 등으로 훈련에 나서지 못한 함선이 40%에 달했다고도 한다.⁹¹

국가급 훈련을 위해 강원도 원산 지역에 대거 동원된 군부대와 군인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식량을 훔치는 행위,⁹² 지하갱도 대피 훈련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우선 대피시키라는 지시 등도 있었다.⁹³ 또한 북한의 일반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이 군사훈련에 총동원돼 경공업품을 생산하는 독립채산제 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⁹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고강도 군사훈련이 한 달여 간 지속되면서, 동원된 주민들이 훈련에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⁹⁵ 더불어 북한 군부가 전투준비태세 훈련 기간 항공기 연유(燃油) 방출량을 늘리면서 해당 군부대 군인들이 이를 빼돌려 민간 도·소매상(돈주)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기도 했다.⁹⁶

이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대주민 당근과 채찍 정책이 이루어졌다. 군·민 동원 군사훈련이 장기화되면서 예비전력인 노농적위대·교

91. 최송민, “北 함선 동서해 기동훈련 시 40% 기관고장 발생,” 『데일리NK』, 2013년 3월 26일.

92. 최송민, “대규모 훈련 인민군 가정집 빨감 훔치고 된장 퍼가,” 『데일리NK』, 2013년 3월 15일.

93. 김준호, “북, 지하대피 훈련에도 초상화 우선,”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15일.

94. 최송민, “군사훈련에 ‘독립채산제’ 실종…생활고 가중,” 『데일리NK』, 2013년 3월 18일.

95. 김광진, “주민들 훈련 장기화로 피로누적, 무단이탈 속출,” 『데일리NK』, 2013년 3월 19일.

96. 최송민, “北항공기 출격 급증으로 연유(燃油) 장사꾼들 대목,” 『데일리NK』, 2013년 3월 20일.

도대의 훈련 참여율이 저조해지자, 북한당국이 “불참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훈련참여를 독려⁹⁷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주민들에게 “해외로부터 로켓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기대감 상승 위한 선전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⁹⁸ 3월 말에 이르면서 긴장조절 필요성과 함께, 겨울철 비수기와 전쟁분위기 조성이 맞물려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북-중 교류가 마지막 주에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갔다.⁹⁹

이 시기 특징은 이전 국면과 달리 북한의 군부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당시 북한의 도발 양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8〉 긴장고도화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 5	대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합동군사훈련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소동이며, 가장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조성된 험악한 정세 관련 3가지 중대조치를 내외에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5일
2013. 3. 8	대남	조평통 대변인 성명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2013. 3. 13	대남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3군 합동임관식 축사를 인용하며, 박근혜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3일

97. 강미진, “北 ‘훈련 불참 시 처벌’ 엄포… “매일 인원점검””, 『데일리NK』, 2013년 3월 21일.

98. 김준호, “북 “해외로부터 로켓주문 쇄도” 선전”,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22일.

99. 김준호, “겨울잠 자던 ‘북-중 교류’ 기지개”,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28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14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남한 당국자 발언과 언론 보도를 비난하며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4일
2013. 3.18	대남	조평통 서기국 백서	남한 당국의 UN 北 인권조사기구 설립 논의 관련하여 '미국의 식민지 1번지로 전락되어 주권을 빼앗긴 남한은 인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2013. 3.20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美 카터 국방부 부장관 방한 및 B-52폭격기 비행훈련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0일
2013. 3.27	대남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사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2013. 3.27	대남	조평통 서기국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에 대해 비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2013. 3.30, 4.4	대남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 대변인 및 조평통 대변인	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자 철수 등을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4월 4일

이 시기 대남 긴장조성의 주요 행위자로서 당·군·내각·조평통·김정은의 행보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전 국면과 달리 북한의 군부가 전면에서 나선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등이다.

5. 긴장조절 국면: 2013년 4~5월

이 시기는 4월 2일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조선중앙통신(중통)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강조한 것으로부터, 5월 28일 중통을 통해 ‘선제적 비핵화 불가’에 대한 논평까지를 발표한 시기이다.(부록 <표 4> 긴장조절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4월~5월 참조)

3월의 극단적 긴장조성 후 핵보유 국가로서의 위상을 대남 및 국제 사회에 암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외협상을 모색하던 시기로, 군사적 돌발행동 보단 도발위협 담론 중심의 조치와 행동이 두드러진다. 더불어 남북관계와 핵의제 관련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남 및 대외 측면에서 밀고 당기기를 한 국면이다.

대남측면에선 4월 8일 김양건 당비서가 중대조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및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대외측면에선 미국 국민(케네스 배)에 대한 예심을 종료하고 노동교화형을 언도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¹⁰⁰ 그리고 최룡해의 5월 말 방중을 기점으로 긴장국면 전환을 준비한 시기이다. 5월에는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 관련 구체적인 결정, 조치, 행동 등이 없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 현지도 등 김정은의 정치행위 특성을 보면 군부대를 위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행보가 눈에 띈다.

¹⁰⁰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8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7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표 Ⅲ-9〉 긴장조절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4.12	대내	김정은	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모란봉악단 파견 및 화선공연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2일
2013. 4.27	대내	김정은	개업을 앞둔 해당화관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7일
2013. 4.30	대내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남자축구 결승전을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2013. 4.30	대내	김정은	최근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체육지도 일꾼들을 만남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2013. 4.30	대내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양각도 축구 경기장을 돌아봄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2013. 5.2	대내	김정은	5·1절 즈음 리설주와 함께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 경기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2013. 5.2	대내	김정은	5·1절 즈음 인민보안부를 방문하고 제2219 군부대를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2013. 5.4	대내	김정은	5·1절에 즈음하여 인민극장에서 은하수음악회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4일
2013. 5.5/7	대내	김정은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를 돌아보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등 인민군대에서 건설 중인 여러 대상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5/ 7일
2013. 5.8	대내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60돌 경축공연 준비 중인 은하수 관현악단 창작가·예술인을 만남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8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5.13	대내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 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3일
2013. 5.13	대내	김정은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조국 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건 립될 김일성 영상작품 창작 사업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3일
2013. 5.14/ 17	대내	김정은	새로 건설된 기계공장 및 '인민군 2월 20일 공장' 현 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4/ 17일
2013. 5.19 ~20	대내	김정은	김정은의 평양시 묘향산 등 산소년단야영소 시찰, 인민 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 도, 인민군 제405군부대 시 찰 등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9 ~20일
2013. 5.26 ~31	대내	김정은	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중 합식료가공공장 현지지도,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 해 군 제291군부대 시찰 등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6 ~31일

이 시기 북한의 정책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장조절을 위한 내부 조율과 함께 5월 모내기 철 준비를 기
점으로 농업에서의 자립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3월 말 부터 전투동원
태세와 비상소집 등 군사적 긴장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했다.¹⁰¹ 북한
당국이 해마다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수백 명의 외국 예술·연예
인들을 초청해 열었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개최하지 않기로 하

¹⁰¹ 김광진, “北내부 ‘전투태세’ 완화…일부 군인 께도서 나와,” 『데일리NK』, 2013년 4월 1일.

였다.¹⁰²

2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로 수입량이 급감했지만, 회령세관 등 북부지역부터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북한 내 중국산 공산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¹⁰³ 또한 전쟁위협과 긴장상태로 잠정 중단됐던 중국인들의 육로를 통한 북한 단체관광의 재개가 4월 중순부터 준비되었고,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중국 개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식당 및 봉사소(마사지·안마 업소) 등을 개장·운영하는 합작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양상이 드러났다.¹⁰⁴

북한이 5월 모내기철 시작에 발맞춰 외화벌이 회사를 총동원해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¹⁰⁵ 또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소(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농촌 동원노동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농촌동원 기간 중학생(남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주로 동원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농촌동원 총력지원 구호를 내걸고 소학교 아동까지 동원시킨 것이다.¹⁰⁶

둘째, 당근과 채찍의 대중통치이다. 9월부터 모든 단위에서 식량배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선전하며 3월에 이어 배급을 확대했다.¹⁰⁷ 평

102. 최송민, “北, 외국인 초청 ‘4월 친선예술축전’ 개최 안해,” 『데일리NK』, 2013년 4월 15일.

103. 김광진, “중국 대북수출 통제 완화 흐름…‘무역 회복 추세,’” 『데일리NK』, 2013년 5월 10일.

104. 김광진, “北, 중국 내 북한식당·안마소 투자자 유치 총력,” 『데일리NK』, 2013년 5월 14일.

105. 북한은 1월 초 내각 명의로 ‘무역일꾼협의회’를 열고 전국의 모든 무역회사들에게 비료를 수입해 헌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광진, “北 대북제재 대응 식량 확보차 ‘비료 수입’ 전력,” 『데일리NK』, 2013년 5월 15일.

106. 강미진, “북한 10세 아동까지 농촌동원…중노동 시달려,” 『데일리NK』, 2013년 5월 16일.

107. 박성국, “北 “배급 정상화” 예고…주민들 “믿기 어렵다,” 『데일리NK』, 2013년 4월 12일.

양과 신의주 등에 배급량을 늘려 쌀값이 하락하였다. 배급 정상화 방침에 주민들과 장사꾼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3월에 이어 4월 상순에도 배급이 이뤄져 쌀값 안정화에 영향 미쳤다.¹⁰⁸ 또한 인민생활 향상을 기치로 한 소위 6·28 경제개선 조치의 일환인 협동농장 분조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였고,¹⁰⁹ 시장통제를 완화하여 장마당이 활기를 찾도록 하였다.¹¹⁰

또 다른 한편, 김정은 집권 2년 차에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전보다 언행에 더욱 조심하도록 통제 분위기 강화,¹¹¹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사업을 강화했다. 대개 강연제강과 학습제강 등을 통해 당·군·내각 간부뿐 아니라 사회 각 단위 주민들에게 당의 정책·노선과 함께 우상화 교육을 진행하는 데, 그중 대부분은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떠받들자는 내용이었다.¹¹² 강연에 나서는 당 간부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전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였다.¹¹³

셋째,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라는 남한을 향한 승부수를 던지며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했다. 북한당국이 4월 8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를 발표하면서 북측 근로자들이 공단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폐쇄 지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조만간 조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각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농촌

108. 김용훈, “배급 늘어 쌀값 하락세…평양 10일경 2000원 하락,” 『데일리NK』, 2013년 4월 21일.

109. 김준호, “북,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전면시행,”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4월 22일.

110. 김준호, “북 전쟁위협 줄어들자 장마당 활기,”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5월 16일.

111. 김준호, “김정은 공안통치 과거보다 심해,”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4월 18일.

112. 특별 취재팀, “강연제강 입수…“김정은 16세에 ‘영군술’ 논문써,” 『데일리NK』, 2013년 4월 24일.

113. 최송민, “요즘 북한 黨간부들, 거짓 강연에 자괴감 토로,” 『데일리NK』, 2013년 4월 24일.

및 사회동원 투입을 준비하는 정도였다.¹¹⁴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상호주의 원칙이란 대응기조를 유지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준비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황해북도 지역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분산 배치했으며, 자본주의 사상 탈피를 위한 각종 학습과 강연 등 강도 높은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¹¹⁵

넷째, 소원해진 북중관계에 대한 견제와 동맹의 양존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내적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 이후 북한당국이 북한 내 화교들에게 각종 제약을 가하였다.¹¹⁶ 그러다 4월 말경 김정은 방중(訪中) 문제논의를 포함해 악화된 북중관계 회복을 위해 김양진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베이징에 파견했다.¹¹⁷

긴장조절을 위해 다양한 행보를 보인 이 시기 특성은 5월 모내기철 준비를 기점으로 농업에서의 자립을 위한 행보, 당근과 채찍의 대중통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라는 남한을 향한 승부수와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시도, 소원해진 북중관계에 대한 견제와 동맹의 양존정책 본격화이다. 이와 연동되어 북한의 대남 및 대외 도발이 아래 표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14- 김광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공단 폐쇄 지침 없다,” 『데일리NK』, 2013년 4월 9일.

115- 최송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짚물(불순사상)빼기’에 곤혹,” 『데일리NK』, 2013년 5월 3일.

116- 김준호, “북, ‘중 유엔제재 동참 보복’ 화교 압박,”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5월 2일.

117- 조종익, “김양진 ‘김정은 訪中’ 협의차 북경 방문…中 거절,” 『데일리NK』, 2013년 5월 8일.

〈표 Ⅲ-10〉 긴장조절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4.9	대남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문 발표	남한의 보수 언론을 비난하 는 담화문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9일
2013. 4.14/ 18	대남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답변, 국방위 정책국 성명	남한 정부의 4.11 대화제의 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4, 18일
2013. 4.16	대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존엄을 훼손한 만행에 대해 보복행동을 개시한다 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6일
2013. 4.17	대남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비망록	남측이 개성공업지구를 위 기에 몰아넣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7일
2013. 4.26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남측 대화제의를 거부하면 서, 북한이 먼저 중대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6일
2013. 4.29 ~30	대남	로동신문, 중통 보도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 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비난	『로동신문』, 2013년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2013. 5.2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 당집행을 비난하면서 미군 철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5.5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으로 남측의 대화제의(4.11, 4.25)를 비난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을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5일
2013. 5.7	대남	조선인민군 서남전선 사령부 보도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비난 하며, 즉각적인 대응타격 등을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7일
2013. 5.10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질문 대답형식으로 한 미정상회담 결과 및 대통령 의 발언 등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0일
2013. 5.10	대외	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관련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진실을 오도하는 험담’이라 며 ‘누구의 변화를 칭얼거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릇된 관점부터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0일
2013. 5.15	대남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대변인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으로 남측 대화제의를 비난 하고, 근본문제 해결 및 대 결책동 중단을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5일
2013. 5.15	대남	로동신문 보도	“한미정상회담은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더 한층 강화하 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	『로동신문』, 2013년 5월 15일
2013. 5.22	대외	외무성 대변인	美 국무부의 ‘2012년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 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 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 한데 대하여 “비열한 적대행 위”이며 “정치적 목적에 종 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2일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5.24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질문 대답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면담(5.23) 내용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4일
2013. 5.25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5월 23일 대통령-미국 전략문제연구소 면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5일

이 시기 대남 긴장조성 양상과 주요 행위자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전 국면에서는 북한의 군부가 정세주도 행위자로 전면에서 나선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북한의 특구개발 및 외자유치 기구이며 개성공단 관리운영 기관이기도 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지도총국)¹¹⁸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보가 보인다. 당기관 역시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차기 행마를 조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행위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지도총국, 조평통 등이다.

118. 지도총국의 역할과 체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관계자의 의견을 빌린 언론기사에 따르면, “평양에 설치된 지도총국은 현재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민경련 산하의 삼천리총회사의 개성공단 업무부서를 묶어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일뉴스』, 2013년 11월 24일; 『연합뉴스』, 2013년 11월 24일. 한편 탈북민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2014년 10월을 목표로 한 국내외 인터넷 연결 장비 도입을 지도총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28일. 이는 이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고 이권이 많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특히 개성공단 뿐 아니라 한국의 대북사업에서 중요하다.

6. 긴장완화 국면: 2013년 6~9월

5월 말 최룡해의 방중 이후 북한이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이산가족·금강산관광 논의 등이 전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9.21) 이전까지 시기이다.(부록 <표 5> 긴장완화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6~9월)

이 시기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경제분야 중심으로 증대하였으며 전국단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인민생활을 어루만지는 이미지 정치가 두드러졌다. 북한의 주요 조치와 현지지도 등 김정은의 주요 행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1> 긴장완화 국면 북한의 주요 조치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6.6	대남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당국 간 회담을 포함한 중대입장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6일
2013. 6.16	대외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 발표	‘북-미 당국 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現 한반도 긴장 국면 해소문제 등을 협의’ 하자고 제안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6일
2013. 7.1 ~4	대외	몽골 정보기술·우편 및 통신국 대표단 방북	‘정보기술분야 교류와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시설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 ~4일
2013. 8.7	대남	조평통 특별담화	8월 14일 제7차 개성실무 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개성공단 출입 및 신변 보장 등을 천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7일

〈표 Ⅲ-12〉 긴장완화 국면 김정은의 주요 행보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6.1 ~5	대내	김정은	마전 해수욕장, 성천강그물 공장·수지관직장, 인민군 제549군부대 돼지공장 현 지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 5일
2013. 6.4	대내	김정은	6.4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호소문’(「마식령속도를 창 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 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 를 열어나가자」)을 보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2013. 6.8 ~14	대내	김정은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도, 평양국제체육학교·능라 인민체육공원 시찰, 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 현지도 등 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8~ 14일
2013. 6.15 ~20	대내	김정은	대관유리공장, 유평혁명사 적지,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1월 18일 기계중 합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 기업소 현지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5 ~20일
2013. 6.22 ~24	대내	김정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강 계정밀기계종합공장 현지 지도, 자강도 노동자들과 모란봉악단 공연관람 및 장 자강공작기계공장 현지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2 ~24일
2013. 6.29 ~7.3	대내	김정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 11 일 공장, 신흥기계공장, 인 민군 제851군부대 포사격훈 련,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인민군열사모, 조국해방전 쟁승리기념관, 강동정밀기 계공장 현지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9~ 7월 3일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7.8	대내	김정은	김일성 사망 19돌 관련,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8일
2013. 7.11	대내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1일
2013. 7.16	대내	김정은	인민군 제534부대 산하 버섯공장, 아동병원·구강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6일
2013. 7.30 ~8.2	대내	김정은	정전협정 60주년과 관련하여 ‘성흥혁명사적지’ 방문,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 현화, 전쟁노병·해외동포 등과의 사진촬영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30 ~8월 2일
2013. 7.31	대내	김정은	축구양궁경기 관람 및 동아시아컵에 참가한 선수들을 접견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31일
2013. 8.7 ~9	대내	김정은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평양체육관,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7 ~9일
2013. 8.11 ~15	대내	김정은	‘5월 11일 공장’,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을 방문하고, 남자 축구 경기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11~15일
2013. 8.20	대내	김정은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0일
2013. 9.3	대내	김정은	장재도·무도 방어대, 애국돌공장, 월내도 방어대, 룡연바닷가 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3일
2013. 9.7	대외	김정은	전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과 면담하고 농구경기를 관람하였으며 만찬을 실시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7일
2013. 9.15/ 18	대내	김정은	평양체육관, 능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등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15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18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¹¹⁹ 개성공단 정상화를¹²⁰ 추진한 이 시기, 북한의 정책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물가안정화와 경제활성화 및 시장경제 단속완화이다. 둘째, 유일 사상 10대 원칙 수정 등을 기점으로 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작업이다. 셋째, 내부관리와 장성택세력 검열이다.

첫째, 물가안정화·경제활성화·시장경제 단속 완화이다. 북한 시장 물가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7월 초 쌀 가격이 평양 5,000원, 혜산 5,400원 등 2013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감자 수확 등 계절적 요인도 있으나 북한당국이 2호미(전시비축미)를 일부 배급한 데 따른 것이다.¹²¹

이에 따라 쌀값이 안정되어 장마당 쌀값이 중국의 쌀 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되기도 하였다.¹²² 그리하여 가을 추수를 앞두고 북한의 물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9월 중순 평양, 신의주 쌀값은 8월 초와 비교해 각각 600원, 450원 내린 4,800원, 5,100원에 거래되었다.¹²³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중단되었던 중국의 유류공급이 재개되

119. 북한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내부 주민들 대상으로 군사동원훈련을 진행해 왔지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리 군인들의 훈련뿐 아니라 민간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미진, “북한, UFG 대응 군사훈련 안해…“매우 이례적”, 『데일리NK』, 2013년 8월 19일.

120. 폐쇄위기에 몰렸던 개성공단의 정상화 협상 타결 소식에 개성공업지구의 북측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무역일꾼들도 크게 환호했다고 한다. 김준호, “북 무역일꾼들 개성공단 타결에 환호”,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8월 19일.

121. 이상용, “시장 쌀값, 2호미 배급·감자수확에 하향세 지속”, 『데일리NK』, 2013년 7월 2일.

122. 김준호, “북 장마당 쌀 값 안정속 비싼 중국쌀 밀수 여전”,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7월 5일.

123. 이상용, “추석 앞두고 北쌀값 안정세…평양 2호미 배급 영향”, 『데일리NK』, 2013년 9월 17일.

었고,¹²⁴ 단둥과 신의주 사이 압록강에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외화벌이를 하였다.¹²⁵ 북한의 장마당에서 밀거래를 통해 유입된 중국 남부지역의 남방 미(米)도 거래되었다.¹²⁶ 또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촌동원 기간을 늘리며 조기방학을 실시하였고,¹²⁷ 인민군의 각종 건설 및 생산 지원이 이루어졌다.¹²⁸ 그리고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외자유치를 위해 전국의 각 도마다 관광 또는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였다.¹²⁹

주목할 지점으로 북한당국의 위락시설 건설은 장롱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의 돈을 사회로 끌어내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예로 2013년 초부터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로라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트장)이 속속 개장하면서, 경비가 너무 비싸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북한 어린이들 속에서 롤러스케이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¹³⁰ 더불어 북한당국이 주민 종합편의 시설이라고 선전하는 ‘평양 해당화관’은 부자들의 감춰놓은 외화를 끌어내기 위한 특권층 전용의 호화 위락시설이

124. 김준호, “중국, 북한에 유류공급 재개,”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7월 12일.

125. 강미진, “北주민, 압록강서 배 몰고 중국 유람선에 다가와…,” 『데일리NK』, 2013년 9월 13일.

126. 김준호, “북 장마당에 중국 남방 쌀 등장,”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9월 17일.

127. 북한의 중학생들이 지난 6월까지 농촌지원에 동원되는 등 농촌동원 기간이 길어진 데다 김정은의 조기 방학 지시로 농촌동원에서 복귀하자마자 기말 시험이 실시됐다고 한다. 이상용, “김정은, 학생사정 고려치 않고 조기방학 지시,” 『데일리NK』, 2013년 7월 22일.

128.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따른 자신감을 배경으로 전체 인민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해 경제 부문에 배치하기로 했다는 한 일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북한 내부에서 제기됐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0만 감축설에 대해 인민군의 각종 건설 및 생산 지원을 병력감축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한다. 강미진, “8월까지 정규군 30만 감축하면 큰 소요 발생할 것,” 『데일리NK』, 2013년 7월 15일.

129. 김준호, “북, 각 도마다 특구 조성 추진,”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8월 30일.

130. 김준호, “북 ‘롤러스케이트’ 바람, 부모들엔 부담,”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7월 9일.

라는 소문이 팽배했다.¹³¹

한편 우리식 경제관리개선 조치 실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과 난황도 드러났다. 북한 협동농장 관리위원회가 소유 토지 일부를 비(非) 농장원에게 대여하고 수확물의 30%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일종의 토지 임대(賃貸)를 한 것이다. 이는 4월 초 발표된 협동농장 운영개선 조치와는 다른 차원으로 협동농장의 자체적인 토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¹³² 또한 북한당국이 ‘분조단위 축소와 생산물 7:3 분배’ 등 농장운영 개선 지침을 시범 실시할 지역을 지정했지만, 그 곳의 토질 및 지형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해당 농장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³³

둘째, 유일사상 10대 원칙 수정 등을 기점으로 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다. 6월 김정은 명의로 기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 수정본이 발행되었다.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입각하여 당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다.¹³⁴ 이 문건의 발간이후 각 단위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7월 8일 김일성 사망 19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애도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10세 이하의 남한 초등학교 1~4학년에 해당하는 소학교 학생들까지 특별경비에 동원하였다.¹³⁵ 또한 평양에 있던 지방주민들을 강

131- 김준호, “평양 해당화관은 외화벌이 수단,”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9월 20일.

132- 강미진, “북한 ‘수확물 개인 70% 분배’ 조건 토지 임대,” 『데일리NK』, 2013년 6월 5일.

133- 이상용, “산비탈·돌밭에서 농사지으라고?...농장원들 분통,” 『데일리NK』, 2013년 7월 5일. 한편 김정일이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한 평양 10만호 건설 사업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전면 중단되고 일부 지역 살림집이 홍물로 전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용, “김정일 치적 사업 평양 10만호 홍물로 전략,” 『데일리NK』, 2013년 7월 1일.

134- 강미진, “북한, 39년만에 ‘黨 유일사상 10대원칙’ 수정,” 『데일리NK』, 2013년 8월 9일.

제 추방하고 평양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¹³⁶ 북한 양강도 당국은 김정일 고향 꾸미기를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도내 여맹원들을 ‘들쭉 따기’에 총동원하기도 하였다.¹³⁷

한편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일명 전승절)을 맞아 6·25전쟁에 참여한 노병(老兵)들 가운데 장거리 이동과 행사가 가능한 인원을 선별한 후 평양에 집결시켜 ‘전국 전쟁노병대회’를 치르며,¹³⁸ 공화국 창건일(9·9)을 맞아 2호미(군량미)와 최근 수확한 옥수수를 평양주민들에게 배급하였다. 반면 평양 이외 지방에는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¹³⁹

셋째, 남한을 의식한 내부관리 등과 함께 보위부 주도의 장성택세력 검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경비와 수색을 담당하는 민경(민사행정경찰)부대 군인들의 성분조건을 강화했다.¹⁴⁰ 또한 탈북자 재입북 및 검열 정책을 강화하였다. 보위부가 탈북자 가족을 설득 또는 협박해서, 한국 정착 탈북자들을 북중 국경으로 유인해 북으로 데려오게 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¹⁴¹

¹³⁵ 강미진, “김일성 19주기 애도기간 어린이까지 경비 동원,” 『데일리NK』, 2013년 7월 8일.

¹³⁶ 이상용, “이번주 김일성 애도기간…평양출입·외국인 통제,” 『데일리NK』, 2013년 7월 8일.

¹³⁷ 강미진, “혜산 여성들 백두산 삼지연에 총동원되는 이유는,” 『데일리NK』, 2013년 8월 19일.

¹³⁸ 강미진, “북한, 김일성 후광효과 노린 ‘노병대회’ 준비 몸살,” 『데일리NK』, 2013년 7월 23일.

¹³⁹ 이상용, “김정은 ‘이들이면 전쟁승리’ 평양에 2호미 배급,” 『데일리NK』, 2013년 9월 6일.

¹⁴⁰ 민경부대는 소위 ‘계급적 토대(출신성분)’가 좋은 군인들 위주로 선발해 배치해왔으나 지난해 DMZ 북한군 귀순이 잇따르면서 김정은이 직접 성분 조건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미진, “‘노크귀순’ 여파?...북한, MDL 민경군인 대거 교체,” 『데일리NK』, 2013년 7월 10일.

북한으로 재입북한 김광호 씨 탈북 이후 북중 국경지역에 군 보위 사령부 검열대가 급파돼 국경경비대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였다.¹⁴² 그 동안 보위부에 맡겨왔던 중국 등 해외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색출·복송 임무를 정찰총국에 이관하였다고 하며, 탈북자 체포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전투요원들을 파견했다고 한다.¹⁴³

주목할 지점으로 9월부터 장성택세력 검열이 전면화된 것으로 추론된다. 그 근거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무역일꾼들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총화가 9월부터 시작된 점이다. 당시에도 통상 연말께 실시하던 사업총화를 앞당긴 데 대해 다양한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¹⁴⁴

또한 김정은의 지시로 국경경비가 대폭 강화되 과거와 달리 생계형 밀수꾼들이 적발돼도 보위부에 넘겨져 갓은 구타를 동반한 취조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위부 간부들의 실적 쌓기와 무리한 취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¹⁴⁵ 이 시기 북한의 도발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141. 강미진, “보위부, 北가족 협박해 탈북자 국경 유인·납치,” 『데일리NK』, 2013년 8월 2일.

142. 강미진, “김광호 재탈북에 軍보위사령부 국경경비대 검열,” 『데일리NK』, 2013년 7월 19일.

143. 이상용, “10대후반 정찰총국 요원 中서 탈북자 납치 활동,” 『데일리NK』, 2013년 8월 8일.

144. 김준호, “중국 주재 북 무역일꾼 사업총화 시작,”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9월 2일.

145. 강미진, “밀수 적발된 北주민 각목구타로 팔다리 부러져,” 『데일리NK』, 2013년 9월 16일.

〈표 Ⅲ-13〉 긴장완화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6.13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당국회담이 남측의 방해와 파탄 책동으로 무산되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3일
2013. 6.20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6·25는 미국에 의해 계획된 북침전쟁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0일
2013. 6.21	대외	UN주재 북한대사	6월 21일 유엔 본부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실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7일
2013. 6.22	대남	조선중앙 통신 보도	남북당국회담 파탄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2일
2013. 6.27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긴급 성명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7일
2013. 7.1	대남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방중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일
2013. 7.10	대남	조선중앙 통신 보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 2차 남북당국실무회담과 관련하여 남측의 성의 없는 태도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0일
2013. 7.26	대남	조평통 서거국 보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의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26일
2013. 8.3	대남	로동신문 보도	한국 정부가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	『로동신문』, 2013년 8월 3일
2013. 8.20	대남	조평통 특별담화	UFG 훈련은 남조선 당국의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0일
2013. 8.29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UFG 훈련을 비난하고,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구상한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9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9.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비난하고, 남북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6일
2013. 9.18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남측 국방부장관의 발언 관련 ‘북한이 4세대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등의 혐담은 남북관계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18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18일/ 『로동신문』, 2013년 9월 18일

긴장완화 국면 대남 긴장조성의 주요 행위자는 조평통이며, 그 양상은 통상적인 남한 정세에 대한 담론수준의 비난으로, 남한의 북한관련 주요 정치사안에 대한 대응식으로 드러났다.

7.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2013년 9~12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과 ‘리설주 추문관련 의혹 보도’ 등을 빌미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를 발표한 9월 21일 이후로 남한정치 및 박근혜정부에 대한 수사적인 공격을 하며, 장성택 숙청으로 드러난 내부 권력구조 재조정에 집중하면서 향후 정책을 모색하는 2013년 12월 현재까지이다.

초기에는 9월 26일자 조선신보에서 밝혔듯,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남북대화 분위기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시한부 조치라며, 교착상태의

조속한 타개는 남측 당국의 결단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¹⁴⁶ 그러나 내부 권력구조 조정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제기하며 대북지원 등 과감한 조치를 제시하지 않자 대남비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9월 말 이후 북한의 대남보도 특징을 보면, 대남 비난/선동이 8월 대비 2배 이상 증대하였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보다 훨씬 수위 높은 대남 비난과 선동이 이루어졌다. 정책조율 국면 중 9월 말~10월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4〉 정책조율 국면 북한의 도발 양상

날짜	분야 (대내외/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9.21	대남	조평통 대변인 성명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연기하면서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로동신문』, 2013년 9월 21일
2013. 9.2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남성을 사살한 사건(9.16)과 관련하여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2013년 9월 26일
2013. 10.3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반통일적 문서, 체제 대결 각본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3일
2013. 10.4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며 비난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2013년 10월 4일

¹⁴⁶ 『조선신보』, 2013년 9월 26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7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한 것과 관련,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7일
2013. 10.8	대외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8일
2013. 10.9	대외	외무성 담화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외무성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2013. 10.9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답변	'국가 원수 지칭 문제의 해결을 바라다면, 우리(北)에 대한 비방중상놀음을 중지하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해 실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3년 10월 9일
2013. 10.10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최고존엄과 관련되는 중대 문제'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배후로 대통령을 지목, 실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10일
2013. 10.11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관련,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현실적 가동'이라며 '최고사령부 명령에 따라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1일
2013. 10.14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관련 '동남아시아를 행각하여 우리(北)를 못되게 헐뜯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2013년 10월 14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17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진 체위원회 발언 관련 실명 비 난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3년 10월 17일
2013. 10.21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국방부장관·합참의장 발언 (‘선제타격’, ‘철저한 응징’, ‘대북심리전 능력 강화’ 등) 관련 ‘단 한 점의 도발 불꽃 이라도 튕긴다면 온 남조선 땅이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1일
2013. 10.24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검토와 관련, ‘北과 연계하 여 진보당을 해산하려는 것 은 용납 못할 도발, 파쇼적 폭 거’라고 비난하며 ‘南은 반대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책동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4일
2013. 10.25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와 문답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에서 ‘최고수준의 금융제재가 필 요한 국가’로 北을 지정한데 대하여 자주권과 생존권의 침해라고 반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일
2013. 10.26	대남	조선사회 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담화	‘남조선은 정치적 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전히 말살 된 정치 무풍지대’라고 비난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2013년 10월 26일
2013. 10.26	대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고발장	박근혜정부를 ‘제2의 유신 정권’이라고 매도, 비난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2013년 10월 28일
2013. 10.31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故 박정희 대통령 제34주기 추도식 관련 ‘이전 독재자를 찬양하는 놀음’이라며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1일

날짜	분야 (대내외 /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31	대남	조선평화 옹호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 부장관의 한국형미사일방 위체계 구축 관련 발언에 대 해 국방부장관 실명을 거론 하며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1일
2013. 10.31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동기자외 의 문답	美 국무장관의 발언(北은 불 량배 국가)에 대해 비난하 고,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 책 철회 전까지 한반도 비핵 화 불가’를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1일

정책조율 국면에서 내각주도로 대외부문에서 9월 23~25일 ‘할트마 바톨가’ 몽골 공업 및 농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정부 경제무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9차 회의 실시 및 의정서 체결이 이루어지고, 대내부문에서는 10월 16일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조직하는 등 새로운 경제정책 설계가 드러났다.

11월까지 김정은은 각종 건설사업 및 위락시설 현지도 등 민생안정 행보를 보였다.(부록 <표 6> 정책조율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9~12월 참조) 반면 대남분야에서는 원색적인 비방이 이어졌다. 장성택 숙청을 공표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당일인 12월 8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보도 대부분이 대남비방 내용이었다.

이 시기 두드러진 특성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후 김정은 독재 체제 강화 기초 속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장성택 세력 숙청으로 드러난 향후 집권구도를 재정비한 것이다. 정책 및 권력구조를 조율하면서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대남 비방

및 선동의 수위가 높아진 특성을 보였다.

이 시기 대남 도발의 주요 행위자는 조평통과 국방위이다. 흥미로운 점으로 각 기관의 대남 비방 논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조평통은 주로 남한의 대북관련 행태에 대한 대응식 수세적 도발이 주를 이루는 것에 반해, 국방위는 대통령 실명비난과 함께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도발 논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책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면 9월 말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유일사상 10대 원칙 선전과 함께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조직사업 및 내부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때 불거진 리설주 추문 사건이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려 이후 공개처형 등 무자비한 통치술이 증대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외자유치 통한 경제발전 계획을 선전하고 식량안정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숙청이나 공포정치의 대국민적 후과를 약하게 하고 상층부 권력 구조 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매개로 한 조직사업과 내부관리가 이루어졌다. 북한이 39년 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수정한 후, 9월 말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정된 10대원칙에 맞는 생활총화와 함께 반성문 제출사업이 진행되었다.¹⁴⁷ 체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사상통제 강화이다.¹⁴⁸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당소속 간부들이 공단 내 북한 근로

¹⁴⁷ 이상용, “북한, 사상통제 강화…‘10대원칙’ 따른 총화 지시,” 『데일리NK』, 2013년 9월 23일.

¹⁴⁸ 한편 중국당국이 국경지역 일대에 탈북방지와 북한 주민들의 불법도강에 따른 범죄를 막기 위해 5m 이상의 강독을 쌓는 것을 방조하였다. 중국당국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국경일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조망을 깔았지만, 도강이 쉬운 구역의 도강범죄가 줄지 않아 독 쌓기와 철조망 교체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강미진, “北中 국경 탈북·범죄 방지 철조망·강독 공사 한창,” 『데일리NK』, 2013년 9월 24일.

자 5명당 3명을 지정해,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해 상호 감시 및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도 한다.¹⁴⁹

한편 일본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어 한국언론을 통해 퍼진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추문은 소위 ‘최고존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북한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추문의 최초 유포자 색출을 위한 내사가 진행되어, 음란물 촬영 혐의로 현송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설주도 문란하게 놀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 소문이 평양을 중심으로 확산되,¹⁵⁰ 당국이 주민대상 강연에서 “김정은 원수님과 부인 리설주 동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고 들어도 모른척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¹⁵¹ 그리고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맞아 내부적으로도 별도의 군중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¹⁵²

다른 한편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계획 설계 행보를 보이고 식량안정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김정은이 전국 9개 도(道) 경제일꾼들에게 도 내 2개의 도시를 후보지로 선정해 라선 특구와 유사한 개방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일꾼들이 2개 도시 선정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중국 등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¹⁵³

149. 이상용, “개성공단 5명중 3명은 보위부·보안부·당 감시원,” 『데일리NK』, 2013년 10월 16일.

150. 이상용, “북한, ‘리설주 문란’ 최초 유포자 색출 내사,” 『데일리NK』, 2013년 9월 25일.

151. 강미진, “北 “원수님 부인(리설주)에 대해 알려고 하지마라,” 『데일리NK』, 2013년 9월 30일.

152. 강미진, “北, 노동당 창건일에 행사도 없고 공급도 없다,” 『데일리NK』, 2013년 10월 10일.

153. 이상용, “김정은, 각 道 2개 도시 라선식 개방계획 세워라,” 『데일리NK』, 2013년 10월 1일.

또한 식량증산과 물가안정화 등 주민생활 안정화 목적으로 가을걷이를 위해 주민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도시 장마당 개장시간을 대폭 제한하기도 하였다.¹⁵⁴ 그 결과로 일례로 양강도 대흥단 지역주민들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감자를 분배받을 수 있었다. 공장 기업소에 따라 분배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두 달가량의 감자를 분배하던 작년과 달리 2013년엔 1년~반년 치에 해당하는 감자가 배급돼 주민들이 식량걱정을 덜었다고 한다.¹⁵⁵ 그리고 겨울철을 앞두고 북한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주 연료인 석탄값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¹⁵⁶

한편 이 정책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관료들의 부담이 증대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 구역(區域) 인민위원회 소속 지도원들이 2013년 주민들에게 배급된 2호미(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해, 외화벌이 일꾼들을 중심으로 충성미(忠誠米)를 바칠 것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담당 지도원들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김정은이 직접 ‘표창’을 내릴 것이라면서 설득했다고 한다.¹⁵⁷

정책조율 과정에서의 파벌 간 갈등이 새로운 정치국면을 초래한 이 시기, 북한 내부정치 및 김정은의 주요 행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8~9월 노동당 당원증 교체 및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개정과 대주민 선전 → 10월 초 김정은의 군 관련 현지도 증대 → 10월 7일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 부여(1997.10.8) 16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¹⁵⁸ → 10

154. 김준호, “북, 가을걷이 총동원에 장마당 제한,”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0월 17일.

155. 강미진, “감자에 된장까지 배급 나왔지만 불안한 北주민,” 『데일리NK』, 2013년 10월 18일.

156. 김준호, “북, 서민용 석탄값 안정세 유지,”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0월 29일.

157. 이상용, “북한, 군량미 충당 위해 ‘햅쌀 헌납운동’ 벌여,” 『데일리NK』, 2013년 10월 21일.

158. 핵심적으로 ‘영원한 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주체적 당건설 사상이 김정은에 의해 더 높은 단계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김기남·김영남 등 참석).

월 15일 김정일의 과학기술 중시 노작발표¹⁵⁹ 10주년 기념, 그 뜻을 이어받은 김정은의 과학자·기술자에 대한 물질적 배려¹⁶⁰ 및 충성 강조 → 10월 21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¹⁶¹이다.

이어 10월 22~23일 김정은 지도하 군 제4차 중대장·중대 정치지도원대회 진행¹⁶² → 11월 12일 제4차 군 적공일꾼열성자회의¹⁶³ 개최 → 11월 20일 김정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 시찰¹⁶⁴ → 11월 21일 제2차 군 보위일꾼대회, 김정

159- 김정일이 2003년 10월 15일 발표한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를 지칭한다.

160- 은하과학자 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주택 건축 등이다.

161- 김정은 지도 하에 2013년 3/4분기 정전협정(7.27) 60주년과 정권창립(9.9) 65주년 및 마시령속도창조 사업의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하며, 4/4분기 중심과업으로 석탄과 철강재 생산에 총 역량집중 및 농업과 경공업(식량과 소비품) 사업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 인민경제 계획의 무조건 달성을 강조하였다(내각 총리 박봉주·부총리 전승훈 및 직속기관 책임자와 도·시·군 인민위원장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1일.

162- 김정은이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중대강화를 출발점으로…당의 두리에 굳게 묶여…선군혁명위업수행”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일; 이들과 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하며 충성심을 고취시켰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0일. 이 행사들에서 김정은의 영웅성과 수령결사용위 정신이 부각되었다. 한편, 북한 군(軍)의 최 말단 간부인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가 평양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당국이 전군(全軍)에 반(反)항공 및 실전 대비 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9~31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시기상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 부대 중대장·정치지도원 부재에 따른 지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용, “北, 중대장 평양 불러놓고 全軍 ‘反항공훈련’ 실시,” 『데일리NK』, 2013년 10월 30일.

163- 이 대회에서 김정은 결사용위의 맹세와 결의가 다져졌다고 한다. 『로동신문』, 2013년 11월 12일. 적공(敵攻) 일꾼은 북한군에서 적군(敵軍)을 와해하는 공작 업무와 대남 심리전 등을 담당하는 요원을 의미한다.

164- 김정은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창립되고 강화 발전되어 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군사일꾼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사연구원” 창설은 중요한 의의라고 연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1월 20일.

은 지도하에 진행¹⁶⁵ → 12월 4~5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3467호 (11.26字)로 평양 3.26전선공장 등 32개 단위에 “모범준법단위(혁명적 준법기풍 수립 모범) 칭호” 수여, 김정은의 ‘원군사업’ 등 모범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이¹⁶⁶ 있었다.

그리고 12월 8일 김정은 지도하 장성택 숙청을 자세히 공포하는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 12월 8~13일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진행 →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으로 장성택 재판 및 처형 → 12월 13일 군 설계연구소 현지지도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공로가 있다는 간부와 군인들에게 ‘김정일훈장’, ‘노력영웅’, ‘김정일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명의 표창장’ 등의 대대적 포상이 이루어졌다.

장성택세력 숙청관련 이 시기 북한의 공개된 주요 정치일정을 살펴 보면, 10월 16일 장성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창설 → 11월 18일 국가보위부 주도 장성택 가택연금 → 11월 21일 신의주특구와 경제개발구 13개 설치 발표 → 11월 21~26일 장성택 핵심 측근 당행정부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 처형 → 12월

¹⁶⁵ 이 대회는 김정은이 대회참가자들에게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역사적 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보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소집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는 군종, 군단 정치위원들, 인민군 육해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 각급 군사학교 등 무력기관의 보위일군들이다. 주석단에는 최룡해, 김원홍, 김수길, 럽철성, 조경철 등 군부 지휘성원들과 보위일군들이 나왔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연주로 시작되어, 인민군 총정치국장·차수 최룡해의 개회사에 이어 육군 상장 조경철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각별한 신임과 기대 속에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회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보위기관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며 모든 보위일군들을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대렬보위전어로 총결기시키는 역사적인 대회로 선군혁명사에 빛나게 수록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김정은에게 전하는 맹세문이 채택되었고,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라는 연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1월 21일.

¹⁶⁶ 『조선중앙방송』, 2013년 12월 4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12월 5일

4일 전후 장성택 매형 전영진 주(駐) 쿠바 대사와 조카 장용철 주 말레이시아 대사 평양소환 → 12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숙청 공표 →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통해 장성택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위부의 북한 주민 통제강화와 사상무장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대남 비방은 원색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성택 숙청시기에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의 보도 및 기사 상당수가 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한 남한의 종교계 및 재야의 정부 비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여당의 행보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는 급박한 대내 권력구조 조정시기에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담론 수준에서 선제적인 도발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대내적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원색적 비방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다가, 장성택 처형이후 사건을 일단락시키며 12월 25일 북한은 조평통 명의로 “박근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개 질문장을 보냈다.¹⁶⁷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¹⁶⁷-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25일.

IV. 평가와 전망



2010년 김정은의 후계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 벌어진 천안함과 연평도 두 사건, 그리고 김정은 집권 후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북핵실험은, 김정일 시대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도발의 강도가 아주 높아졌고 정책전환의 주기가 짧아진 것에 비해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북한 정책결정구조와 대남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누가 또는 어떤 파벌이 독재자 김정은을 움직이고 있는지? 향후 어떤 행보를 둘 것인지? 등 정책결정 시스템 진단과 예측 어려움이 증대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대북정책까지 평가와 대안마련의 복잡성이 더욱 증대하였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의 세분화된 평가와 함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 및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이며 변화무쌍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정치군사적 도발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설 1. 신흥 핵보유 국가의 전형적 전후 행태, 가설 2.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 가설 3.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 가설 4.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 행동, 가설 5. 대외 정책환경 변화 유도(대외적 협상주도권 확보, 남북관계 변화, 중국 견인 및 대북지원 유도) 등 다섯 가지 시각에서 분석하였고 이 대내외 변수들이 맞물려서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이 벌어졌다고 본다.

2장에서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가설 유형별로 분석한 후, 3장에서 북한당국의 공식행보·도발 행위자 분석·대북 소식통들의 실태정보에 기초하여, 시기별 특성과 양상을 북한의 대내 정치·군사·경제·사회적 측면과 대외·대남 측면 모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은 북한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며, 가설 2·가설 4·가설 3 등 대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대내 집권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대외적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가설 1과 가설 5 등 대외요인이 작동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대내, 대외, 대남, 남북관계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긴장조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망을 할 수 있다.

1. 대내 측면

북한체제 내부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 긴장조성의 핵심적인 평가와 전망은 김정은 정권 공고화, 정책요동 속 당-군-내각 충성경쟁, 측근 세력 구축, 권력구조 조정과정에서 생존과 이권을 둘러싼 기관본위주의 및 파벌 간 대립, 군사 및 경제사회적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

가. 평가

역사적으로 젊은 세습 리더들은 그의 독창적 리더십 유형과 체제(regime) 문화에 조응하는 통치시스템(a system of rule)을 고안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권력이 요동치거나 정권 내부 강력한 세력에 의해 꼭두각시(a puppet)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세습정권의 안정화는 미지수가 된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 선례가 있다.¹⁶⁸

이 교훈과 김정은의 미약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그가 독립적 리더

¹⁶⁸-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p. 2.

십과 지도성을 갖추기 때까지 북한 체제는 불안정한 정책결정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2년 7월 리영호 숙청과 2013년 11~12월 장성택 숙청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내부 지각변동이며, 김정은 정권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이 불안정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 지표는 권력구조 재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김정은 집권 2년간 주요 엘리트들의 잦은 변동이다.(<표 IV-1> 김정은 정권 2년간 주요 엘리트 변동)

<표 IV-1>에서 보듯이 김정은 통치 2년간 권력엘리트 상당수가 숙청/좌천되거나 새로이 진입하였다. 신임 권력엘리트 특징을 보면 첫째, 세대구조가 평균연령 76세 → 62세로 한 세대에 해당하는 15여 년 젊어졌다. 둘째,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통해 직접 발탁한 인물들로 충원되어 출신·학연 보다 개인능력이 중시되었다. 셋째, 당에는 기술전문관료들이 주로 발탁되었다. 넷째, 군에는 작전분야와 야전 지휘관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섯째, 내각에는 박봉주를 중심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인물들이 재기용되었다.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엘리트들이라고 평가된다.¹⁶⁹

¹⁶⁹ 박영자, “김정은의 통치술과 통치구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02, 2014.1.8); 이영중, “북 파워엘리트 31명 퇴장 51명 진입,” 『중앙일보』, 2013년 12월 19일.

〈표 IV-1〉 김정은 정권 2년간 주요 엘리트 변동

구분	직책	내용	확인 일자 / 출처
당 (黨)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 교체 : 주영식 → 유영섭(前 체신상)	'12.2.13 중방
	당 제1비서	● 추대 : 김정은	'12.4.11 중통
	당 정치국 상무위원	● 보선 : 김정은, 최룡해	
	당 정치국 위원	● 보선 :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당 정치국 후보위원	● 보선 : 곽범기, 오극렬,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당 중앙위 비서	● 선거 : 김정희, 곽범기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 선거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 선거 : 최룡해	
	당 중앙군사위 원회 위원	● 선거 :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당 중앙위 부장	● 임명 : 김영춘, 곽범기, 박봉주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 교체 : 곽범기 → 태종수(前 당 비서)	'12.4.30 노동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 교체 : 로배권 → 박영호	'12.7.14 중방
	당 정치국 상무위원	● 해임 : 리영호	'12.7.15 중통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 교체 : 리영호 → 현영철(인민군 차수)	'12.7.26 중통
	당 중앙위 부장	● 임명 : 한광복(前 내각 부총리)	'12.11.1 노동
	정치국 위원	● 보선 : 박봉주(前 경공업부장)	'13.3.31 중통
	정치국 후보위원	● 보선 : 현영철, 김격식(인민무력부장), 최부일	
	경공업부장	● 교체 : 박봉주 → 백계룡(前 강원도당 책임비서)	
당 제1부부장	● 임명 : 최휘(前 조직지도부 부부장)	'13.5.8 중통	

구분	직책	내용	확인 일자 / 출처
정 (政)	강원도당 책임비서	• 교체 : 백계룡 → 박정남(前 강원도당 비서)	'13.5.11 중방
	자강도당 책임비서	• 교체 : 류영섭 → 김춘섭(前 자강도당 비서)	'13.8.27 노동
	당 부장	• 임명 : 한광상(前 전 당 제1부부장)	'13.9.23 중통
	양강도당 책임비서	• 교체 : 김희택 → 리상원(前 개성시당 책임비서)	'13.11.30 중통
	당 부장, 정치국 위원	• 해임 : 장성택(모든 직무에서 해임, 출당 제명)	'13.12.9 중통
	국가품질감독 위원장	• 임명 : 최광래(前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국장)	'12.1.2 중방
	내각부총리	• 임명 : 김용진(교육위원회 위원장)	'12.1.5 중방
	합영투자 위원장	• 교체 : 리수용 → 리광근(前 통일전선부 부부장)	'12.2.1 중방
	체신상	• 교체 : 유영섭 → 심철호(前 체신성 부상)	'12.2.10 중방
	재정상	• 교체 : 박수길 → 최광진(前 재정성 부상)	'12.2.16 노동
	교육위원장	• 교체 : 김용진 → 김승두(前 이과대학장)	'12.2.16 노동
	중앙은행 총재	• 교체 : 리광근 → 백룡천(前 내각사무국 부장)	'12.3.8 노동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 교체 : 오응창 → 최정룡(미상)	'12.3.8 노동
	기계공업상	• 교체 : 조병주 → 리종국(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2.3.11 노동
	전력공업상	• 교체 : 허택 → 김만수(前 전력공업성 부상)	'12.4.6 중방
	상업상	• 교체 : 김봉철 → 리성호(前 상업성 부상)	'12.4.7 중방
	국방위 제1 위원장	• 추대 : 김정은	'12.4.13
	국방위 위원	• 임명 :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 해임 : 우동측	중통

구분	직책	내용	확인일자 /출처
	국가안전보 위부장	● 임명 : 김원홍(前 총정치국 부국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 교체 : 변영립 → 태형철(상임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 임명 : 박태덕(황북 당 책임비서), 전경남(인 민경제대학 총장)	
	내각부총리	● 임명 :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수도건설 위원장	● 임명 : 김인식	
	육해운상	● 교체 : 라동희 → 강종관(前 항만수상운수관리 기사장)	'12.5.3 평방
	문화상	● 교체 : 안동춘 → 홍광순(前 국가영화위원장)	'12.5.28 평방
	국가과학기술 위원장	● 교체 : 리자방 → 최상건(前 국가과학기술위 부위원장)	'12.8.17 중통
	내각부총리	● 임명 : 전승훈(금속공업상)	'12.8.18 중방
	평양시 인민위원장	● 교체 : 량만길 → 차희림(前 평양시당 비서)	'12.9.15 중통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 교체 : 리원일 → 강영수(前 도시경영성 부상 추정)	'12.9.19 평방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	● 교체 : 최희정 → 곽범기(당 비서 겸 부장)	'12.9.25 중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	● 임명 : 홍인범(평남 당 책임비서), 전용남(청 년동맹 위원장)	
	농업상	● 교체 : 리경식 → 황민(前 함북 농촌경리위원장)	'12.10.5 중방
	전자공업상	● 교체 : 한광복 → 김재성(前 전자자동화설계 연구소장)	'12.10.15 노동
	체육상	● 교체 : 박명철 → 리종무(조선축구협회위원장)	'12.10.16 중방
	금속공업상	● 교체 : 전승훈 → 한효연(前 황해제철연합기 업소 당조직대표)	'12.10.31 중통
	국가체육지도 위원장	● 임명 : 장성택	'12.11.4 중통

구분	직책	내용	확인 일자 / 출처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 교체 : 안극태 → 강형봉	'12.12.17 중방
	인민보안부장	● 교체 : 리명수 → 최부일(前 총참모부 작전국장)	'13.4.1 노동
	내각 총리	● 교체 : 최영립 → 박봉주(前 당 경공업부장)	'13.4.2 중방
	국방위원회 위원	● 임명 : 김격식(인민무력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 해임 : 김정각, 리명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 임명 : 최영립(前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 교체 : 태형철 → 홍선옥(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내각 부총리	● 해임 : 리승호	
	원유공업상	● 교체 : 김희영 → 배학	
	농업상	● 교체 : 황민 → 리철만(부총리 겸임)	
	화학공업상	● 교체 : 리성옥 → 리무영(부총리 겸임)	
	국가자원 개발상	● 교체 : 렬철수 → 리춘삼(前 채취공업성 부상)	
	도시경영상	● 교체 : 황학원 → 강영수(前 황북 인민위원장)	
	국토환경 보호상	● 교체 : 김창룡 → 김경준(前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보건상	● 교체 : 최창식 → 강하국(前 보건성 부상)	
	김일성종합 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 교체 : 성자립 → 태형철(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수산상	● 임명 : 리혁(前 신포수산사업소 지배인)	
	석탄공업상	● 임명 : 림남수 → 리영용(前 석탄공업성 부상)	'13.4.21 민주조선
	국가건설 감독상	● 교체 : 김석준 → 권성호(前 건설설계정보센터 기사장)	'13.5.6 중방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 교체 : 강영수 → 임훈	'13.6.30 노동
	문화상	● 교체 : 홍광순 → 박춘남	'13.9.20 중통

구분	직책	내용	확인 일자 / 출처
군 (軍)	총정치국장	● 임명 : 최룡해(前 당비서)	'12.4.11 중통
	인민무력부장	● 교체 : 김영춘 → 김정각(前 총정치국 제1부국장)	'12.4.13 중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임명 : 현철해(前 국방위 국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 임명 : 강표영(인민군 중장)	'12.5.8 중통
	총참모장	● 해임 : 리영호(인민군 차수)	'12.7.16 중통
		● 임명 : 현영철(인민군 차수)	'12.7.18 중방
	인민무력부장	● 교체 : 김정각 → 김격식(인민군 대장)	'12.12.21 중앙TV
	인민보안부장	● 교체 : 리명수 → 최부일(前 작전국장)	'13.4.1 노동
	총참모부 작전국장	● 교체: 최부일 → 리영길(前 5군단장)	'13.3.28 중통
	전략로케트군 사령관	● 교체: 최상려 → 김락겸	'13.3.28 중통
	해군사령관	● 교체: 정명도 → 김명식	'13.4.25 중방
	인민무력부장	● 교체: 김격식 → 장정남(前 1군단장)	'13.5.13 중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교체: 현철해 → 전창복(前 인민무력부 부부장)	'13.5.16 중통
	총참모장	● 교체: 현영철 → 김격식(인민무력부장)	'13.5.22 중통
	총참모장	● 교체: 김격식 → 리영길(前 작전국장)	'13.10.10 중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교체: 전창복 → 서홍찬(인민군 상장)	'13.11.16 중통	
기 타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 위원장	● 교체 : 안경호 → 김령성(조평통 서기국 제1부 국장)	'12.1.13 중통

구분	직책	내용	확인일자 /출처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1비서	• 교체 : 이용철 → 전용남(미상)	'12. 3. 22 중통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 교체 : 강지영 → 최진수(「조국전선」 공동의장)	'12. 3. 24 평방
	조선불교도 연맹 위원장	• 교체 : 심상진 → 강수린(불교도연맹 상무위원)	'12. 11. 19 전통문
	노동신문 책임주필	• 교체: 김기룡 → 윤우철(前 노동신문 부주필)	'13. 3. 31 중통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장	• 교체: 김령성 → 김완수(조국전선 서기국장)	'13. 6. 15 전통문
	조선그리스도 교연맹 위원장	• 선출: 강명철(前 그리스도교연맹 평양시위원장)	'13. 7. 9 전통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 교체: 장재언 → 강수린(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13. 7. 10 전통문
	조선중앙 통신사 사장	• 임명: 김창광(前 조선중앙통신사 제1부사장)	'13. 7. 18 중방
	김일성군사 종합대학 총장	• 임명: 김정각(前 인민무력부장)	'13. 7. 19 중방
	금강산국제 관광특구지도 국장	• 임명: 황호영(범청학련 부의장)	'13. 8. 3 중통

출처: 통일부 정세분석국, 『북한 주요인물 인사이동 日誌』(통일부, 2013.12)

권력구조 측면에서 리영호와 장성택 숙청을 기점으로, 김정일이 만들어준 위기관리체제인 ‘군부·행정 라인 중심 6~70대 군주도’ 당·군 지배연합을 해체하였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지배 정통성을 무기로 ‘보위·조직 라인 중심 5~60대 당주도’ 당·군 지배연합을 새로이 구축하였다.¹⁷⁰ 선군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질적으로 유사한 당·군 지배연합을 지속하더라도, 전임통치자의 측근연합을 반복하지 말라는 신생

¹⁷⁰ 박영자, “김정은의 통치술과 통치구조.”

독재정치의 행위유형이다.¹⁷¹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관련한 중요 지점으로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군사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북한군은 대외적으로 혁명과 해방을 위한 무력수단이며 대내적으로는 ‘정권과 체제유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외적으론 무력을 통한 대외협상에서 우위 차지, 내부적으로는 군을 이용한 경제건설과 치안질서 유지 동원 및 선군정치를 지속하며 무형적 요소와 비대칭 전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격형 전투서열 유지, 병력통제와 관리를 위한 반복적 정치사상 교육, 군 간부들의 충성경쟁 유도, 핵개발·장거리 미사일·사이버전·전자전 등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김정일 체제와 대비하여 김정은 체제 북한의 유형전력, 군사경제, 무형전력 등으로 구성된 자위력을 평가해 봤을 때, 미사일·핵, 무기·장비 생산 역량, 외화역량, 군사훈련 등의 유형전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재정 및 외화역량의 군사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단기적으로 약 5년간 김정은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군사력을 관리 혹은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형전력 분야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 군사경제력의 회복뿐 아니라 주요 군부 인사들의 잦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 또는 분열 등 무형전력의 평가 값은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수 지배연합의 견고한 응집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한의 주요 정책결정자 그룹의 한 축인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빠른 속도로 파괴했음을 의미한다. 감시에서 사형까지를 김정은이 의도했는가 여부보다는 그가 최종결정을

¹⁷¹-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은 1995년 북한을 김일성민족이라 정의한 후 사망 시까지 절대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측근연합을 견제와 균형 구조로 유지했다. 그리고 어린 자식에게 보위를 이양하며 노장청 세대, 백두와 만경대 혈통연계, 가신(김기남)-군부(리영호)-행정(장성택)-측근조직(최룡해)-재정(김경희)이란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김정은은 군부의 중심 리영호를 숙청하고, 2013년 12월 정책의 컨트롤과워 역할을 한 행정통 장성택을 제거하였다. 공통점은 독재권력 장악의 전통적 행위패턴인 빠른 속도와 전임통치자의 측근연합 교체이다. 장성택은 방계이나 김일성가계 일원이기에 더 신중했던 차이가 있었다. 80대 중반인 김기남은 노쇠했고 김경희는 건강악화와 장성택 사형으로 이전과 같은 활동은 불가능하며, 최룡해는 약삭빠르며 이해 타산적이라고 평가된다.

이때 주목되는 권력 파벌이 군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도발을 내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9~2013년 현재까지 김정은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군부는 주요 행위자였으나 시기별로 군부 영향력은 굴곡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2010년과 2012년 말~2013년 초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쇠퇴된 시기 군부의 대남 도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¹⁷² 이는 대남 도발을 통해 군부가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해석과 연동될 수 있다.

현 북한정세 동향에 이 함의를 적용할 때, 2013년 11~12월 장성택

¹⁷²- 2009년 11월까지 군부권력이 아주 강화된 첫째 시기이다. 둘째는 2009년 11월~2010년 11월로 군부는 위기에 처했지만 회생하였다. 셋째, 2010년 11월~2011년 말로 군부의 재강화와 권력기관 간 외화벌이 경쟁이 극심하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말~2013년 말 군부권력이 쇠퇴한 시기이다. 박형중, “김정은 권력 정착 과정에서의 군부동향(2009년~2013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23, 2013.12.2).

세력에 대한 숙청이 단행되던 시기 최룡해 등 군부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향후 북한 권력구조의 변동을 더 지켜보아야 하나 이를 2010년 북한상황과 함께 비교 분석할 때, 2013년 상반기 군부가 군사적 도발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여, 권력쇠퇴의 위기로부터 회생하면서 경쟁세력을 제거하는 데 나섰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는 가설 3에 대한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군부의 외화벌이 및 절대권력자와의 관계긴밀성 등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쇠퇴하는 시기에 대남 도발이 증가된 것을 군부의 정책결정에 자율성을 주목한 관료조직 모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선군정치의 권력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군부의 행태로 볼 수도 있다. 또 다르게 주목할 만한 평가 틀로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도발을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으로¹⁷³ 분석하는 것이다. 김일성에 의해 완성된 북한 군사행태의 역사적 특성을 중시하는 시각이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¹⁷⁴

북한은 역사와 현실에서 미국과 일본 등 제국주의 강대국의 위협에

173. 미소 핵대립 시기 미국이 사전억제에 중심을 두었던 것에 반해 소련의 군사전략은 전쟁승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특히 소련의 핵전략을 해석하면서 제시한 이론이 스나이더(Jack Snyder)의 전략문화이다. Jack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RAND, 1977). 이후 전략문화 이론은 국제정치와 안보연구계에 확산되었으며,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풍부해졌다. John S. Duffield, "Political Culture and State Behavior: Why Germany Confounds Neo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4 (1999); John Glenn, Darryl A. Howlett and Stuart Poore, *Neorealism Versus Strategic Culture* (Burlington: Ashgate, 2003); Michael C. Desch, "Culture Clash: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1998); Alastair I.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174. 황일도,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p. 117~118.

포위되어 독특한 전략문화를 형성했다. 국제기구나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기에 외교적 수단으로 자주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때문에 북한에게 무장투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강한 사상과 낙관적 의지 등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요인이 물리력 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상대편 사기를 꺾고 집단적 의지를 강화해줄 수 있는 전략·전술·무기체계를 선호한다. 즉, 전후방을 막론하고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도발을 선호한다.

더불어 객관적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기습적 도발을 과시하며 그 효과를 크게 한다. 북한 안보정책 결정자들의 관념 체계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되어, 행위자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재구성된 돌발 논리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각에서 북한 군사안보 정책 선택에서 이익 합리성 vs 비합리성이란 기존 개념들 대신 역사문화적 전통을 중시하는 전략문화로 해석가능하다. 즉, 북한 군사정책 결정과정에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략적 DNA’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저자의 또 다른 연구물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핵과 미사일 외에 장사정포의 전진배치와 재래식 무기 증대, 그리고 특수전 병력의 강화는 현재 북한 군사전략의 정체성 또는 문화적 속성을 보여준다. 그 군사행태의 인식구조는 첫째, 핵과 미사일만으로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핵억제력, 둘째, 재래식 전략 전진배치로 남한의 수도권지역 민간영역을 초기에 타격할 수 있다는 비대칭전술, 셋째, 극단적 도발로 상대의 행위를 제약하려는 공세적 태도이다. 각각은 정책결정의 불확실성과 민간피해 공포의 극대화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합리-비합리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갖는다는 것이다.¹⁷⁵

¹⁷⁵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 17; p. 175.

나. 전망

2013년 10~12월 김정은의 현지도로 볼 때 군부를 지도·관리·감시하는 당내 군부세력 활동이 두드러졌다. 최룡해와 김원홍 외 주목할 인물은 이 시기 김정은을 밀착동행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군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황병서와¹⁷⁶ 조직지도부·보위부·군부의 각 단위 실무 간부인 김정은의 근위대이다.

정책 전망과 관련해선, 김정은이 선군(先君)과 선경(先經) 간 갈등에서 선군정책을 분명히 하고, 리영호 숙청 후 꾸준히 재구성한 군부내 당주도 측근세력 입지를 강화한 점과 세대교체, 그리고 시장화와 비사회주의 검열을 통해 번성한 인민보안부(경찰세력)에 대한 국가보위부(정보세력)의 물질적 기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이 2013년보다 더 강화된 2014년 김정은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할 순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 6·28방침 등 경제개혁조치를 내놓고 부분적으로 시도하며 해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타진하였으나, 비핵화·자유화·민주화·개방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현실 정책실행에선 여전히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반한 선군 독재정치를 펼쳤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죽음불사의 결전의지를 불태우지 않는 한 큰 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난 2년간 김정은 정권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조성했고 호전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4년 실각한 장성택이 일선에 복귀한 후인 2005년부터 북한의 경제행정 정책이 보수화된 점, 2009년 화폐교환 조치를 장성택이

¹⁷⁶ 1949년생 현 64세, 당중앙위 후보위원 및 인민군 상장이다. 당에서 군을 통제지도하는 황병서는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안용현, “명령 제0051호는 김정은 시대 실세명부,” 『조선일보』, 6면, 2012년 7월 18일.

주도한 점, 최룡해가 화폐교환의 사회적 실패를 제기하며 중앙무대에 급부상한 점, 2013년 북한의 긴장국면을 전환시킨 5월 말 북중관계 개선에 최룡해가 나선 점, 그리고 통치자금 관리에 김경희 대신 여동생 김여정이나 이복누나 김설송 등의 역할도 가능한 점 등등을 고려할 때, 2014년에 2013년과 비교할 때 더욱 더 공세적인 대남 긴장조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긴 어렵다.

이와 함께 2013년 하반기 김정은의 현지지도 행보를 보면, 새로운 통치이념 및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전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드러난 대내 정책방향은 군부주도 평양중심 건설사업과 ‘건설의 대변영기’를 기치로 1970년대 김정일이 전 지역 친위세력 구축에 활용한 3대혁명소조운동과 유사한 집단 대중동원의 속도전이다.

또 다른 한편, 장성택 숙청이후 김정은 정권의 전체적 정책 향방은 북한 내 장성택 세력의 숙청 규모와 그 과정에서 생존·이권을 매개로 벌어질 관료층의 경쟁양상, 그리고 경제사회적 불안정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독립적 친위세력과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에 근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구축할 때까지 권력엘리트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이며, 비핵화나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에 경제전망도 어둡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증대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그 불안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많은 독재 역사로 볼 때, 먼저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막아줄 측근연합과 지지자들을 항상 주변에 두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절대권력자와 측근연합의 오랜 공생구조는 쉽게 깨지기 어렵다. 또한 최소한 300여만 조선노동당 당원과 간부, 200여만 군대 및 군수산업 종사자, 230여만 평양인구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북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30여만 규모의 지지자는 확보하고 있다.

2. 대외 측면

김정은 정권 긴장조성의 대외 측면에서 주요 평가와 전망은 핵국가 인정, 3대 세습체제 건재 과시, 대미와 대중 협상력 강화, 대북 투자 및 지원 유도를 키워드로 한다.

가. 평가

미국은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기조에 따라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선 행동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이란과의 대화에는 적극적 태도로 임하며 핵문제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은 2013년 9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급물살을 탄 이후, 지난 11월 24일 P5+1과 이란 간의 초기단계 조치를 담은 공동행동 계획(Joint Plan of Action)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정체되어있다. 미국은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2013년 북한의 대화 요구에 화답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정황은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요구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일방적 행동에 명시적 경고와 우려를 전달하고 있으며, 중국내 대북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의 대북관에 변화가 보이고 지도부의 대북관도 과거보다 북한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노후화된 5MW 원자로의 사고 가능성에 따른 피해(제2의 일본 원자로 사고)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지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직접적이고 명확해졌다. 북한의 도발을 상징한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2013년 3월에 마련하였으며, 한미 SCM을 통해 작권전환 연기 검토, 확장억지전략 구체화, 킬체인 및 KAMD 구축 합의,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 시 미국의 최첨단 무기 및 항모 한반도 배치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협상보다는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제재 해소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소위 ‘반공화국 태도’를 일소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핵뿐 아니라 전통·비전통 위협의 복합화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을 위시한 비대칭전력의 우위를 통해 낙후된 대칭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하며, 사이버 위협과 핵위협을 한반도 내부로만 제한시키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친미국가들로 확산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내부 체제안착과 충성심 확보 정책에 중점을 둔 결과, 내치와 외치 간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한·미·중을 상호 분리시키기 보다는 ‘대북정책 조율’로 묶어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 및 핵능력 강화와 대화제의를 동시에 가동시키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5년과 현 박근혜정부의 행보를 통해 북한도 기존의 대외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점을 북한의 행동 및 태도 변화에 맞추고 있으며, 중국 시진핑 정권은 후진타오 시대와 비교해 김정은 정권에게 국제사회의 규범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대의 측면에서 북한의 긴장조성 성과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대외 정책환경에 맞는 군사적 전략 및 전술을 재구

성해가고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의 대외적 긴장조성 메카니즘과 북한 군사전략의 고유성을 주목한 연구에서 일정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991~1998년 총 8권)에 나타난 북한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의 규범 및 정책 선호 담론을 해제한 연구에 따르면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북한의 군사 전략문화: 메시지와 등장횟수

메시지	등장횟수
A. 정체성 및 위협인식	총 106
A-1. 제국주의의 위협은 압도적이며, 조선은 언제나 그에 포위된 존재임.	58
A-2. 침략당한 인민들의 삶은 처참하므로, 복수에 나서는 것은 신성한 의무임.	24
A-3. 그럼에도 중국적으로 제국주의는 몰락할 것이고, 역사의 승리는 예정돼 있음.	24
B. 규범	총 388
B-1. 외교적 수단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으며 무력투쟁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67
B-2. 전략·전술·군사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 주체성과 창조성이 중요함.	131
B-3. 물리적 능력보다 오히려 낙관을 버리지 않는 의지와 사상이 중요함.	140
B-4. 모험주의를 배격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중요함.	50
C. 정책선호	총 203
C-1. 적의 배후와 핵심을 기습하는 비대칭 전략·전술·무기체계를 선호함.	75
C-2. 객관적 여건이 불리할수록 공세적 태도를 과시할 필요가 있음.	55
C-3. 우호세력과의 통일전선이나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뤘다가야 함.	63
C-4. 적의 하부세력과는 부분적인 불가침 타협 등이 가능함.	10
합계	697

출처: 황일도,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들,”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1호 (2013), p. 126.

구체적으로 장사정포 등 재래식 군사력 관련 북한의 공식발표나 공간 문헌을 살펴보면 일정한 특성이 발견된다. 의지와 사상 등 관념 중시, 국가위신 중시, 열악한 상황에선 오히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세적 태도 과시, 이를 위해 상대측에 대한 타격능력 과시 등이다. 그리고 존엄 유지가 생존 또는 안보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이익이라는 규범이다. 자존심이 낙관적 정신력이나 충성심 유지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존엄과 자존심을 건드릴 시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복수의 정서이다.¹⁷⁷

나. 전망

북한과 같은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택을 사고할 때 고려해야 할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제기한다. 첫째, 신생 핵국가들은 도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둘째, 일단 긴장상승이 시작하면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적의 핵물질을 폐기하기 어렵다. 넷째, 김정은의 동기를 명심하라.¹⁷⁸

이와 연관되어 현 긴장상황에 대해 또 다른 미국의 군사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았기에 그는 그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그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일차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는 많은 섭정자(regents)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 리더십 유형은 그가 위기관리와 도발 결정들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영향을 미친다.¹⁷⁹

177.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pp. 170~174.

178. Lowell H. Schwartz, "4 Factors to Consider in US Options for North Korea, Christian Science Monitor."

179.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p. 3.

또한 이 리더십 스타일은 김정은이 경험을 축적하고 독립적 정책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들(측근들)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기 쉽다. 김정일 체제와 달리 김정은 정권에서는 한번 긴장이 고조되면 그 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정치 정책 구조 하에 놓여있는 평양이 외교·안보·경제제재 분야에서,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대우하고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군사 물리적으로 유도한다고 평가된다.¹⁸⁰

북한의 도발 능력과 가능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개적 도발로 북한은 육해공군 분야에 광범위한 도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해에서의 군사력과 미사일 능력 등은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비공개적 도발이다. 김일성의 항일전투를 배경으로 한 군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릴라 왕조 북한은 그 전투 담론을 자립의 기초로 정교화하였다. 따라서 비공개적 도발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은밀한 도발은 내부 정권 공고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¹⁸¹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할 향후 몇 년간 외부세계를 길들이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지속될 것이다. 여러 형식의 도발이 가능하나 평양은 NLL 폐지와 해양 경계선 재설정을 명분으로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남한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도발은 그 전략의 일부분이다. 우려 지점은 북한의 도발이 권력내부의 불안정성에 의해 촉발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그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외부세계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¹⁸²

¹⁸⁰- *Ibid.*, pp. 3~4.

¹⁸¹- *Ibid.*, pp. 27~30.

¹⁸²- *Ibid.*, p. 54.

북한은 과거에도 유사한 패턴의 도발적 수사와 행동을 한 후 자제하다가 외부세계와의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 시위와 한미동맹에 대한 확증은 그리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특히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될 때 긴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테러의 예민한 균형(delicate balance of terror)’을 기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⁸³

역사적 합리성에 기초할 때 국가가 전쟁을 결정하는 3대 이유는 첫째, 적대·중오의 원초적 폭력성, 둘째, ‘전쟁을 자유로운 정신활동’으로 만들게 하는 우연성, 셋째,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이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서 실현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대한 합리주의적 이익계산이 가능한 지점이다.¹⁸⁴

한편 북한은 장사정포 전력의 전진배치로 핵억제 전략에서 논한 2차 보복타격 전력을 확보하였다. 비대칭 위협논리가 장사정포 전진배치에 대한 억제 목적설을 논증한다. 즉, 유사 시 남한 민간시설을 대량 파괴할 수 있기에, 서해 NLL 등에서 분쟁 발발 시 한미가 대응타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사전억제 보단 응징과 처벌의 목적에 집중되어 남한으로 전진 배치된 북한의 군사력 구조는 남한의 군사적 압력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북한의 급격한 권력요동 과정에서 내부에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면 피할 수 없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현 구조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 수뇌부의 붕괴를 피할 방법도 매우 제약된다. 장사정포 공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파괴된다면 북한체제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⁸⁵

¹⁸³- Andrew Scobell, “A Delicate Deterrence Dance with North Korea, U.S. News & World Report.”

¹⁸⁴- 김종대,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pp. 225~226.

¹⁸⁵-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p. 155; pp. 164~165.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이 대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은 내부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권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내적 불안정이 외부로 향한 도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과도 관련되어, 권력이양이나 민주화를 고려하지 않는 독재정권이 강력한 통제제도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인 외부요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위기를 반란 예방과 진압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전쟁과 안보불안, 민족주의 활용 등이다. 지구의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높은 자연재해 발발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갈등 및 21세기형 민족주의 득세는,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정책실패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특히 현재 미-중, 중-일, 한-일 갈등은 2014년 김정은 정권의 통치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 동북아 갈등 구조를 김정은 정권 강화에 활용할 것이다.

3. 대남 측면

대남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 긴장조성의 평가와 전망은 북한에게 이로운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함께, 특히 군사기술적 부문을 중시해야 한다.

가. 평가

2013년 북한의 대남 정책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정전협정 백지화 및 전시상태 돌입을 비롯한 각종 대남 군사적 긴장고

조 조치를 취하였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명박정부 대북정책과의 동일시(대북 대결정책) →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원칙론에 대한 비판 → 박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 이후 비판과 기대 및 관망의 교차 → 통일부의 남북관계기본계획 제정 이후 비판책자 발간 등의 순서로 비판하였다.

북한이 5월 말 최룡해의 방중이후 6월 들어 유화국면을 조성하다가 9월 말 이산가족 상봉 일방 연기 이후 비난공세를 강화한 것은, 남북관계의 주도권 약화를 의식한 것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추동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권력구조 변동으로 총체적 정책조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남한이 ‘원칙의 결실’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불만 표출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을 전개하였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도발국면(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대남 위협 과시)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위협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유화국면(남북회담 호응, 대미대화 제의, 중국의 요구 일부수용)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부담 없는 분야에 대한 양보를 통해 남한을 협상으로 유인하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확장하며, 대미 협상진입과 관계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은 비난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가면서도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반대의사보다는 태도를 문제시하면서 관망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명박정부 초기 시점에 비해서 비난 논조의 강도가 낮고 대북정책 변화의 기대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주장들을 열거하면서 김정일 시대에 비해 세부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특징을 보였다. ‘원칙의 결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원칙론과 동일하며, 남북관계에서의 원칙은 7·4 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밖에 없다고 강변하였다.

남북관계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에 대해 결국 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6·15를 반대한다는 논리이자 반통일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남한의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남북관계 주장에 대해, 남북은 잠정적 특수관계이기에 이러한 논리는 통할 수 없다고 맞대응하면서 ‘보통국가 관계론’은 반통일적 궤변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¹⁸⁶

주요 평가지점인 북한이 남북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7·4 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을 지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제외한 것이다. 이는 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한 북한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합의서는 1991년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세적 입장에서 체결된 합의로, NLL 관할권 인정, 남북공동위의 전면적 가동에 따른 대남 카드의 소멸 등과 같은 불리함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본합의서 이행보다는 ‘잠정적 특수관계’와 같은 기본합의서 내 일부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위용 성격이 강한 핵무기 재원 평가를 제외하고, 김정은 정권의 대남 군사위협 전력의 성능과 재원을 크게 육

¹⁸⁶ 북한은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원칙과 사업 관련 추진기조 중 하나인 억지력 확보와 대화에 대해서, 강경과 압박의 대북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남한이 이 사업을 돈벌이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분열을 영구화하고 평화의 허울을 쓴 대결지역으로 악용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상 및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먼저 WMD 및 육상 전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¹⁸⁷

첫째, 단거리(탄도지대지) 미사일로 KN-02, 스커드 A, B, C 이다. 북한군은 2013년 3월 15일 KN-02 단거리미사일 2발을 동해 공해상으로 시험 발사하였다. 3월 11일 시작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KN-02 지대지미사일은 구 소련제 단거리미사일 SS-21을 개량한 고체연료형 이동식 미사일로 발사예비시간 없이 바로 발사가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는 120km로 현재 사거리를 확장한 KN-06로 개량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커드 B(북한식 화성5호)와 스커드C(화성6호)는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과 고정식 발사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용거리 300~500Km로 약 700여 기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정거리 700km의 스커드 D의 개량형인 스커드 ER을 소량생산하고 있다.

둘째, 중거리(탄도지대지) 미사일로 노동 1-2호, 무수단이다. 북한은 1993년 5월 동해에서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500km 비행 후 낙하하였다. 추후 연구결과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1,300km로 추정된다.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로 사거리 3,000~4,000km로 파악된다. 시험발사가 없이 양산 배치되었다는 점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기술을 공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수단 미사일은 2010년 10월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하여 2013년 4월 초 동해안에서 기습발사 가동 등이 이루어졌다. 무수단은 옛 소련의 R-27(SSN-6)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근간으로 개발된 것으로

¹⁸⁷ 북한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와 재원 및 수량은 영국의 Global Security 발표에 따른다.

추정되며, 재원은 10톤급의 액체연료 추진형이며 탄두중량 1~1.2톤, 2009년 기준 50여 기가 실전 배치되었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로 KN-8(퍼레이드 시 공개)·대포동 1호·2호·은하 2호·3호 로켓 등이 개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2013년 3월 29일 전략미사일 부대 긴급작전회의 주재 시 ‘전략군미본토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전계획도가 등장하였다. 대포동1호는 액체연료 추진으로 사거리 2,000~2,500km였으며 대포동 2호는 2006년 7월에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대포동 2호 개량형으로 2009년 4월에 은하 로켓2호(2단 로켓), 2012년 4월 은하 로켓3호(3단 로켓)를 시험발사하였다. 액체연료 추진으로 3,000~6,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N-8(화성13호)은 2012년 4월 군사퍼레이드 시 공개된 것으로 대륙 간 탄도급(ICBM)으로 추정되며 2단 로켓으로 사거리 5,000~6,000km이다.

넷째, 무인타격기 실전배치 공개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2013년 3월 20일 항공군 및 포병부대훈련 현장을 찾아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관련사진을 공개하였다. 북한의 무인타격기는 가미카제 같은 자폭형으로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십 km떨어진 목표물에 날아가 충돌하면서 자폭하는 방식이다. 그 기능은 레이더로 유도되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남한 군의 지휘소·포진지 등을 공격하는데 활용가능하다.¹⁸⁸

북한은 2010~11년 사이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국가로부터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스티리커(MQM-107D) 여러 대를 도입하여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원은 길이 5.5m, 날개길이 3m, 최대속력 925km/h

¹⁸⁸ 한편 미국의 스티리커·리퍼 등 무인공격기는 공격하고 귀환하여 여러 차례 사용 가능하다.

로 상승고도는 1만 2천m에 이르고 추진기관은 제트엔진을 사용하며 작전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수준이다. 북한의 무인타격기는 레이더기 지공격용 자폭용으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하피 무인기와 유사하다. 이 무인타격기를 황해도 지역의 4군단 포병부대에 배치해 서북도서의 우리 군부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대공무기이다. 북한은 13년 4월 5일 ‘기록영화’를 통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자행고사로켓’(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을 공개했다. 한미양국의 항공기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선전했지만 사거리 5km, 최대고도 3,5km, 속도 550m/s, 중량 41kg, 길이 2,190mm, 직경 120mm이다. 러시아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용미사일인 SA-13Gophe와 유사하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헬기와 A-10 등 지상공격기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평가된다.

여섯째, 주체포(170mm 장사정포 혹은 곡산포¹⁸⁹)이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11일 백령도에서 11km 떨어진 월내도 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 포병부대를 방문하였다. 이들 지역에 배치된 주체포는 최대 사거리 54km로 남한의 K9 자주포 보다 길기 때문에 주체포로 연평도를 타격할 경우, 남한의 K9 자주포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비대칭 공격을 하지 않을 경우 연평도에서 주체포를 공격할 수 있는 포병전력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구경 170mm, 발사속도 분당 1~2발, 사거리 54km이다.

일곱째, 신형 대구경 방사포(다연장 로켓)이다. 북한은 2013년 5월 18일 강원도 원산인근에서 직경 300mm이상의 대구경 신형방사포 2발을 발사하여, 약 140~150km 비행 후 낙하하였다. 북한이 기보유한

¹⁸⁹- 곡산포는 한미 측이 곡산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힌 이름이며 북한식은 주체포라고 한다.

107mm, 122mm,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는 최대 사거리가 65km에 불과하다. 북한은 5월 20일까지 총6발의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여 130~150km를 비행한 바 있다.

시험 발사 시 최대사거리의 70~80%이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사거리는 180~200km에 달한다고 평가된다. 주한미군의 오산, 평택기지, 충남계룡대 3군 본부, 주요 공군기지 등은 기존 지대지 미사일로 공격 가능하지만, 지대지 미사일에 비해 즉각 발사할 수 있고 생산 비용이 싸며 화학탄을 장착할 수 있는 방사포의 경우 그 위협이 배가될 것으로 평가된다.

여덟째, 호위총국 요원들의 신형탄창이다. 김정은이 3월 11일 월내 방어대 방문과 관련한 사진에서 공개된 바, 개인화기의 탄창의 길이가 가스할대 구멍까지 연장된 대용량 보충용으로 신형탄창을 자체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해상 전력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신형 반잠수정이다. 2013년 3월 23~25일 김정은의 1501부대 방문 시, 북한관영매체에 '상부만 노출된' 무기 사진이 보도되었다. 군사전문가는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동행하고 첨단전투 기술기재를 연구 개발하는 부대를 방문한 점을 근거로 들어 반잠수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이 사진의 공개 의도는 이 군사무기가 한국의 '수상함'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형(스텔스) 반잠수정은 해상전술무기로서 레이저거리 측정기와 조준경으로 통제되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형반잠수정은 정찰총국이 운용하는 기존의 대동 II급 반잠수정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좌우현에 어뢰발사관이 장착되어 있다. 기존 대

동2급 반잠수점은 길이 17m, 높이 2.2m, 무게 5~15t이다. 잠수상태에서 수상함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선체 상부에 레이저거리측정기와 조준경이 함께 통합된 장비를 부착하고 있다. 레이저거리측정기와 조준경이 함께 통합된 장비에서 산출한 재원으로 장착된 어뢰를 유선 유도하는 사격통제장치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레이더의 난반사로 탐지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해수면 1m 내외의 수심에서 반잠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한군의 수상함을 어뢰로 공격할 수 있다.

둘째, 공기부양정이다. 2013년 3월 25일 동해 원산일대에서 실시된 북한의 국가급 훈련에 공기부양정이 등장했다. 공기부양정 1대에 1개 소대 병력을 태우고 시속 100km 가까운 고속으로 해안 갯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기습상륙이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백령도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진 황해도 고압포에 6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완성하였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3년 12월 6일 국회정보위 전체회의 보고에 따르면, NLL 인근에 북한의 공격형 헬기 60여 대 배치, 다연장포 200문 서북 도서를 포함 전방 지역에 배치가 이루어졌다. 다연장포 200문 가운데 서부 전선에는 주로 122mm 방사포가 집중 배치되었고, 일부는 북방한계선 북방으로 240mm 개량형 다연장포가 혼합 배치되었다고 한다. 또 핵물질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동창리 방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을 수차례 실시했고 핵미사일 확충에도 주력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장성택 실각설이 전해진 뒤 북한군의 특이 동향에 대해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¹⁹⁰

¹⁹⁰- 김봉기, “김정은, 대대적 세대교체…40~50대 90여명 발탁,” 『조선일보』, 2013년 12월 7일.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서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 가능하며 남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전망

전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소이다. 크게 북한의 내부요인으로 정치·군사·경제적 수요와 대외관계 요인으로 관련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 대내수요와 대외요인들에 따라 수세적으로 반응하거나 선제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소들은 내부상황이나 주변정세 등에 따라 시기나 국면마다,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¹⁹¹

이 요인들의 불확실성 증대와 복합적 특성 때문에, 흔히 한미 정책

19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 수요로는 정책주도 세력(보수강경-온건개혁파), 정치적 정통성·체제결속·주민통제 강화 계기 수요(권력안정-불안정), 사회적 불안정 심화 정도(사회 안정-불안정), 평화체제 협정 의제 집중도(이념적 수사-실제 목표),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의 간섭 우려 등이다. 군사적 수요로는 핵·군사위성·미사일 기술개발 필요성, 군 쇄신 필요성, 군 전투력 향상(군기강과 재래식 군비증강) 필요성, 군수 지원 제약 정도(절박-여유), 군 병력의 경제(농촌, 건설) 동원 필요성, 한·미의 군사동향에 대한 반응 필요성 등이다. 경제적 수요는 국제적 압박감(제재 실효적-상징적), 지배연합 유지 재원 수요(절박-여유), 군사력 건설 재원 확보 수요(절박-여유), 인민생활향상/외자유치 수요(절박-여유), 대중국 경제 의존도 분산 수요, 주민과 군병력 경제(농촌) 동원 필요성 등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정책 우선 순위), 대북억제력 강화 정도(군비증강-속도조절-군비감축), 형식적 또는 실질적 양자 회담 수용 여부, 대북제재 변화(강화-완화) 및 평화의제 수용 여부 등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동참 정도(형식적-실질적)와 중재력 발휘 정도(적극-관망)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관련해서는, 핵문제 우선순위(선비핵화-병행-남북관계 우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거부-이행), 흡수통일 공문화 여부(흡수/북한 자극-공존), 대북억제력 강화 정도(군비증강-속도조절-군비감축), 대북대비태세(강화-이완), 남한 내 정치-정책적 갈등 정도 등이다. 그 외 요소로 일본이나 유럽의 대북관계(제재 강화-협력 확대) 등이 존재한다.

담당자들이 사고하는 북한의 대남정책 행태로서 ‘북한의 도발 → 북한 주도 유화국면 개시와 실패 → 남북 간 공방 지속과 관계악화 → 북한의 재도발’이란 긴장조성 패턴을 정형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다. 2000년대까지 이 패턴이 자주 보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 체제 이후 북한의 내부정치와 연동된 대남·대외 정치의 변화와 함께 불안정한 행위 패턴이 증대하였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양태를 보면 시기와 국면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책결정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도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변동과 함께 정책결정 메카니즘의 불안정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장조성 등 정책의 행태가 변화하는 예민하고 복합적인 과정을 주목하면서, 북한의 긴장조성에 대한 관성적이고 정형화된 인식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의 대남 도발을 전망하는 것뿐 아니라 남한의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준다. 관련국들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정치구조나 세력관계 등 내부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의 내부흐름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진행되는 외부의 대응이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할 때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착된 인식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인 전술적 인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주도권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5·24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와 같은 대남정책 변화의 모멘텀이 주어진다면, 북한은 유화적 국면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대외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협의 진전의 장애들은 산적해 있다. 남한의 대

북정책도 북한이 요구하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 정상선언의 이행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한의 대남환경에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핵개발 수요가 존재하고 대내정치 불안 및 세력갈등 등으로 대남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다, 한미 군사협력 강화나 대북 심리전 등이 북한을 자극하면서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환경에 근거할 때 다양한 대남정책이 시도될 것이며, 대남 공개적 도발과 비공개적 도발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4. 남북관계 측면

가. 평가

김정은 후계시절 발발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적대와 즉각 보복의 원리가 21세기 남북에 정착하는 군사적 긴장구조를 만들어냈다.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¹⁹² 첫째,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의 불안이다.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측이 군사안보 위주로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둘째, 육해공 합동전력 모두가 수행될 수 있는 양상으로 진화하여 무력분쟁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증대했다. 남북 모두 서해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가능한 전력배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정치권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성격이 커졌다. 즉각적 대응과 보복을 하라는 남북의

¹⁹²- 김종대,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군사대응전략은 최고정책결정자가 현장에 있지 않는 한 적절히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군사 지휘관의 판단에 의존성이 커졌다.

지난 10년 이상 다섯 차례 서해교전의 원인과 양상을 종합하여 그 발생이유를 정리하면 여섯 가지 논리가 도출된다. 첫째, 국가의 핵심 이익이 있는 서해에서 남북의 결전준비, 둘째, 남북분쟁에 편승한 강대국 재균형 정책의 평화파괴, 셋째, 장기전략과 시스템 부재로 해역 안정성 파괴, 넷째, 군에 대한 민간통제 실종으로 평화위협, 다섯째, 전 시작전권 없는 한국 작전본부와 사령부의 무능이 평화파괴, 여섯째, 안보실패를 국내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한 정치권력의 문제이다.¹⁹³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적대적 상호성’이 동북아지역의 미중 패권갈등과 맞물려 상승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불안정성과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전망

남북관계 측면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시각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개 대미·대중 관계개선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하나, 대남 협상전략 구조는 국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의 대북전략 구조·남한 보수단체의 대북 심리전·남한 정부의 대북 태도·남북경협 정책방향 등에 대응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또한 남북한 중 정책 영향력이 큰 쪽에서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영향력도 크다.¹⁹⁴

¹⁹³ 위의 책, pp. 334~345.

이 인식들에 기초할 때, 한반도 정세는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과 대외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 같은 남북관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의 대남정책 의도를 해석 및 전망할 뿐 아니라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과 서해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구조는 상호 영향력 게임에서 남한에 유리한 구조로 작동되진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시기 수립된 ‘적극적 억제 전략’은 억제와 안정이 아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징과 보복의 대응 기조로 북한의 군사전략과 유사하다. 핵을 가지지 못한 남한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기 등 첨단무기를 활용해 핵과 유사한 효과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대칭 능력 강화”인 남한의 적극적 억제 정책은 긴장고조 상황에서 보여 지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상에서 남한 역시 극단적 결과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¹⁹⁵

문제는 미소 냉전시기 고전적 대응 방식이 한반도에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북한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은 남한이 위기 상황시 남한 현장 지휘부에서 상부의 지시 없이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정책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겠는가이다. 또한 남한의 한계를 북한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군사전문가들도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

194. 김연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경협정책: 구조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2013), pp. 40~41. 한편 개성공단 발전 및 3통문제 등의 해결 관련해서도, 북한 내부의 군부-내각-대남부서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한반도 정세의 정치군사적 안정이 중요하다. 북한 군부가 당 지도 하에 있다고 하나, 국방력 강화 정책과 경제 강화 정책은 상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및 쿠바 경우처럼 대외개방의 수혜가 군부로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진단된다. 위의 책, pp. 43~44.

195.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pp. 238~240.

은 북한에게 더 이롭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군사정치 문화는 북한의 전략문화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자위권 관련해서 남한이 국제법적 규범에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이다.¹⁹⁶

전체적으로 향후 북한은 2014년에도 대남 강공과 유화 혼합전술로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대북지원 정책을 유도할 것이다. 6자회담 관련하여 북한의 의도뿐 아니라 긴장한 동북아 정세상 당분간 회담 재개 전망은 낮으며, 회담이 재개되어도 북한은 북핵의제를 피하고 ‘세계 핵군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관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1월 12일 김정은은 북한군에서 적군(敵軍)을 와해하는 공작 업무와 대남 심리전 등을 담당하는 요원인 적공(敵攻) 간부들을 불러 모아 대대적인 격려 및 치하를 하는 제4차 군 적공일꾼열성자대회를 지도했다.¹⁹⁷ 이 대회 상황과 최근 북한동향을 볼 때, 대남 통일전선 전술과 함께 4세대 전투(fourth-generation warfare: 4GW)¹⁹⁸ 양상을 더 다양하게 드러내며, 남한 정치권과 사회에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¹⁹⁶- 이는 1960년대 중반 미소 냉전시기 소련의 결사지지에 대한 미국의 확산 결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전면적 핵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미국의 전략에서 차용한 것이다. 위의 책, pp. 241~242.

¹⁹⁷- 이 대회에서 소위 적공일꾼들은 김정은 결사옹위의 맹세와 결의를 다졌다. 『로동신문』, 2013년 11월 12일.

¹⁹⁸- 4세대 전투는 비대칭 전투(asymmetric warfare)와 비정규 전투, 그리고 심리전과 정보전 등 직접적 물리적인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전쟁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양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심리전, 첩보활동, 비밀작전, 전자 및 정보 작전, 파괴공작, 테러, 게릴라 활동 등을 지칭한다. William S. Lind, Maj John F. Schmitt, and Col Gary I. Wilson, “Fourth Generation Warfare: Another Look,” *Marine Corps Gazette* December 1994, pp. 34~37

V.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에 대해 한미 군사적 대응전술에 기초하여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형적인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¹⁹⁹

첫째, 한미가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고 억제할 것이라는 확약(commitment)을 단일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반대를 피해나가야만 한다. 또한 미국 정책결정자와 군부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남한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 정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NLL에 맞춘 통합된 해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잠수함 전쟁(Anti-Submarine Warfare: ASW)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한의 해군력을 키우고 과시적 시위를 해야 한다. 더불어 남한의 안보·방위 투자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실전에 활용 가능한 안보 교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정보력을 확장하고 잠재적 동기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해안선 내외 북한의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동기와 내부 정권 역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시에 비례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격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동일한 영역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공격이 해상에서 일어난다면 해상에서 대응하는 식이다.

¹⁹⁹-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pp. 55~57.

그리고 긴장 상승과 하강의 신호를 잡기 위해 북한의 미디어에 긴밀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다.²⁰⁰

그러나 이 대응방향은 적대국 간 일반적 군사교리에 기초한 것으로 서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 고도화에 따른 맞춤형 전술로는 구체성뿐 아니라 위기 억제력이 떨어진다. 행정책과 군사적 대응 중심으로 북한을 사고하는 미국 대북정책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핵의 확산 억제로 그 대응 중심성이 변화하면서, 평화조성과 관련한 주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서해위기와 남북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군사 전략 및 전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불확실성 증대 및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정도가 높아진 정책 환경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북한을 제3의 주변부 변수로 인식할 수 없다. 통일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과제인 우리에게 북한문제는 상수이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1차적 영향권 하에 있다.

북한 내 쿠데타나 시민혁명 또는 역내 전쟁도발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오마바 2기 임기가 끝나는 향후 3년간 미국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나 문제해결 노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미국의 산적한 국내문제 및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볼 때 그러하다.

²⁰⁰-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pp. 56~57.

그러므로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 정부의 2014~17년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로서 통일과 북한문제 해결의 중요성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중견국가로서의 힘은 물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서해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적대와 맞대응의 군사력 배치로 한반도에 군사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의도에 따른 새로운 도발 가능성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이 현재화되기 쉬운 한반도 긴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평화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최소 향후 4년간 실행해야 할 균형·진화·통합을 키워드로 한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결합한 중범위 수준의 정책과 미시적 액션플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국제관계에 우선하는 한반도 안정화와 남북관계 중시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개성공단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남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친북/반북, 보수/진보, 적대/포용의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이 기조에 따라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대국민 여론구축 및 합의를 모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 친(親)한파가 형성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우선 북중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방안 설계와 다양한 대북 네트워크를 정책 테이블로 모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서 평가했듯이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억제전략은 정책결정의 위험 비용을 너무 높여 놓았다. 군사 현장에서 그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의 유화정책은 가능하면 위험한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선군정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유화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는 수령독재 시스템이 김정은 정권에서 단시일 내에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²⁰¹

현재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오히려 그 시스템의 역사적 특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의 전략문화가 단기간 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배격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 “우호세력과의 통일전선 추진”, “불가침 타협 가능”이라는 전략문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군사분야에도 ‘개인’과 ‘경제적 이익’ 규범이 자리 잡힌다면, 전략문화 변화와 함께 군사적 행위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²⁰²

나아가 긴장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 재정립, 정치논리에 빠지지 않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감정적 영토분쟁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여론이 중요하다. 서해전투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²⁰³

201. 전략문화가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외부적 충격이 한 문화권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경우, 둘째, 통치자가 새로운 이념으로 지배계급과 주민들을 설득시킬 경우, 셋째, 정치군사적 정책결정집단 내 이전과는 다른 인식틀을 지닌 엘리트집단이 주도권을 가질 경우이다. Darryl Howlett, “Strategic Culture: Reviewing Recent Literature,” *Strategic Insights*, Vol 4, No. 10 (2005), p. 7.

202.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pp. 244~249.

203. 김종대,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pp. 346~348.

첫째,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평화·안정·협력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둘째, 외교·군사·정보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와 효율적 시스템이다. 셋째, 새로운 평화공존 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정세를 남한이 주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높은 결의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과 비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동반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말 북한의 대남비방 행보에는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절실한 구애와 의도가 보인다.²⁰⁴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제의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불안정한 북한권력 변동에 파장을 줄 수 있다면, 향후 북한의 민주화와 민주적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남한이 대북 영향력을 확장하여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고 대남 정책결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작동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14년도에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한발 더 나아가 공세적인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²⁰⁴ 이와 관련해 “박근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개질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1.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정권》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2.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3. 신뢰인가 대결인가. 4. 외세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5. 누가 도발자인가. 6. 비방중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중지는 누가 해야 하는가. 7. 선택은 누가 바로 해야 하는가.”로 구성되어 있고, “대결과 전쟁은 자멸의 길이다…지금이야말로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할 때”라며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25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 김중대.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서울: 메디치, 2013.
-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 Glenn, John, Darryl A. Howlett and Stuart Poore. *Neorealism Versus Strategic Culture*. Burlington: Ashgate, 2003.
- Johnston, Alastair I.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Mesquita, Bruce Bueno de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 Snyder, Jack,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RAND, 1977.

2. 논문

- 권양주. “북한의 회담전략과 의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국방연구원), 2013.
- 김동엽.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 김연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경협정책: 구조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2013.
- 박영자. “김정은의 통치술과 통치구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02, 2014.1.8.
- 박형중. “북한 정권의 긴장고조 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12, 2013.4.11.
- _____. “김정은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동향(2009년~2013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23, 2013.12.2.
- 이기동.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2013.
- 이호령. “북한 도발 위협 가능성 평가와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국방연

- 구원). 2013.
-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2013.
- 장용석.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6자회담: 대내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2013년 11월호, 2013.
- 황일도.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 Desch, Michael C. “Culture Clash: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1998.
- Duffield, John S. “Political Culture and State Behavior: Why Germany Confounds Neo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4, 1999.
- Howlett, Darryl. “Strategic Culture: Reviewing Recent Literature.” *Strategic Insights*. Vol 4, No. 10, 2005.
-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3. 기타자료

- 『데일리NK』.
- 『자유아시아방송』.
- 『중앙일보』.
- 고재홍. “김정은 정권의 軍 지도방식의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10.31.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nk&boardId=b2196b49919cc4d8da7be7f6&pkey=2>.
- _____. “김정은체제 하 북한군부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5.31.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nk&boardId=3155693dc3a605a4fb9343b1&pkey=2>.
- Bennett, Bruce W.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 Sign of Weakness, Not Strength.” <www.rand.org> February 15, 2013.
- _____.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The RAND Corporation <www.rand.org>.

- Gause, Ken 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CNA <www.cna.org>, July 2013.
- _____.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CNA Occasional Paper, September 2013.
- Lind, William S., Maj John F. Schmitt, and Col Gary I. Wilson, “Fourth Generation Warfare: Another Look, Marine Corps Gazette.” December 1994.
- Mansourov, Alexandre. “North Korea: Enduring Short-Term Pain for Long-Term Gain.” <<http://38north.org>> July 12, 2013.
- Schwartz, Lowell H. “Thinking Through Options on North Korea, Christian Science Monitor.” <www.rand.org> May 3, 2013.
- Scobell, Andrew. “A Delicate Deterrence Dance with North Korea, U.S. News & World Report.” <www.rand.org> April 11, 2013.
-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milexdata.sipri.org/files/?file=SIPRI+milex+data+1988-2012+v2.xlsx>>.

4. 북한자료

- 『로동신문』.
- 『조선신보』.
-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

부록



〈표 1〉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북한당국 행태: 2012년 9월~2013년 1월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9.22	대남	인민군 서남 전선사령부 명의 보도	우리측의 경고사격을 거론 하며, 이는 다른나라 어선들 의 어로작업을 빌미로 한 군 사적 도발로, 강력한 타격행 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2일
2012. 9.23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군의 NLL 침범 北 어선 경고사격 퇴거 조치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3일
2012. 9.25	대내	최고 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개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5일/ 『조선중앙방송』, 2012년 9월 25일/ 『조선중앙TV』, 2012년 9월 25일
2012. 9.27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내 용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7일
2012. 9.28	대외	외무성 대변인	미얀마에 북한과 관계단절 압박과 관련 미국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8일
2012. 9.29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문답	NLL 관련 우리 정부 및 주요 인사 입장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9일
2012. 10.4	대남	6·15선언 실천 남·북· 해외 위원회 호소문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6·15, 10·4 선언 이행을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4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0.6 ~10	대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5돌(10.8)을 맞아 ‘중앙보고대회’(10.7. 김정은·장성택·김경희 참석) 등 각종 행사를 진행 · 조선로동당 설립 67돌을 맞아(당창건일 10.10).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현영철 차수 → 대장 강등 식별), 모란봉악단공연 등 경축행사 진행 및 김정은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6 ~10일/ 『조선중앙방송』, 2012년 10월 6 ~10일/ 『조선중앙TV』, 2012년 10월 6 ~10일/ 『로동신문』, 2012년 10월 6 ~10일
2012. 10.9	대외	국방위 대변인 성명	우리측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비난하여 일본, 괌, 미국 본토도 명중타격권에 있다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9일
2012. 10.9/ 12/13	대외	일본 교도 통신사 대표 방북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9, 12, 13일
2012. 10.10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비난하면서 ‘우리도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0일
2012. 10.10	대외	외무성 대변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미국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0일
2012. 10.12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통령의 “적의 도발 억제”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2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0.12	대외	-	제67차 유엔총회 6위원회에서 주한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2일
2012. 10.18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중복세력실체 표준교안” 배포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8일
2012. 10.19	대남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사령부 공개 통고장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 “조준격파”, “군사적 타격” 등으로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19일
2012. 10.20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우리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시 NLL 고수 발언을 비난하며 NLL을 불법 유령선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0일
2012. 10.20	대외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우리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시 NLL 고수 발언을 비난하며 NLL을 불법 유령선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0일
2012. 10.22	대내	내각	최영림 총리 참석 하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3분기 경제계획 총화 및 4분기 경제중점과업)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2일
2012. 10.25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한미일 고위급협약에 대해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책동”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5일
2012. 10.25	대외	외무성 대변인	美 국무성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북관련 발언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5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0.26	대남	조국통일 연구원 고발장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을 잊지 말고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선동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6일
2012. 10.27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한미의 “북한 도발 대응태세”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7일
2012. 10.28 ~30	대내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설립('52.10.28) 60돌과 관련하여 보고대회, 연회, 동상 제막식, 모란봉악단공연 등을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8 ~30일/ 『조선중앙방송』, 2012년 10월 28 ~30일/ 『평양방송』, 2012년 10월 28 ~30일
2012. 11.2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우리측이 “북풍조작책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일
2012. 11.3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새누리당의 국민대통합을 ‘보수대연합’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3일
2012. 11.4	대내	-	당 정치국 확대회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조직)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4일
2012. 11.8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통일분야 공약(11.5 발표)에 대해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8일
2012. 11.10	대외	조선신보 시론	‘오바마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	『조선신보』, 2012년 11월 10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1.15	대남	직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우리측 노동자들에게 “반 이 ○○, 새누리당 투쟁의 기 수, 선봉대가 되어 보수패당 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 등으로 선동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15일
2012. 11.1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의 “北 대 선개입” 발언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16일
2012. 10.27 ~ 11.18	대내	-	‘어머니날(11.16)’을 맞아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7 ~11월 18일/ 『조선중앙방송』, 2012년 10월 27 ~11월 18일/ 『평양방송』, 2012년 10월 27 ~11월 18일/ 『조선중앙TV』, 2012년 10월 27 ~11월 18일
2012. 11.17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우리측의 연평도 포격 2주년 행사 관련, “연평도 참패를 만회하고 대결의식을 고취 하여 보수정권을 연장하려 는 발악”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17일
2012. 11.17	대내	-	지난 10월부터 중점적으로 진행된 공원 조성 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새로운 평양변영기’ 도래를 선전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17일
2012. 11.22	대남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중통문답	우리 정부의 ‘외국인 대상 금 강산관광 중단 촉구’ 관련,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며, 관광재개를 위해서도 대결 광신자들의 재집권을 허용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2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1.22	대외	유엔총회 제67차 전원회의의 북한대표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은 안 보리 결의보다 우위에 있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해 공 인된 것이라며 각종 실용위 성들을 계속 쏟아낼 것이 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2일
2012. 11.23 ~26	대내	-	전국분주소장회의를 개최 (11.24. 김정은 축하문 전달 및 기념촬영)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3 ~26일/ 『조선중앙방송』, 2012년 11월 23 ~26일
2012. 11.24	대남	조선중앙 통신 보도	통일부 대변인의 금강산관 광 관련 발표를 비난하고 관 광 중단은 이명박정부의 책 임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4일
2012. 11.26		-	전국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 회를 개최(김정은 서한 전달)	2012년 11월 26일
2012. 11.28	대남	로동신문 보도	우리측의 ‘北 대선개입’ 지적 을 비난하면서 ‘누가 대통령 이 되는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6·15, 10·4 선언 이 행 등 남북관계 관련 입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	『로동신문』, 2012년 11월 28일
2012. 11.28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 문답	UN 북한 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사회주의제도를 어찌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정치 모략선전물’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8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1.29 ~30	대외	당	中 공산당대표단(단장: 리젠궈 당 정치국 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北 노동당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김정은을 접견	『조선중앙통신』, 2012년 11월 29~30일
2012. 12.1	대남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박근혜 후보에 대해 ‘대북정책 기본입장’을 질문하면서 ‘리○○패당의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진짜로 그와 차별화되고 변화된 대북정책 공약을 표명’할 것을 요구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일
2012. 12.1	대내	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자체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를 운반로켓 ‘은하-3호’로 평북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2.10~22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발사계획을 공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일
2012. 12.4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독도 봉우리의 일본식 작명 검토’에 대해 ‘용납 못할 주권침해행위’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4일
2012. 12.5	대내	-	전국법무일꾼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5일
2012. 12.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정부가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반공화국국제공조를 실현해보려는 흉책’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6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2.6	대외	-	‘광명성-3호’의 사명과 성능에 대해 보도	『조선신보』, 2012년 12월 6일
2012. 12.9. ~13	대내	-	‘광명성-3호 2호기’와 관련하여 발사시기 연장, 발사, 위성 궤도 진입, 김정은 발사 참관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9~13일
2012. 12.12	대외	외무성 대변인	‘광명성-3호’ 발사 성공과 관련하여 중통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2일
2012. 12.14	대남	적십자회 중앙위 상보	우리 정부가 ‘집권기간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파탄시켰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4일
2012. 12.14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박근혜 후보의 최근 동향 및 北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도발에는 제재해야’)에 대해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최후발악’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4일
2012. 12.15	대내	로동신문 사설	로동신문(12.15)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설을 게재	『로동신문』, 2012년 12월 15일
2012. 12. 16 ~17	대내	-	김정일 사망(11.12.17) 1주기 계기, 중앙(12.16. 김정은 참석, 최룡해 차수 → 대장강등 식별) 및 지방 추모대회 진행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12.17. 김정은·리설주 참석, 김정은, 궁전조성에 기여한 장병·인민들에게 감사문 전달) 등 행사를 진행	『조선중앙TV』, 2012년 12월 16~17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2.18	대외	-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열린 한·미 간 모의훈련에 대해 '미국의 변함없는 북한 적대시정책과 핵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8일
2012. 12.21	대내	-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등을 위해 연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1일
2012. 12.21	대남	조선신보 기사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질의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1일
2012. 12.21	대외	-	나선시에서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를 반공화국적대범죄를 이유로 억류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1일
2012. 12.24	대내	김정은	12월 24일 0시에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1돌을 맞이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4일
2012. 12.25	대외	-	美 국가정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5일
2012. 12.26	대내	-	사회주의 헌법 발포 40돌과 관련하여, 중앙보고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6일
2012. 12.27	대남	로동신문 기사	12월 27일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올한해 남과 북, 해외에 6·15, 10·4 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이 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북남공동선언 기치 밑에 단결'할 것을 주장	『로동신문』, 2012년 12월 27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2. 12.27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2012 국방백서의 북방한계선 내용 관련 ‘용납 못할 도발 평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8일
2012. 12.29	대내	-	김정은 최고사령관 1돌 계기 중앙보고대회를 개최(김정은·장성택·김경희 불참)	『로동신문』, 2012년 12월 30일
2012. 12.30 ~ 2013. 1.3	대내	-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관련하여 기념사진 촬영·연회 개최·‘김정일 훈장’ 수여 정령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30~2013년 1월 3일
2012. 12.31	대외	-	일본의 이동식 조기경계 레이더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31일
2013. 1.1	대내외	-	김정은 육성 신년사 발표(김일성 사후 최초,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는 창조·변혁의 해’ 선포)	『조선중앙TV』, 2013년 1월 1일
2013. 1.3	대남	조평통 대변인 성명	대통령의 NLL 고수 발언에 대해 ‘반통일 대결세력’으로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3일
2013. 1.3	대외	-	‘일본의 앞날은 과거청산에 달려있다’며 남경대학살·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3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5	대남	민화협 대변인	대통령의 NLL 고수 및 주요 인사 발언에 대해 '대결정책 을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려 는 위험한 심보'라고 선동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5일
2013. 1.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외교안보수석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관련 발언 대해 '이○○ 패당의 체면을 세우 고 새 집권세력에게 못을 박 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6일
2013. 1.7 ~10	대외	-	美 구글 대표단 북한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7~10일
2013. 1.9	대외	-	북한과 중국 정부는 경제·무 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 차회의를 1.9일 평양에서 진 행하고 경제기술협조에 관 한 서명에 조인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9일
2013. 1.14 ~15	대남	-	1월 14~15일 로동신문을 통 해 이명박정부의 국정성과 보고서 발간에 대해 '현실을 가리우고 체제통일을 실현 하려는 망동', '남북관계를 파국상태에 빠뜨린 주범'이 라고 비난	『로동신문』, 2013년 1월 14~15일
2013. 1.14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추 진 동향 관련 '북남사이의 체 제대결을 고착시키는 대결 악법'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2013. 1.14	대외	외무성 비망록	외무성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비망록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17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7일
2013. 1.18	대내	-	‘당세포 비서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8일
2013. 1.19	대내	내각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최영림 주재, 경제계획 수행정형총화·신년사 관철 대책 등)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9일
2013. 1.23	대내	-	‘청년동맹 제49차 전원회의’ 및 ‘직업총동맹 제72차 전원회의’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3일
2013. 1.23	대외	외무성	‘UN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3일

〈표 2〉 3차 북핵실험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1~2월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24	대남	-	1월 24일 중앙방송을 통해 탈북후 재입북한 김광호 부부와 고정희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남한사회를 ‘불법무법의 사회’, ‘황금만능의 사회’, ‘악의 세상’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4일
2013. 1.24	대외	국방위원회	‘UN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4일
2013. 1.25	대남	조평통 성명	UN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대해 “남조선괴뢰패당이 이번 결의 조작놀음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며 “남북비핵화 논의 중단”,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 등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5일
2013. 1.26	대남	조선중앙통신 보도	우리 언론의 김정은 성형수술 의혹에 대해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 모략소동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6일
2013. 1.26	대내	김정은	김정은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이후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6일
2013. 1.26	대외	로동신문 정론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정론을 게재	『로동신문』, 2013년 1월 26일
2013. 1.27	대내	-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세계 비핵화 실현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 없음,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표명 등)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7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28 ~30	대내	당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1.28-29)(3차대회 이후 5년3개월만 개최, 김정은이 개회사·연설·폐회사를 낭독한 행사는 처음).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 개최예고(1.18), 정치국결정서(당세포 비서대회를 제도화할데 대하여) 채택·공표(1.23)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8~30일
2013. 1.28	대외	조선중앙통신 논평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논평을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8일
2013. 1.29	대남	조선중앙통신 논평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참여 등을 거론하며, ‘동족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9일
2013. 2.2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들의 대북제재 관련 언급에 대해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고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것”고 비난하며 “최후의 판가리대전”, “보복의 불벼락” 등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일
2013. 2.2	대외	외무성 대변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관련하여 중통 기자의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일
2013. 2.3	대내	당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지도 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군력강화·조직문제·‘안전·자주권 위한 중대한 결론’ 도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3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2.5	대내	인민무력부	‘일당백 구호 제시 50돌’ 관련 ‘인민무력부 보고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5일
2013. 2.6	대남	민족경제 협력위 대변인 담화	우리측 개성공단 반입물자 관련 조치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며 ‘특혜철회, 군사지역으로 재설정’ 등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6일
2013. 2.9	대남	조국통일연 구원	조국통일연구원 10대 죄행록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반통일체제대결’, ‘핵, 미사일 소동’, ‘대화외 교류 말살’ 등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9일
2013. 2.11	대내	당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2.11. 정치국결정서 ‘공화국 창건 65돌·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하여’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2013. 2.12	대외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2013. 2.14	대남	로동신문 보도	3차 핵실험 제재 동향과 한미 군사훈련 등에 대해 “北을 겨냥한 핵선제공격 훈련”이라고 비난하며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할 것’, ‘강도높은 2,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 취할 것’ 등 위협	『로동신문』, 2013년 2월 14일
2013. 2.14	대내	-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축하하기 위한 평양시 군민연환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4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2.15	대내	-	김정은 생일 71돌 관련 행사 (최고사령관 명령 제29호 2.13. 軍 지휘성원 군사칭호 수여 발표), 중앙보고대회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만경대혁명학원 동상 제막식·김정일 이름 새긴 시계 표창 수여식 참석, 리설주 1.1일 이후 45일만에 공식행사 등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4 ~15일
2013. 2.16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중통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법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 발언과 관련, ‘체제변화설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며, 이명박정부가 ‘6·15, 10·4 공동선언과 화해·교류의 싹을 짓밟아왔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6일
2013. 2.19	대외	유엔 북한 대표	‘UN헌장 및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9일
2013. 2.21 ~22	대내	김정은	제323부대를 방문한데 이어, 제526대연합부대 전술 연습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1/ 22일
2013. 2.22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방송(2.18 모닝뉴스)의 ‘중국 북핵실험 반대시위’ 보도 관련 “중북 관계를 이간질하는 모략책동”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2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2.23	대남	판문점 대표부 대표 명의 전화통지문	판문점대표부 대표(박림수)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강행은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 ‘그 순간부터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이 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3일
2013. 2.23 ~26	대내	김정은	항공 및 반항공군·제630대 연합부대·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	『평양방송』, 2013년 2월 23 ~26일
2013. 2.26	대남	평양방송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21세기 을사오적’이라고 하며,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와 대북정책을 비난	『평양방송』, 2013년 2월 26일
2013. 2.27	대외	-	북한 대표,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일
2013. 2.27	대내	-	‘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29년만에 전국규모 개최, 김정은저작 전달)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8일

〈표 3〉 긴장고도화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3월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1	대외	김정은	북·미 농구팀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한데 이어 前 NBA 선수단 일행과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일
2013. 3.5	대남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합동군사훈련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소동이며, 가장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조성된 험악한 정세 관련 3가지 중대조치를 내외에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5일
2013. 3.7	대내	-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연환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2013. 3.7	대외	외무성 대변인 성명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2013. 3.8	대남	조평동 대변인 성명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2013. 3.8	대내	김정은	서남전선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 방어대 및 무도 방어대를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2013. 3.9	대내	김정은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의 양궁 경기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9일
2013. 3.9	대외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9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12. ~14	대내	김정은	월내도 방어대 및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한데 이어,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및 포병들의 실탄사격훈련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2 ~14일
2013. 3.13	대남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3군 합동입관식 축사를 인용하며 새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3일
2013. 3.14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당국자 발언과 언론 보도를 비난하며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4일
2013. 3.14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정전협정 백지화’ 및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발언’과 관련하여 중통기자의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4일
2013. 3.16	대외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6일
2013. 3.18	대내	-	‘전국경공업대회’를 진행(김정은 연설, 경공업 원료·자재 국산화 등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9일
2013. 3.18	대남	조평통 서기국 백서	조평통 서기국 백서를 발표하여 우리 당국의 유엔 北 인권조사기구 설립 논의 관련하여 ‘미국의 식민지 1번지로 전락되어 주권을 빼앗긴 남한은 인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20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답화	‘美 카터 국방부 부장관 방한 및 B-52폭격기 비행훈련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0일
2013. 3.20	대내	김정은	‘무인타격기’ 및 ‘지대공미사 일’ 훈련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0일
2013. 3.20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B-52 폭격기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참가’와 관련하여,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0일
2013. 3.21	대외	최고사령부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키 리졸브·독수리연습’과 관련하여,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1일
2013. 3.24 ~26	대내	김정은	제1973군부대·제1501군부 대 시찰, 부문사업 지도 및 제324·287연합부대와 해군 587연합부대의 상륙·반상륙 훈련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4 ~26일
2013. 3.25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5일
2013. 3.26	대외	외무성 성명	미국의 ‘B-52’ 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외무성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2013. 3.26	대내	최고사령부 성명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사령부 성명 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27	대남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사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2013. 3.27	대남	남북장성 급회담 북측단장	남북 통신선 단절 및 서해지 구 남북관리구역 군통신 연 락소 북측 성원들의 활동중 지 통보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2013. 3.27	대남	조평통 서기국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에 대 해 비난 보도를 실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2013. 3.28	대외	범민련 남한·북한· 해외 본부	유엔 제재결의 등과 관련하 여 공동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8일
2013. 3.28	대내	-	‘全軍 선전일꾼회의’를 개최 (김정은 연설, '08.3 19차 대 회 후 5년만에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8일
2013. 3.29	대내	김정은	전략로케트군 임무수행 관 련 작전회의를 소집한데 이 어 타격계획을 검토·비준(임 의의 시각 美)본토 등 타격 을 위한 사격대기 지시 및 전 략로케트 기술준비 공정계 획서 최종수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2013. 3.29	대내	-	최고사령부 성명을 지지하 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2013. 3.30	대남	정부·정당· 단체 특별성명	‘북남관계 전시상황 돌입’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3.30/ 4.4	대남	중앙특구 개발 지도총국 대변인 및 조평통 대변인	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 자 철수 등을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4월 4일
2013. 3.31	대내	당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 (김정은 체제 공식 등장 이 후 첫 소집, 경제·핵무력 건 설 병진노선 채택, 박봉주 정치국위원, 현영철·김격식 ·최부일 정치국 후보위원으 로 보선 등)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2013. 3.31	대내	김정은	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 성 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표 4〉 긴장조절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4~5월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4.1	대내	내각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헌법개정, ‘금수산태양궁전법’·‘우주개발법’ 채택,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한 법’, ‘우주개발국을 내움에 대하여’ 채택, 박봉주 내각총리, 김격식·최부일 국방위 위원)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2013. 4.2	대내	원자력총국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관련,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2013. 4.4	대외	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미국의 핵타격수단’과 관련, ‘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4일
2013. 4.8	대남	김양건 당 비서 중대조치 담화	김양건 당 비서 중대조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및 잠정 중단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8일
2013. 4.8	대내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0돌 중앙보고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8일
2013. 4.9	대남	조선기자 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문 발표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남한의 보수 언론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9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4.9	대외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현재 조성된 정세와 관련,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9일
2013. 4.11	대내	-	'김정은 당·국가 최고수위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 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1일
2013. 4.12	대내	김정은	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모란봉악단 파견 및 화선공 연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2일
2013. 4.14	대내	대내	김일성 생일 101돌 관련, 중 앙보고대회를 개최(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음악 회 관람 등)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4일
2013. 4.14/ 18	대남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답변, 국방위 정책국 성명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 문 답변, 국방위 정책국 성 명 등을 통해 4.11 우리측 대화제의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4/ 18일
2013. 4.16	대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존엄을 훼손한 만행에 대해 보복행동을 개시한다 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6일
2013. 4.16	대외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대화 제의와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6일
2013. 4.17	대남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 비망록	우리측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7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4.22	대내	내각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병진노선 관철, 전국 경공업대회 제시과업 관철 등)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2일
2013. 4.22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한·미 대화제의와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2일
2013. 4.24 ~26	대내	-	인민군 창건 81돌을 맞이하여, 중앙보고대회·인민군 예식·금수산태양궁전 방문·경축연회 등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4 ~26일
2013. 4.26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우리측 대화제의를 거부하면서, 북한이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6일
2013. 4.27	대내	김정은	개업을 앞둔 해당화관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7일
2013. 4.27/ 5.2	대외	-	미국 공민(케네스 배)에 대한 예심을 종료하고 노동교화형을 언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7일/ 5월 2일
2013. 4.29 ~30	대남	-	로동신문 보도 등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비난	『로동신문』, 2013년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2013. 4.30	대내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남자축구 결승전을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2013. 4.30	대내	김정은	최근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체육지도 일꾼들을 만남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2013. 4.30	대내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양각도축구경기장을 돌아봄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5.2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 당집행을 비난하면서 미군 철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2013. 5.2	대내	김정은	5·1절 즈음 리설주와 함께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 경기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2013. 5.2	대내	김정은	5·1절 즈음 인민보안부를 방문하고 제2219 군부대를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2013. 5.4	대내	김정은	5·1절에 즈음하여 인민극장 에서 은하수음악회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4일
2013. 5.5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은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우리의 대화제의 (4.11, 4.25)를 비난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을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5일
2013. 5.5/7	대내	김정은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 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를 돌아보고, 조국해방전쟁승 리기념관 건설장 등 인민군 대에서 건설중인 여러 대상 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5/7일
2013. 5.5/9	대외	외무성 및 최고재판소 대변인	배준호(케네스 배)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전복 음모죄 를 스스로 인정하여 15년 노 동교화형을 언도하였으며, 미국의 누구도 초청할 계획 이 없고, 교화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점 등을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5/9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5.7	대외	외무성 대변인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침략행위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변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7일
2013. 5.7	대남	조선인민군 서남전선 사령부 보도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비난하며, 즉각적인 대응타격 등을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7일
2013. 5.8	대내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60돌 경축공연 준비 중인 은하수 관현악단 창작가·예술인을 만남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8일
2013. 5.10	대남	조평통 대변인	조평통 대변인 기자 질문 대답 형식으로 한미정상회담 결과 및 대통령의 발언 등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0일
2013. 5.10	대외	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관련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실을 오도하는 험담’이라며 ‘누구의 변화를 칭얼거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릇된 관점에서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0일
2013. 5.13	대내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3일
2013. 5.13	대내	김정은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건립될 김일성 영상작품 창작 사업을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3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5.14/ 17	대내	김정은	새로 건설된 강태호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및 ‘인민군 2월 20일 공장’을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4/ 17일
2013. 5.14. ~17	대외	-	이지마 이사오 내각 위기관리 특별 담당 참여의 방북 및 면담 사실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4~ 17일
2013. 5.15	대남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우리측 대화제의를 비난하고, 근본 문제 해결 및 대결 책동 중단을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5일
2013. 5.15	대남	로동신문 보도	“한미정상회담은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	『로동신문』, 2013년 5월 15일
2013. 5.18 ~24	대남	로동신문 보도	로동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인권 유린상 등에 관해 보도	『로동신문』, 2013년 5월 18~24일
2013. 5.19 ~20	대내	김정은	김정은의 평양시 묘향산 등 산소년단야영소 시찰,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 인민군 제405 군부대 시찰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9~20일
2013. 5.22 ~25	대외	-	김정은의 특사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 및 시진핑 주석 등과의 면담 사실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2~ 25일
2013. 5.22	대외	외무성 대변인	美 국무부의 ‘2012년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데 대하여 “비열한 적대행위이며 “정치적 목적에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2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5.24	대남	조평통 대변인	기자 질문 대답 형식으로 박 근혜 대통령의 미국 전략국 제문제연구소 면담(5.23) 내용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4일
2013. 5.25	대남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지난 5월 23일 대통령 - 미 국 전략문제연구소 면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방위원 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 하여 우리 대통령에 대해 실 명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5일
2013. 5.26 ~31	대내	김정은	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 가공공장 현지지 도, 마식령스키장 현지지 도, 해군 제291군부대 시찰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6 ~31일
2013. 5.28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6·15 남북공동행사 참가 허 용 및 개성공단의 기업가 방 문 승인 등을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8일
2013. 5.28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선제적 비핵화 불가 관련 논 평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8일

〈표 5〉 긴장완화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6~9월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6.1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美 국무성의 ‘대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발언 관련 논평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일
2013. 6.1 ~5	대내	김정은	마전 해수욕장, 성천강그물 공장·수지관직장, 인민군 제549군부대 돼지공장 현 지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 ~5일
2013. 6.4	대내	김정은	6.4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호소문’(「마식령속도를 창 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 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 를 열어나가자」)을 보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2013. 6.6	대내	-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를 김정은 참석 하에 개최(‘06 년 이후 7년 만에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6일
2013. 6.6	대남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 등 을 고려하여” 당국 간 회담 을 포함한 중대입장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6일
2013. 6.7	대남	조선신보	6월 6일 북한의 중대제안이 통일과 평화변명을 위한 용 단임을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7일
2013. 6.8. ~14	대내	김정은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지도, 평양국제축구학교·농라인 민체육공원 시찰, 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 등 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8 ~14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6.11	대외	조선중앙 통신 논평	日 방위상의 북한 위협 발언 관련, ‘군국화책동을 합리 화해 보려는 술책’이라며 논평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1일
2013. 6.13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당국회담이 남측의 방 해와 파탄 책동으로 무산되 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3일
2013. 6.14	대남	6·15 공동 선언 실천 남북해외측 위원회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4일
2013. 6.15 ~20	대내	김정은	대관유리공장, 유평혁명사 적지,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1월18일기계중 합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 기업소 현지지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5 ~20일
2013. 6.16	대외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 발표	‘북-미 당국 간 고위급회담’ 을 통해 ‘現 한반도 긴장국 면 해소문제 등을 협의’하 자고 제안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6일
2013. 6.18	대내	-	김정일 당사업 개시 49돌 중앙보고 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8일
2013. 6.18 ~22	대외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및 외교부문 전략대화 관련 사실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8 ~22일
2013. 6.20	대남	조선중앙 통신 논평	6.25는 미국에 의해 계획된 북침전쟁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0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6.21	대외	유엔주재 북한대사	6.21일 유엔 본부에서 한국 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 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기 자회견을 실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7일
2013. 6.22	대남	조선중앙 통신 보도	남북당국회담 파탄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2일
2013. 6.22 ~24	대내	김정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강 계정밀기계종합공장 현지 지도, 자강도 노동자들과 모란봉악단 공연관람 및 장 자강공작기계공장 현지지 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2 ~24일
2013. 6.26 ~7.9	대외	-	쿠바(6.26~7.3, 김격식), 중국(7.2~7.7, 김성남), 러시아(7.2~7.9, 김계관) 등 우방국과의 외교활동을 강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6 ~7월 9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6월 26 ~7월 9일
2013. 6.27	대남	조평통 대변인 진급 성명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 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7일
2013. 6.29 ~7.3	대내	김정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 일 공장, 신흥기계공장, 인 민군 제851군부대 포사격훈 련,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인민군열사모, 조국해방전 쟁승리기념관, 강동정밀기 계공장 현지지도 등을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9 ~7월 3일
2013. 6.29 ~7.6	대외	북 대표단 (단장: 외무상 박의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에 참석하기 위해 브루나이 를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9 ~7월 6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7.1	대남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와 문답	방중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 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일
2013. 7.1 ~4	대외	몽골 정보기술· 우편 및 통신국 대표단 방북	‘정보기술분야 교류와 협조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시설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4일
2013. 7.6 ~9	대외	윌프리드 렘케와 일행 방북	‘윌프리드 렘케’ 개발과 평 화를 위한 지역담당 유엔사 무총장 특별고문과 일행이 방북하여 마식령스키장 건 설장 등 체육시설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6~9일
2013. 7.8	대내	김정은	김일성 사망 19돌 관련, ‘금 수산태양궁전’을 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8일
2013. 7.10	대남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 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2차 남북당국실무회담과 관련 하여 남측의 성의 없는 태도 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0일
2013. 7.11	대내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1일
2013. 7.10	대외	서세평 유엔사무국 상임대표 기자회견	서세평 제네바 유엔사무국 주재 북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을 실시하여 ‘미국의 주 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 및 ‘미국이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할수록 자위적 핵무장 력을 더욱더 보강해 나갈 것’ 등을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3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7.14	대내	내각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마식령 속도 호소문 관철)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4일
2013. 7.15 ~19	대외	헤르베르트 로일 단장 외 대표단 방북	헤르베르트 로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 한 반도관계담당분과 대표단이 방북하여 회담을 실시하고 시설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5 ~19일
2013. 7.15 ~19	대외	르 푸레브수렌 일행 방북	르 푸레브수렌 몽골대통령 민족안전 및 대외정책고문 일행이 방북하여 회담을 실시하고 시설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5 ~19일
2013. 7.16	대내	김정은	인민군 제534부대 산하 버섯공장, 아동병원·구강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6일
2013. 7.18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와의 질의 답변	‘청천강호 역류 선원 및 배의 출항’을 요구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8일
2013. 7.19	대남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답변	조선일보의 7월 18일 보도는 공화국 최고존엄에 대한 모략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9일
2013. 7.23 ~28	대내	-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중앙보고대회, 군 열병식 등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 (7.27 열병식은 20년만, 중요행사 시 리위원장오 부주석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23 ~28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7.25 ~29	대외	중국공산당 대표단 방북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 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 산당 대표단이 방북하여 김 정은과 면담 등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25~29일
2013. 7.25	대외	시리아 대표단 방북	압둘라 알 아흐마르 이랍사회 부총당 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시리아 대표단이 방북하 고 김정은과 면담을 실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25일
2013. 7.2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의를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26일
2013. 7.26. ~29	대외	시리아 대표단 방북	압둘라 알 아흐마르 이랍사 회부총당 부총비서를 단장 으로 하는 시리아 대표단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 여 방북하는 동안 김영남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담화하고 만경대 등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26 ~29일
2013. 7.30. ~8.2	대내	김정은	정전협정 60주년과 관련하 여 '성흥혁명사적지' 방문,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 현 화, 전쟁노병·해외동포 등 과의 사진촬영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30 ~8월 2일
2013. 7.31	대내	김정은	축구·양궁경기 관람 및 동 아시아컵에 참가한 선수들 을 접견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31일
2013. 8.2 ~5	대외	김영남 최고인민회 의 상임 위원장	이란을 방문하여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관계자들 과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 ~5일
2013. 8.3	대남	로동신문 보도	우리정부가 범민련 남측본 부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	『로동신문』, 2013년 8월 3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8.7	대남	조평통 특별담화	8월 14일 제7차 개성실무회담 개최를 제외하며, 개성공단 출입 및 신변 보장 등을 천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7일
2013. 8.7 ~9	대내	김정은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평양체육관,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7~9일
2013. 8.10 ~15	대외	북한 정부대표단	박의춘 외무상을 대표로 하는 북한 정부대표단은 기니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10 ~15일
2013. 8.11 ~15	대내	김정은	‘5월 11일 공장’,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을 방문하고, 남자 축구 경기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11 ~15일
2013. 8.14	대남	조선중앙 통신 보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당국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고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14일
2013. 8.17 ~24	대외	북한 정부대표단	박의춘 외무상을 대표로 하는 북한 정부대표단은 지난 주 기니에 이어 베냉·민주콩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17 ~24일
2013. 8.20	대남	조평통 특별담화	UFG 훈련은 남조선 당국의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0일
2013. 8.20	대내	김정은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0일
2013. 8.29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UFG 훈련을 비난하고,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구상한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9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8.24	대내	스키협회 대변인 담화	관광설명회 개최 및 스키협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4일
2013. 8.24 ~26/ 29	대내	-	선군절 53돌 관련 중앙보고대회 개최(김정은 담화 발표, 8·26 국가적 명절로 지정),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전투함 기동훈련 지도(김정은),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8.26. 전투력·방위력 강화 문제, 조직문제 토의), 인민무력부 경축연회 개최, ‘선군절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 정령 발표 등을 함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4 ~26일/ 『로동신문』, 2013년 8월 29일
2013. 8.26 ~30	대외	중국 우다웨이 일행 방북	우다웨이 중국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계관 北 외무성 제1부상과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6 ~30일
2013. 8.31	대외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대변인은 중통기자와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美 전략폭격기 출격으로 인하여 로버트킹의 방북을 불허하였다고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31일
2013. 9.3	대내	김정은	장재도·무도 방어대, 애국돌공장, 월내도 방어대, 룡연바닷가 양어사업소를 현지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3일
2013. 9.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비난하고, 남북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6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9.7	대외	김정은	전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과 면담하고 농구경기를 관람하였으며 만찬을 실시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7일
2013. 9.8 ~10	대내	-	정권수립일(9·9) 65돌 관련, 중앙보고대회, 노동적위군 열병식(박봉주 연설, 7.27이후 45일만에 또다시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8 ~10일
2013. 9.12 ~16	대내	-	2013년 청년·성인급 아시아컵 및 클럽 역기 선수권 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12 ~16일
2013. 9.13	대남	로동신문 사설	‘6·15·10·4 선언 이행을 통한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을 강조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조국 통일’ 등을 주장	『로동신문』, 2013년 9월 13일
2013. 9.15/ 18	대내	김정은	평양체육관, 농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등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15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18일
2013. 9.18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국방부장관의 발언 관련 ‘북한이 4세대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등의 험담은 남북관계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18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18일/ 『로동신문』, 2013년 9월 18일
2013. 9.20	대외	김계관 일행 방중	김계관 北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은 중국을 방문하여 주요 당국자와 토의를 실시하고 「9.19공동성명 채택 8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	『로동신문』, 2013년 9월 20일

〈표 6〉 정책조을 국면 북한당국의 행태: 2013년 9~12월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9.21	대남	조평통 대변인 성명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연기하면서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통일 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21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21일/ 『로동신문』, 2013년 9월 21일
2013. 9.23 ~24	대내	김정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구강병원, 5월1일경기장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23 ~24일
2013. 9.23 ~25	대외	몽골 정부 대표단 방북	‘할트마 바톨가’ 몽골 공업 및 농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정부 경제무역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회』 제9차 회의를 실시하고 의정서를 체결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23 ~25일
2013. 9.26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남성을 사살한 사건(9.16)과 관련하여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26일/ 『평양방송』, 2013년 9월 26일
2013. 9.29/ 10.6	대내	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주택 건설장, 옥류아동병원 건설장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29일, 10월 6일
2013. 9.30	대내	-	재입북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30일
2013. 10.3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반통일적 문서, 체제 대결 각본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3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3	대외	박길연 연설	외무성 부상 박길연은 유엔 총회 제68차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완전 철폐, 유엔군 사령부 철폐 및 대북 적대시 정책 청산 등에 대하여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일
2013. 10.4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며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4일/ 『평양방송』, 2013년 10월 4일
2013. 10.7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한 것과 관련, ‘한반도에서 핵 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7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7일
2013. 10.7	대내	-	김정일 총비서 추대 16돌을 맞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7일
2013. 10.8	대외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8일
2013. 10.9	대외	외무성 담화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외무성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2013. 10.9	대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답변	‘국가 원수 지칭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北)에 대한 비방중상놀음을 중지하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해 실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로동신문』, 2013년 10월 9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9 ~11	대내	-	당 창건일 68돌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주택 준공식 및 기념사진 촬영,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 리영길 총참모장 공식 확인),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전국도대항 체육경기 등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 ~11일
2013. 10.10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최고존엄과 관련되는 중대 문제'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배후로 대통령을 지목, 실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0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10일
2013. 10.11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관련,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현실적 가동'이라며 '최고사령부 명령에 따라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1일
2013. 10.12	대외	국방위 대변인 성명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2일
2013. 10.13 ~20	대내	김정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시찰 및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및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3 ~20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13 ~15	대내	내각	류강구강병원·옥류아동병원 개원식 및 문수물놀이장 준공식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3 ~15일
2013. 10.14	대남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관련 ‘동남아시아를 행각하여 우리(北)를 못되게 헐뜯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4일/ 『평양방송』, 2013년 10월 14일
2013. 10.16	대내	내각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조직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6일
2013. 10.17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전체위원회 발언 관련 실명 비난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7일/ 『로동신문』, 2013년 10월 17일
2013. 10.17 ~29	대내	-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7 ~29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17 ~29일
2013. 10.21	대내	내각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석탄철강재 생산 확대, 농업·경공업 부분에 집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1일
2013. 10.21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국방부장관·합참의장 발언(‘선제타격’, ‘철저한 응징’, ‘대북심리전 능력 강화’ 등) 관련 ‘단 한 점의 도발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온 남조선 땅이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1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23	대외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3일
2013. 10.24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검토와 관련, ‘北과 연계하여 진보당을 해산하려는 것은 용납 못할 도발,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하며 ‘南은 반대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책동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4일
2013. 10.25 ~31	대내	-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10.25. 동시개최는 18년만, 김정은 연설) 및 이후 관련 행사들 개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 ~31일/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25 ~31일/ 『평양방송』, 2013년 10월 25 ~31일
2013. 10.25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화 문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서 ‘최고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국가’로 北을 지정한데 대하여 자주권과 생존권의 침해라고 반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일
2013. 10.26	대남	조선사회 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담화	‘남조선은 정치적 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전히 말살된 정치 무풍지대’라고 비난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26일/ 『평양방송』, 2013년 10월 26일
2013. 10.26	대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고발장	우리 정부를 ‘제2의 유신정권’이라고 매도, 비난	『조선중앙방송』, 2013년 10월 28일/ 『평양방송』, 2013년 10월 28일

날짜	분야 (대내외/ 대남)	행위 주체	내용	출처
2013. 10.28 ~31	대외	몽골 대통령 방북	몽골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등과 회담을 실시하고 협정 등을 체결하였으며, 여러 곳을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8 ~31일
2013. 10.31	대남	조평통 서기국 보도	故 박정희 대통령 제34주기 추도식 관련 ‘이전 독재자를 찬양하는 놀음’이라며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1일
2013. 10.31	대남	조선평화 옹호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한국형미사일방위체계 구축 관련 발언에 대해 국방부장관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1일
2013. 10.31	대외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화 의 문답	美 국무장관의 발언(北은 불량배 국가)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 철회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 불가’를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1일
2013. 11.11	대내	군	제4차 적공 일꾼 열성자대회(김정은 참여)	『조선중앙통신』, 2013년 11월 11일
2013. 11.21	대내	국가안전 보위부 (보위부)	제2차 보위일꾼 대회 개최 (1차 개최는 93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1월 21일
2013. 12.8	대내	당	당 정치국 확대회의(장성택 해임·칭호박탈·출당·제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9일
2013. 12.12	대내	보위부 특별군사 재판부	장성택 ‘국가전복음모죄’, 공화국 형법에 따라 장성택 사형·즉시 집행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13일
2013. 12.25	대남	조평통	“박근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란 제목의 대남 공개질문장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25일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희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근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반공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용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용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2014년 대북정책 추진전략	최진욱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www.kinu.or.kr

